

제1기 폴라니 학교

폴라니와 사회적 경제

2015. 7. 9(목)~8. 20(목)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Karl Polanyi Institute Asia

폴라니와 사회적 경제

교육자료집



- 주 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교육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교육기간: 2015. 7. 9~8. 20 목요일 19:30~21:30(총 6강)

교육과정

■ 일 시 : 2015. 7. 9~8. 20 목요일 19:30~21:30(총 6강)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4층)

일 정	내 용	강 사
1주 7월 9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식 ▶ 1강 폴라니의 생애와 사상 ▶ 오리엔테이션 	홍기빈
2주 7월 16일(목)	▶ 2강 폴라니 사상과 사회적 경제	홍기빈
3주 7월 23일(목)	▶ 3강 폴라니와 협동의 경제학	정태인
4주 8월 6일(목)	▶ 4강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정태인
5주 8월 13일(목)	▶ 5강 실체경제학 대 형식경제학	홍기빈
6주 8월 20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강 현재의 경제위기와 불평등 ▶ 수료식 	정태인

■ 첫 주에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홀(7층)에서 강의를 진행됩니다.

차 례

1강 플라니의 생애와 사상	7
플라니의 생애와 사상: 시장 경제 유토피아와 사회의 발견	9
2강 플라니 사상과 사회적 경제	33
플라니 사상과 사회적 경제: 칼 플라니 해제	35
플라니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56
3강 플라니와 협동의 경제학	67
플라니와 협동의 경제학	69
4강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83
사회적 경제, 그리고 생존가능성	85
협동조합의 기업이론을 위한 메모	101
5강 실체경제학 대 형식경제학	129
제도화된 과정으로서의 경제	131
6강 현재의 경제위기와 불평등	145
불평등과 소득주도성장: 다원적 거시모델	147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적 경제	169

1

폴라니의 생애와 사상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폴라니와 사회적 경제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19:30~21:3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홀(7층)

주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교육기간: 2015. 7. 9(목)~8. 20(목)

폴라니의 생애와 사상

- 시장 경제 유토피아와 사회의 발견 -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자기 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적나라한 유토피아이다.”

“서구인의 의식을 구성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이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 자유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사회에 대한 깨달음이다.”

《거대한 전환》이 출간된 1944년 폴라니의 나이는 이미 57세였다. 다른 학자들 같으면 지적인 창조성에 있어서 황혼으로 접어들 연배에 폴라니는 그의 첫 저작이자 대표작을 출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저작은 4개의 나라에 걸쳐 2번의 망명을 겪고 정당 지도자, 저널리스트, 노동자 교육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아온 폴라니의 일생에 걸친 고민과 연구와 사색이 모두 어우러져 나온 강렬한 저작이며, 또 폴라니가 향후 20년간 정력적으로 몰두했던 “실체 경제학”이라는 혁신적인 지적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된 저작이기도 하다. 따라서 먼저 이 저서가 나오기까지의 폴라니의 일생과 저작을 간단히 훑어보며 《거대한 전환》을 형성한 중심적 문제의식이 나오게 된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갈래로 형성된 문제의식들이 어떻게 《거대한 전환》 안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장 유토피아와 사회의 발견이라는 《거대한 전환》이 어떻게 그의 만년의 이후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1. 《거대한 전환》의 형성: 자유, 시장, 사회

1) 19세기로부터: 자유라는 이상

폴라니는 아버지 미할리 폴라섹(Mihály Pollascek)과 어머니 세실 볼(Cecile Wohl)의 사이에서 세 번째 아들로 1886년 10월 21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수도 비엔나에서 태어났다. 누군가 1899년에 태어난 하이에크를 부른 이름처럼 그도 “마지막 19세기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태어난 연도뿐만이 아니라 가족 환경과 그가 지적으로 성장한 배경이 19세기 유럽 문명의 핵심이라 할 “자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폴라섹은 북부 헝가리(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쥐리히의 공과 대학과 스코틀랜드 유학을 거치면서 철도 설계의 기술 공학 교육을 받고 쥐리히 기차역 설계의 책임을 맡는 등 촉망받는 철도 기술자가 된다. 폴라섹의 스코틀랜드 시절은 그에게 일생 동안 유지되는 인격 형성의 근본적인 계기였다고 한다. 검소하고 정직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매사에 원칙으로부터 한 치의 타협이 없는 고전적인 칼뱅주의의 품성을 가지고, 개인의 내면적 양심과 자유 그리고 그를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과 연구와 토론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성격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윽고 성공한 철도 사업가 및 기술자가 되어 비엔나로 돌아오지만 당시 성장하던 비엔나에서 새롭게 떠올라 귀족 행세를 하려드는 “향신(gentry)”과 졸부(nouveau riches) 계급의 속물적인 문화를 깊이 경멸하여, 이에 대한 반감으로 비록 자식들은 모두 칼뱅주의로 개종시키고 성(姓)도 폴라니(polányi)로 바꾸지만 자신 스스로는 유대인식 이름인 ‘폴라섹’과 유대교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했다고 한다. 가정교육에 있어서도 스파르타식 신체 훈련과 소박한 식사, 고전 및 도덕 교육으로 자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가르쳤다고 한다. 덕분에 폴라니 형제자매들은 모두 어렸을 때에 영어, 독일어, 불어는 물론 그리스어와 라틴어 고전에도 능통하게 되었다.

어머니 세실은 러시아계의 유대인으로서 자유분방하고 사교적이며 상상력이 넘치는 보헤미안적인 성품의 소유자로서 남편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세실은 새로운 사상과 흐름에 관심을 가진 이로서 (이미 1910년대에 프로이트 심리학에 큰 관심을 가졌다), 사상가, 혁명가, 문인 및 예술가들을 항상 집으로 불러 함께 식사와 토론을 즐기고 후원하면서 “세실 아줌마(Cecile Mama)”라는 이름으로 헝가리의 좌파 지식인들과 운동가들 사이에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강연이나 저술은 물론 이후 아동 교육의 혁신을 위해 실험적인 유치원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작가 아더 케슬러(Arthur Kestler)의 자서전에도 이 유치원에 다녔던 회상이 나온다.) 다방면의 관심과 활동을 보인 이였다. 특히 세실은 당시 외국으로 추방되거나 망명한 러시아의 혁명가들에 대해 깊은 경모(景慕)를 가지고 긴밀

한 친교를 유지하여, 트로츠키와 라데크 등의 볼셰비키는 물론 나로드니키 등의 인민주의 및 아나키스트 혁명가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내면화하고 있었던 켈빈주의에 입각한 내면의 양심과 도덕적 엄격성 그리고 어머니가 체현하고 있었던 19세기 말의 혁명적 상상력은 얼핏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근대 유럽 문명이 낳은 “자유”라는 이상의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얼굴이며, 그러한 동일성과 모순성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역동성이 19세기까지의 유럽 문명의 정신적 추동력의 본질이기도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의 인격에 체현된 이 두 개의 경향과 이상은 그 모순적인 역동성까지 포함하여 고스란히 어린 칼 폴라니의 인격 및 의식으로 들어온다. 당시 아직도 교권주의(clericalism)와 여러 낙후된 억압적 사회 기제가 누르고 있었던 헝가리에서 폴라니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도덕적 이상주의에 근거한 급진주의의 성향을 보인다(만형이었던 아돌프(Adolf)는 헝가리 최초의 사회주의 학생 조직의 창설자였고, 고등학교 때에 이미 러시아 혁명가들의 저작을 헝가리어로 번역했다).

폴라니도 이미 16세에 형이 창설한 사회주의 학생 조직에 가입하여 독일 사회민주당의 강령과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한다. 하지만 그는 사회민주당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그의 회고처럼 “22세 이후로는 마르크스주의에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¹⁾ 당시의 지배적 형태의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결정론에 입각한 사적 유물론과 물질주의적 유물론 철학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폴라니는 이러한 “과학주의적”인 사회관이 인간의 자유 의지와 도덕적 상상력에 근거한 혁명적 행동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부한 것이다. “진정한 진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라 중력을 뿌리치고 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이라는 것이었다.²⁾ 하지만 폴라니는 지적 사상적으로 낙후되고 사회적으로 억압과 착취가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실에 깊이 분노하여 그가 학생으로 몸담고 있었던 부다페스트 대학의 청년들에게 급진적 행동과 사상의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 대학의 로마법의 권위자인 피클러(Gyula Pikler) 교수가 반동적인 학생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학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인 사회학의 방법론을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던 그의 혁신적인 견해가 전통주의자들과 교권주의자들의 분노를 샀던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칼 폴라니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학생들이 피클러 교수를 방어하기 위해 반동적 학생들과 주먹 싸움을 불사하는 대결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진보적 학생들은 1908년 갈릴레이 서클(Galilei Circle)을 창립하고 칼 폴라니를

1) Ferenc Múcsi, "The Start of Karl Polanyi's Career" in K. Polanyi-Levit and M. Mendell ed., *The Life and Work of Karl Polanyi* (Montreal: Black Rose, 1990) 27p.

2) 그의 동생이었던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는 이러한 경향에서 더욱 나아간다. 유력한 노벨 화학상 후보자였고 (그의 아들 존 폴라니(John Polanyi)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다) 이후 지식 문제를 연구하는 철학자로 전환했던 마이클은 일체의 사회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칼 포퍼(Karl Popper)등과 나란히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주의 사회 사상의 입장을 견지하여 칼 폴라니와 사상적으로 차가운 관계에 섰다고 한다.

초대 의장으로 선출한다.

당시 헝가리의 사회주의 학생 운동이 이미 지리멸렬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가운데 갈릴레이 서클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지적 사상적 정열의 방향을 제시한다. 갈릴레이 서클은 직접적인 정치 조직이 아니었다. “배우라 그리고 가르치라(eppur si muove)”는 motto 그대로 대학 내에서의 혁신적인 사상 운동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도시 하층민들과 농민들에게 교육과 계몽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해체될 때까지 헝가리 도처에서 무수한 강연회를 조직하였다. 인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기 위해 낡은 신조와 사상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플라니의 신념은 청년들의 지식욕을 고무하여 당시 최신의 사상이었던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에른스트 마하(Ernst Mach) 등이 정열적으로 연구되고 토론되었다.³⁾

이렇게 플라니는 “이상주의적 19세기인”답게 어떤 하나의 지적 사상적 입장에 수동적으로 편입되거나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인 도덕과 가치에 근거하여 당대의 여러 지적 사상적 실험과 조류와 적극적으로 조우하는 역동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갖추었다. 또 그 속에서 플라니는 이미 자신을 낳고 기른 19세기 유럽 문명의 이상과 당시에 어지럽게 진행되는 변화 속에서 새로이 모습을 드러내는 20세기의 자본주의 문명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23세라는 어린 나이인 1910년 《20세기(Huszdik Század)》지에 게재했던 짧은 에세이 “우리 이념의 위기(Nezeteink Valsaga)”에는 이러한 인식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19세기 문명의 주요한 이상에는 자유주의자들의 “완전히 인격적 존재로서 계발된 개성과 내면의 자유” 그리고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사회 모순이 해결된 이상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20세기의 집단화된 자본주의는 이 두 가지의 이상을 모두 무너뜨리거나 변질시켜버릴 것이다. 먼저 “개성과 자유”의 이상은 이러한 집단화된 20세기 형 자본주의가 전 사회에 강요하는 순응주의 속에서 완전히 말살되고 억압될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과 이상은 단지 국가를 매개로 한 집단적 자본주의의 순탄한 축적과 작동을 위해 노동자들을 매수하고 타락시키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19세기적인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몰락과 파시즘의 발흥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 자유의 위기라는 《거대한 전환》의 주요한 테마가 이미 이 글에서 보이고 있다.

3) 갈릴레이 서클은 20세기 헝가리의 지성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페이지라고 한다. 회원은 2천명에 달했고 1년에 2천회 심지어 어떤 이의 추산으로는 1만회에 이르는 교습과 강연을 행하였다. 여기에 회원이었거나 관계를 맺은 유명한 지식인은 예술사가 아놀드 하우스, 철학자 루카치, 경제학자 칼도르, 음악가 바토크 등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2) 1차 대전과 사회주의: 인간 실존의 의미와 사회의 실재

성년이 된 폴라니의 신변에도 큰 변화가 온다. 먼저 그의 아버지가 기획하던 1천 킬로미터 철도 사업이 파산하고⁴⁾ 끝이어 아버지가 1906년 별세하면서 폴라니 집안은 심한 경제적 곤핍에 시달리게 된다. 1909년 콜로스바(Kolozsbár)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은 폴라니는 삼촌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돕다가 1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군에 입대하여 동부 전선으로 파견되며, 전선에서 폐결핵까지 걸리게 된다.

1차 대전은 실로 무의미한 집단 광란이었다— 최소한 전쟁에 참여했던 유럽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느꼈었다. 동부 전선의 차가운 하늘 아래에서 이러한 전쟁의 참상과 무의미성에 몸과 마음이 침식당하던 폴라니는 인간의 영혼과 삶의 의미라는 근원적인 문제와 조우하게 된다. 나중에 1954년 그가 발표한 셰익스피어 연구 에세이 《햄릿(Hamlet)》에서 그 당시의 회상을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날 말을 몰고 가던 중 말이 실족하여 쓰러지지만, 전쟁과 질병에 지쳐 동부 전선의 차가운 하늘은 “작은 원반처럼 좁아들어” 가고 있었던 폴라니는 낮을 잃은 채 말에 깔려 죽을 위험도 생각지 못하고 말과 함께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고 만다. 그때 그는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거기에서 영혼이 살아 있는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처하여 황당한 명령을 받게 되어 멜랑콜리에 빠져버린 햄릿처럼, 인간은 자신의 인생과 죽음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능동적인 삶의 계기를 얻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단지 숨만 헐떡거리며 쉬고 있는 살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 햄릿의 저 유명한 독백, “살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어버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저 운명이라는 년이 던지는 돌팔매를 참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무기를 들어 삶을 끝장내어 버릴 것인가”라는 구절의 의미를 알게 된다. 삶의 의미를 얻지 못하고 숨만 쉬는 존재는 죽음보다 못한 상태이며, 여기에서 인간은 삶과 죽음의 관계를 알게 되고 햄릿처럼 기쁘게 행동에 나서서 삶을 일구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부인 두친스카의 말에 의하면, 전쟁에서 돌아온 폴라니는 이제 그가 평생을 걸쳐 고민하게 되는 문제, 즉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안게 된다.⁵⁾ 인간의 자유라는 이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역사

4) 그의 아버지는 그 특유의 엄격한 도덕적 원칙에 따라서 기업의 청산 과정에 모든 소액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고집하여 결국 자기 재산을 완전히 소진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5) 그는 이때 “인간 고통과 불행의 사회적 근원”을 다룬 《대괴수(Behemoth)》라는 200페이지의 수고를 썼다고 하나 남아 있지 않다. 그가 20년대에 썼던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남아 있다. “(과거 6년간)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전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과 아픔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제거해내기 위해 그 기원을 철세없이 찾아내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는 지상명령이 우리 앞에 있음은 너

적 사회적 조건 안에서만 실현 가능하지만 그것에 의해 크게 제약당한다. 자유를 그저 추상적 이상으로서 관념하였던 다른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폴라니에게 있어서 자유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인 삶의 무의미성을 극복하고 죽음도 삶도 끌어안을 수 있는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치료책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는 현실의 사회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로 제시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제약하는 현실 조건과의 정면 대결에서만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폴라니는 1921년경부터 톨스토이에 깊이 심취하면서 인간의 존재와 행복이 얼마나 사회 전체의 비참한 상태와 풀어낼 수 없이 엮여 있으며 아무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회 실재의 현실을 깊이 고민하기도 한다.

전쟁 직후 일대 격변에 빠져든 헝가리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그의 고민을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의 문제로 절박하게 제기하였다. 폴라니는 이미 전쟁 전인 1914년 오스카르 야찌(Oskár Jászi) 등과 함께 급진시민당(Radikális Poltgári Politika)을 조직하고 그 초대 서기장으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었다. 이 정당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핵심으로 삼고 도시 중산층과 노동 계급 및 농민을 하나로 조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목표로 삼는 정당이었기에, 전쟁 후 1919년 볼셰비키가 조직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며 123일 간 지속되었던 헝가리 사회주의 공화국 체제 및 공산주의 지식인들과 공존할 수 없었다. 폴라니 또한 격렬한 논조로 볼셰비키를 비판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후 극우 반동 세력의 쿠데타로 혁명 정권이 무너지자 폴라니 또한 즉시 비엔나로 망명하여⁶⁾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1923년 혁명적 사회주의자였던 일로나 두친스카(Ilona Ducynska)를 만나 결혼한다.

비엔나에서 그는 1924년부터 당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와 함께 서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신문이었던 《오스트리아 경제(Österreichische Volkswirt)》지의 국제 문제 담당 선임 편집자가 되어 생활의 안정을 얻는 한편⁷⁾ 경제학을 위시한 다방면의 지적

무나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기원**을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성은 아무도 생각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의 제목으로 “우리 시대의 기원(The Origin of Our Times)”을 제안했었고, 이는 영국 출판본의 제목으로 올라간다. Kari Polanyi-Levitt, "The Origins and Significance of The Great Transformation" in *The Life and Works of Karl Polanyi* 119p.

- 6) 그런데 폴라니가 단 하루 동안 공산주의자였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반동 쿠데타가 발발하여 혁명 정부가 전복되던 1919년 5월 2일 당시 병상에 누워 있었던 폴라니는 소식을 듣자 젊은 시절의 친구인 루카치-당시 혁명 정부의 교육 장관으로 일하고 있었다-에게 공산당 입당을 신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두친스카는 회고하고 있다. Ilona Ducynska, "I First Met Karl Polanyi in 1920" in K. McRobbie et. al. ed, *Karl Polanyi in Vienna: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the Great Transformation* (Montreal: Black Rose, 2000) 309p.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폴라니는 일생 동안 이렇게 애증이 섞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 7) 피터 드러커의 회고록에 보면 당시 폴라니 가족의 생활의 한 단편이 재미나게 드러난다. 폴라니는 당시 《오스트리아 경제》에서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받았지만 집안 생활은 당

활동을 시작한다. 1920년대의 비엔나는 말할 것도 없이 당시 세계에서 지적인 에너지가 가장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던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엔나에 성립된 사회주의 정권의 기간 동안 유례없이 고도로 발달한 노동자 문화—소위 ‘붉은 비엔나’—로도 유명한 곳이었다. 특히 이곳은 칼 멩거(Carl Menger)에서 시작하여 비저(Wieser), 뵘-바베르크, 미제스(Ludwig von Mises) 등의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폴라니의 경제학 연구의 관심과 목표는 이론적인 정합성을 가진 추상적 경제 이론의 구성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었다.⁸⁾ 그래서 그는 가격 이론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한계효용가치론이 우선 과학적으로 더욱 정합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경제적 선택과 가치의 자유로운 발현이 보장되는 종류의 사회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후자를 더욱 선호하는 독특한 입장에 선다. 하지만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서의 비용과 효용이라는 기술적 조건에 의해 시장 가격이 형성되며 그것이 “현실의” 경제의 운동과 균형을 그대로 결정한다고 보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전체적 경제 이론은 거부한다. 실제의 현실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Vergesellschaftete Mensch)” 즉 자신의 도덕적 미학적 경제적 가치와 이상 등의 포괄적 관계로 맺어지는 인간들의 관계로 구성된 전체 사회의 역동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의 자유에 대한 속박과 가능성은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처럼 운동하는 소위 시장 경제의 운동 법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종하도록 인간과 사회를 무릎 꿇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또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성된 시장의 세계가 아무리 논리 정합적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경제도 그와 동일하게 운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폴라니의 독특한 사회주의적 관점이 1920년대의 유명한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서 표출된다. 당시 철학자이며 오스트리아 재무부 관료로도 일했던 오토 노이라트(Otto Neurath)는 시장 경제를 철폐하고 완전히 중앙 정부의 경제 계획에 의존하는 명령 경제를 수립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는 시장 기구가 멈추고 일종의 배급 경제가 행해지던 전시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오로지 투입물의 상관 계수와 기술적 생산 관계의 지식만 있으면 생산 뿐 아니라 소비까지도 모두 “현물로” 조직할 수 있으니 화폐를 폐지해야 하며 따라서 시장 기구도 사적 소유도 모두 폐지하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여기에 맞서서 미

장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빈곤하였는데, 그 수입을 모두 비엔나에 있는 헝가리 망명객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드러커의 회고록은 몇 가지 점—사람 이름과 시간 등—에서 부정확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8) 당시의 폴라니의 경제학 연구의 진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Felix Schafer, "Vorgartenstrasse 203: Extracts from a Memoir" in *Karl Polanyi in Vienna*.

제스는 한계 효용 이론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면 합리적인 회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노이라트가 주장하는 대로 국가가 순전히 경제의 기술적 측면만을 경제적 계산의 기초로 삼는다면 회계 장부에서의 합리적 비용-편익 분석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격이라는 정보가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용 지출을 통해 들어오는 한계 효용—예를 들어 일정 생산 요소 투입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을 통해 기회 비용을 계산해야만 어떤 소비(혹은 생산)을 어느 만큼 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가라는 최적화(optimization)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선택이 담긴 시장 가격만이 낭비와 부족을 막을 수 있는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이라트의 사회주의 경제는 합리적 의사 결정에 기초가 되는 합리적 경제 계산의 정보를 생산할 수 없으며, 사적 소유, 화폐, 시장 교환 등은 경제가 합리적 계산에 기초하여 성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인프라라는 것이었다.

플라니는 이러한 국가 계획의 사회주의와 시장 지배의 자본주의의 두 가지를 모두 배격하고 그의 독특한 이론에 근거한 사회주의적 회계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플라니가 보기에 노이라트와 미제스 모두 경제라는 현상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작품이 아니라 마치 자연과학적 현상처럼 논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 활동에는 물론 기술적 조건과 인간 노동의 희생과 같은 기술적 자연적 측면이 있지만, 경제적 계산 즉 회계의 제반 범주는 모두 사회적으로 구성—여기에는 권력적인 관계도 작동한다—되는 것 대해 플라니는 노이라트가 주장하는 국가의 경제 계산과 미제스의 시장 가격 경제 계산을 모두 비판한다. 양쪽 모두 경제적 가치 계산의 문제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의지로 결정되는 “사회적”인 문제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축과 별개로 인간들의 제반 사회적 가치와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집단적 욕구와 고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사회주의적 회계 체계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두 이론 모두 자연적 기술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비용과 이익이라는 “자연적”인 문제들만을 해결할 뿐 인간이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자신의 내면에 담고 있는 가치와 욕망과 고충의 차원을 살피는 과제 즉 “내면 조망(Innenbersicht)”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⁹⁾ 여기서 플라니는 그의 독특한 “기능적 민주주의(Funktionelle Demokratie)”를 꺼내든다.¹⁰⁾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조합을 만들고 여기에 생활 협동 조합, 지방 자치체, 심지어 정당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

9) 이것이 플라니가 “최소성의 개념이 없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시간으로만 경제 이론을 구성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으로서 기각한 이유이기도 하다.

10) 플라니의 이 생각은 코올(G. D. H. Cole)의 ‘길드 사회주의(Guild Socialism)’에게서 큰 영감을 얻었다. 코올은 그의 다윈주의적 국가이론에 근거하여 산업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 국가를 해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다양한 조합—즉 ‘길드’—이 병존하는 체제로 산업 사회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는 모든 사회적 단위에서 일 수 있는 모든 단위에서 경제적 의사 결정의 의견을 개진하여 집단적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사회주의적 회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서 보여준 폴라니의 기여는 시장 자본주의는 물론 중앙 국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생산과 분배가 일률적으로 계획되는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와도 전혀 무관하게 다양한 사회적 집단 간의 토론과 정보 교환으로 합리적 경제 계산을 가능케 할 ‘등가’를 형성시킬 이론적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에 있다.¹¹⁾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만으로 현실 사회의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바를 설명할 수는 물론 없는 일이다. 펠릭스 사퍼에 의하면, 폴라니는 이미 20년대 후반부터 경제학 연구의 초점을 점차 실제의 경제사적 과정으로 옮기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이론적으로 구성된 경제의 상과 현실 경제의 작동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이중적 운동”의 개념이 폴라니에게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고 회고하고 있다.¹²⁾

3) 시장 경제의 몰락과 파시즘: 인간 고통의 밑바닥에서

20년대 후반기 세계 경제의 호황과 ‘붉은 비엔나’는 오래 가지 않았다. 30년대 초의 대공황과 영국의 금본위제 탈퇴, 히틀러의 집권, 독일 및 일본의 워싱턴 체제 부정 등 20년대의 세계 체제는 급속히 무너져 가고 있었으며, 1934년에는 결국 비엔나의 사회민주주의 정권도 돌푸스(Dolfuss) 파시즘 정권으로 폭력적으로 바뀌게 된다.

《오스트리아 경제》지의 국제 문제 담당 편집자였던 폴라니는 이렇게 급박하게 변동하는 지구적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 과정을 긴밀하게 관찰하고 미국의 뉴딜, 소련의 5개년 계획, 영국 내부의 노동 정치의 변화와 위기, 중국 혁명의 전망 등 지구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수많은 글을 써낸다. 그런데 폴라니는 1924년에서 1938년까지 약 250개의 기사를 쓰지만 1932년까지는 일년에 8개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다 1933년 《세계 경제 위기의 메카니즘(Der Mechanismus der Weltwirtschaft)》을 발표하면서 기사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험 속에서 폴라니는 “보수적 20년대”에서 “혁명적 30년대”로 전환하는 지구적인 거대한 전환의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며, 그러한 관찰과 성찰의 결과는 《거대한 전환》에 고스란히 실리게 된다.

11) Karl Polanyi, "Sozialistische Rechnungslegung" *Archive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 49: 377-418; "Die funktionelle Theorie der Gesellschaft und das Problem der sozialistischen Rechnungslegung" *Archive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 52: 218-28; "Neue Erwägungen zu unserer Theorie und Praxis" *Der Kampf* Bd. 18: 18-25. 《국역: “우리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몇 가지 반성” 홍기빈 편역,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책세상)》 또 구본우 《칼 폴라니의 경제계산 개념에 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12) Schafer, *op.cit.* 337-8.

하지만 1933년 독일에서의 히틀러의 집권과 함께 더 이상 《오스트리아 경제》에 폴라니가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은 존재하지 않았고, 점점 조여오는 파시즘의 마수에 폴라니는 신변과 생활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결국 같은 해 영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영국 통신원으로서 《오스트리아 경제》가 나찌에 의해 폐간되는 1938년까지 계속 기고하지만, 영국이라는 새로운 지적 환경에서 새로운 활동을 찾아나간다. 옥스퍼드 대학의 성인 교육 그리고 특히 《노동자 교육 협회(Worker's Education Association)》에서 그는 그의 교육자로서의 천분을 살려 성인들 특히 노동자들의 교육을 맡는다. 망명하여 언어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다른 유럽인들과 달리, 어릴 때부터의 교육으로 모국어 이상으로 영어에 능통했던 그는 영국 노동자들에게 영국 경제사를 가르치는 강의를 맡게 된 것이다.¹³⁾

‘붉은 비엔나’의 높은 수준의 노동자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폴라니는 고전적인 시장 자본주의의 나라 영국의 노동자들과 가까이 사귀면서 시장 자본주의가 인간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경악을 금치 못한다. 맨체스터에는 아직도 엥겔스가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에서 묘사했던 노동자촌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세기 이래 인간을 완전히 노동 시장의 상품으로 만들고 철저한 계급적 차별을 통해 노동자들을 그저 일하고 돈만 버는 문화적 불구 상태로 만들어온 영국 자본주의를 보면서 폴라니는 19세기 초 산업 혁명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 경제의 출현이 인간과 자연을 얼마나 심하게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이는 시장 경제에 대한 견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한다. 시장 자본주의의 별거벗은 진면목 앞에서 폴라니는 부인 두친스카야의 표현에 의하면, “성스러운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침식을 잊고 도대체 “리카아도 시절의 영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를 알기 위해 영국 경제 및 사회사 연구에 몰두한다.

여기에서 그가 발견한 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단순한 ‘경제적 착취’의 문제점이 아니었다. 그가 진정으로 분노했던 지점은,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시장에서의 상품이라는 허울을 씌워 인간의 모든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처참하게 부정해버리는 시장 자본주의의 더욱 포괄적인 인간 파괴의 모습이였다. 이러한 폴라니의 분노를 이 책 13장과 14장의 격한 어조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의 시대에 자행되고 있었던 파시즘이라는 인간과 사회 파괴의 정신적 기원을 찾아낸다. 애초

13) 《거대한 전환》에 나타난 폴라니의 역동적이고 유려한 문어체 영어와 특히 수사학적인 재능과 능숙한 메타포의 사용 등은 《거대한 전환》을 하나의 문학 작품의 가치를 가지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Kenneth McRobbie, "Literature and *The Great Transformation*" in *Karl Polanyi in Vienna*. 그런데 《거대한 전환》의 일역본의 역자들은 폴라니의 영어 문체를 혹평하면서 “영어와는 거리가 먼 외국인”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실로 황당한 지적을 하고 있고, 게다가 대우학술총서에서 나온 예전의 한국어본의 역자는 어이없게도 이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자신의 한국어판 역자 후기에 고스란히 옮겨놓고 있다. 이들은 차라리 페이지마다 눈에 걸리는 자신들 번역본의 오역과 줄역을 먼저 돌아보았어야 할 것이다.

에 인간에게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상품 허구’를 억지로 적용하여 생겨난 19세기의 시장 자본주의는 그 유토피아적인 억지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혼과 개성적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정하고 단지 산업 사회의 균형과 조정이라는 기능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비틀려져야 할 기능적인 숫나사 암나사로 바꾸어버리는 파시즘의 정신적 태도의 연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경제적 착취가 아닌, 인간의 문화적 파괴를 가져오는 시장 자본주의의 몰인간성을 발견한 폴라니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영감이 주어진다. 1932년에 출간된 젊은 마르크스의 《경제학-철학 초고》가 그것이었다. 이 글은 마르크스가 파리에 망명하던 1844년 시절에 쓴 노트에 포함된 것으로서, 1932년 당시 소련에서 리아자노프(David Ryazanov)의 편집으로 1927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마르크스-엔겔스 전집(Marx-Engels-Gesamtausgabe)의 기획으로 1932년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¹⁴⁾ 재미있는 것은 마르크스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도 폴라니와 마찬가지로 당시 영국 노동 계급의 비인간적 상황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이미 헤겔 정치 철학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완결하고 새로운 사상의 도약을 모색하던 26세의 마르크스는 당시 새로이 알게 된 친구 엔겔스가 전해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듣자 단순한 경제적 착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적 본질과 거기에서 노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그 노동의 능력이 어떻게 양도(讓渡: Entäußerung, alienation)당하며 그 결과 어떻게 낯선 것으로 소외(Entfremdung, estrangement) 되는가를 정치경제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폴라니는 그 전에 마르크스주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던 때가 두 번—젊은 시절의 사적 유물론 연구 그리고 20년대에 사회주의 경제학 구성을 위한 《자본론》 연구—이 있었으나 모두 자신과 다른 견해로 거리를 멀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학-철학 초고》에 나타난 젊은 마르크스의 인간적 철학적 해안에 칼 폴라니는 이번에는 근본적인 영향을 받고 열광하게 된다. 그가 당시에 《경제학-철학 초고》를 강연했던 원고의 일부를 본다.

공산주의를 통해 모순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인류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밟아야 할 다음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립된 인간이란 하나의 추상일 뿐이다. 인간이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회 안에서다. 인간은 이러

14)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폴라니가 보았던 판본은 이 MEGA 본이 아니라 같은 해에 라이프찌히에서 2권으로 나누어 출간된 소위 란트슈트-마이어(Landshut-Mayer) 판이었는데, 이 판본에는 노동의 양도와 소외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 (보통 “제 1초고”로 알려짐)이 실려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폴라니가 따로 보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보았다면 젊은 마르크스의 견해와 그에 대한 자신의 독해의 일치를 보고 기뻐했을 것이다.

한 사회적 활동 안에서만 비로소 충만하게 인간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적 소유에 바탕을 둔 사회에서 인간은 자기 소외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욕구와 필요는 비록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해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감각들 또한 인간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욕구, 감각, 필요의 대상들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과 관계할 때에만 그것들은 인간적인 성격을 띠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세상과 관계된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 또한 인간의 물질적 현존의 생산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제조건에 달려 있다. 오늘날 그러한 조건들이 인간성과 모순 관계에 빠진 것이다.¹⁵⁾

여기에서 폴라니는 잉여가치 이론으로 착취율을 계산하는 《자본론》의 마르크스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 감각을 계발하고 다른 인간들과 형제자매가 되어 자연을 아름답고 유용하게 가꾸어가려고 하는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젊은 마르크스의 문제들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시장 자본주의와 인간 사이의 모순을 그러한 폭넓은 틀로 보게 된다. 이를 통해 그는 자기 조정 시장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인간 본질과 정면 충돌하는 유토피아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굳혔을 것이며, 이것이 그의 “허구적 상품”의 개념의 중요한 영감이 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¹⁶⁾

폴라니는 영국의 기독교 사회주의자들과 긴밀하게 교우하면서 이러한 시장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이라는 정신적 기원에서 얻은 영감에 힘입어 파시즘의 철학적 정신적 본질에 대한 분석 작업을 계속하며, 1935년 《파시즘의 본질(The Essence of Fascism)》을 발표한다. 파시즘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적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파시즘이라는 현상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 교의라는 것을 추려본다 해도 너무 압박하고 논리가 거칠어서 일관된 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폴라니가 이 글에서 실로 어려운 시도에 도전한 것이었지만, 그의 관점은 대단히 명쾌하다. 그것은 파시즘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정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먼저 좀 길지만 1935년 경에 제작된 폴라니의 강의 노트 중 일부를 인용해 본다.

15) 미출간 강연 원고, “경제학·철학 수고 소개” 홍기빈 편역,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책세상)

16) 여기에서 많은 혼동을 낳는 지점으로서, 폴라니의 “허구적 상품”의 개념이 《자본론》 1권에 개진되고 있는 “상품 물신성” 개념과 다른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폴라니 스스로가 이 책 6장의 각주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마르크스의 개념은 상품의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와 아무런 “자연적 연관”이 없이 상품들끼리 교환된다고 하는 독특한 사회적 관계의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반면, 폴라니의 “허구적 상품”이란 본래 상품이 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들인 인간, 자연, 화폐가 상품이라는 허울을 둘러쓰게 되는 어불성설의 과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20세기 자본주의는 모든 인간성을 아예 말끔히 뿌리뽑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다음과 같은 인간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영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냄새 감지기와 촉각 표시 장치는 물론 시각과 청각, 미각을 갖춘 통제 장치 그리고 두 팔과 두 버팀대가 달린 틀거리로서, 잘 움직이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먹여야 할 입도 씻어야 할 피부도 살아야 할 삶도 없는 그런 인간 말이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신성 질서 회사(Divine Order Company)의 중역회의에서 계속 보내온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다. 중역회의는 골치 아픈 영혼이라는 놈을 몸에 지닌 아이들이 계속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조정될’ 때 까지 자본가들은 차선책을 취해야 했다. 즉 노동자들의 인간적 요소가 자기실현이나 공동체 같은 마음속의 희망을 지향하지 않고 딴 데로 향하도록 그들이 싸워야 할 용과 괴물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허물어진 집 위로 밤새 떠돌아다니는 유령들을 그려내야 했다. 또 사람들을 먼 곳으로 보내 그 용들과 싸우도록 훈련시켜야 했고 그 중 일부는 낯선 땅에서 그 도깨비들과 싸우겠다고 자원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이제 자신들 휘하의 사이비 인간들에게서 인간적 삶을 완전히 분쇄해버렸으니 해외에 있는 경쟁자들을 쓸어버릴 차례다.

더 많은 사이비 인간이 필요하다...인간들이 사이비 인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사이비 공동체가 된다. 항상 사이비 인간들의 공동체를 지지해 온 조직들이 이를 환영하고 합리화한다. 보편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 자아의 실현을 추구하려 들면 공산주의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낙인찍힌다. 인체의 욕구 중 호흡 중추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욕구는 아무 것도 충족되지 못한다. 두뇌피질은 여기에 순응하지 못하고 미쳐간다. 원래 멀쩡하던 모든 이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전 세계가 정신병원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좀 더 병이 깊은 신경증 환자들이 나서서 덜 미친 대중을 이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유쾌한 안도감이 온 나라에 퍼진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사실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작 미친 것은 세상이다. 지구 곳곳에서 사악한 괴물들을 무찌르기 위해 십자군을 조직한다. 보탄(Wotan)¹⁷⁾ 숭배가 국가적 종교가 된다.¹⁸⁾

17) 북구 신화의 전쟁의 신 오딘(Odin)

18) 미출간 강의 노트 “마르크스주의의 기독교적 관점: 비판”. 홍기빈 편역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책세상)에 수록. 폴라니의 미출간 유고와 각종 자료의 목록은 캐나다 몬트리올의 콘코디아(Concordia) 대학의 《칼 폴라니 정치경제 연구소(The Karl Polanyi Institute of Political Economy)》에 문의하면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래 인간에게 있어서 인격적 개성과 영혼과 공동체와 신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개인의 인격과 개성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신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류 형제애의 교리이다.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개인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들이 모두 평등한 이들이라는 것도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다. 인류 형제애의 교리는 인격적 개성이 오로지 공동체 안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동체의 실체는 바로 개성적 인격체들의 관계이다. 그리고 공동체가 현실에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이다.¹⁹⁾

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그토록 파악하기 힘든 파시즘이라는 현상의 본질이다. 파시즘은 헤겔, 니체, 생기론 철학, 민족주의, 인종주의 등 오만 요소를 끌어안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인간 영혼의 부정”에 있다. 그리하여 “변증법 없는 헤겔”, “초인(Superman)없는 니체”가 나타나고 비합리적 생기론만 판을 치는 가운데에 인간의 정신은 끈적거리는 육체의 백(魄)의 진화 단계로 퇴행해버린다.

20세기 초 1차 대전으로 시작된 인류의 거대한 고통의 소용돌이를 해명해보고자 “살이 마르도록”(두친스카의 표현) 몸부림쳤던 폴라니는 이제 그 고통의 기원을 찾은 것이다. 그 기원은 19세기 초 영국의 산업 혁명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자기 조정 시장 경제의 출현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작업은 그러한 시장 경제가 얼마나 인간과 자연의 본성과 동떨어진 터무니없고 달성 불가능한 “유토피아”인가, 그리고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어떻게 출현하여 전 인류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 결과 사회라는 실체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 파시즘, 혁명, 양차 대전, 대공황과 같은 폴라니 당대의 전대미문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전 지구를 휘말아넣게 되었는가를 차례로 설명하는 작업이 남았다. 폴라니는 미국 버몬트의 베닝튼 대학(Bennington College)에서 자리를 잡아 1940년 미국으로 이주하며, 여기에서 3년간 그 작업에 몰두하여 저서를 준비한다. 그 저서의 계획된 제목은 《자유주의 유토피아: 지각변동의 기원(Liberal Utopia: The Origin of Cataclysm)》이었다.²⁰⁾

19) "The Essence of Fascism", in J. Lewis, K. Polanyi, and D. K. Kitchin eds., *Christianity and the Social Revolution* (London: Gollancz, 1935) 369-70.

20) "Introduction" in *The Life and Work of Karl Polanyi*, 7p.

2. 《거대한 전환》 : 시장 유토피아와 사회의 발견

이 책은 그 “거대한 전환”을 함께 몸소 겪은 동시대의 서구인들을 위해 쓴 책이므로,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좀 더 평이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3장-5장: 이 부분은 인류 역사의 진화에 있어서 경제가 사회와 맺는 관계를 포괄적으로 해명하고, 그 속에서 시장 경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한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는 19세기 특유—자유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공히 나타난—의 “경제주의적 편견”에 의해 크게 오해되어왔다. 인간은 모두 자기의 이익이라는 “경제적 이해”로 움직이는 존재이며, 따라서 그렇게 구성되는 시장 경제의 경제적 법칙이야말로 전 역사에 걸쳐 모든 경제와 나아가 사회까지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것이다. 폴라니는 당시 최신의 경제 인류학 및 고대 중세사의 성과를 빌어서 이러한 관념이 19세기인들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히 논증한다. 경제는 사회적 과정에 “묻어들어(embedded)” 있는 것이며, 특히 시장 경제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 경제 형태이기 커녕, 최소한 200년전까지는 어디서나 “부수적 존재”로 철저히 억압되어왔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윤 동기로 조직되는 시장이라는 형태는 16세기 영국에서처럼 자유롭게 풀려날 경우 급속도로 사회와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깡그리 시장 제도 하나만으로 조직하여 그것으로 자기 조정 시장을 세운다는 것은 적어도 지난 수천 년 수만 년의 인류사에 비추어보면 “자연적”이기 커녕 극히 인위적인 유토피아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장-10장: 그렇다면 이토록 비현실적인 자기 조정 시장 경제라는 유토피아는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산업 혁명을 통해 기계제 생산이 출현한 것에 있다. 예전의 기계는 인간의 노동을 보조하는 것이었던 데에 반해, 새로이 나타난 값비싼 기계들은 인간의 기능을 대체하고 오히려 인간을 자신의 보조적 위치로 떨어뜨려버리는 것들이다. 생산의 주체는 이 값비싼 기계가 되어 버리고, 인간과 자연은 그 기계의 작동을 위해 들어가는 ‘투입물’로 위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이 기계는 예전의 기계와 달리 큰 자본을 투하하여 구입하는 것이므로, 시장의 변덕에 맞추어 기계 가동률도 자동적으로 변해주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채산성을 유지하려면 기계 가동률의 증감에 따라 ‘투입물’인 인간과 자연은 저절로 그 투입량이 조절되어 호황시에 마음껏 구입하였다가 불황시에는 바로 잘라 낼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결국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계 생산의 불가결의 요소인 화폐—사회적 구매력—또한 아무 때이건 원하는 만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처럼 취

급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격한 상상력이 쉽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상품화의 마지막 단계였던 인간의 상품화는 영국의 경우 지주 세력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고, 이들은 실업자에게 무조건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스피넘랜드 법을 만들어낸다. 결과는 끔찍한 참극이었다. 원호대상 극빈자들의 숫자는 한없이 늘어만 가고 노동 생산성도 한없이 추락하였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와중에서 인간이 인간의 형상을 잃고 “구별조차 불가능한 짐승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지상에 올라와 아가리를 벌린 생지옥”을 보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기에 그것에 순응하는 것만이 인간이 이 참극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광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생각을 체현한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하나의 과학적 법칙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결국 인간도 노동이라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유토피아의 마지막 단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버트 오언 Robert Owen이라는 중요한 예외가 있었다. 마키아벨리, 루터, 홉스에 이르는 근대 초기의 사상가들은 국가의 영역이 사회의 실체라고 상상하였고 이제 헤겔과 리카아도는 새로이 발견된 시장 경제가 사회의 실체라고 상상하였지만, 오언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가지의 영역은 물론 기계라는 압도적인 현실에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이 모든 복세통과 시련의 밑바닥에 버티고 있는 진정한 실체는 인간들과 자연들이 구체적으로 맺는 관계, 즉 사회 실재의 현실임을 갈파하였다. 드디어 국가도 시장도 아닌 ‘사회’라는 실체가 발견된 것이다. 오언은 그의 천재적인 통찰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시장 경제의 법칙 앞에 인간을 내어맡기는 것도 아니며 또 국가의 법령과 명령으로 후퇴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그 사회라는 실체를 강화하고 재구성하는 것임을 역설한다.

11장-16장: 이제 인간, 자연, 화폐까지 모두 상품이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품 허구가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경제는 모두 자기 조정 시장으로 재구성되게 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상품의 시장은 동시적이고도 지구적으로 나타나야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빈법의 철폐, 금본위제의 시행, 곡물법 철폐를 통한 자유 무역 등과 같은 “신앙적” 행동이 취해지게 되며, 19세기 문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토피아적 행동이 현실에 실현되는 것을 사회라는 실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정당을 만들어 저항했으며, 토지 세력은 보호 관세와 반동적 군국주의 공세 등을 통해 저항했으며, 심지어 자본주의적 기업들마저 중앙 은행을 통한 원활한 통화 및 신용 공급을 요구하며 저항했다. 폴라니가 말하는 “이중적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이중적 운동이야말로 플라니가 강조하는 시장 경제의 유토피아적 성격과 이에 맞서는 사회 실재의 발견이 표출되는 지점이다. 시장 경제가 나타나게 된 것은 자유 방임은 커녕 엄청난 국가 계획에 의한 것이었지만, 시장 경제에 맞선 사회의 자기 보호 운동은 아주 자발적 자생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달성 불능의 어거지 유토피아에 대해 사회라는 실체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최초로 발견한 이라고 플라니가 생각한 로버트 오언의 생각처럼, 인간 존재의 핵심은 국가도 기계도 시장도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실제로 관계를 맺는 사회인 것이다. 그런데 이 실체인 사회는 시장이라는 유토피아에 의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순적 상태에 처하게 된다. 한편으로 가혹하기 짝이 없는 시장 기율을 자기에게 채찍질하다가 너무 아프다며 요리 빼고 조리 빼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또 자기에게 시장 기율의 채찍질을 더욱 가혹하게 하고, 또 요리 조리 빼다...이 어처구니없는 “스미골과 골룸의 자작 2인극”이 계속되면 사회는 결국 붕괴하지 않을 수 없다. 붕괴의 긴장이 지구적 시장 자본주의를 휩싸게 된다.

17장-20장, 1장-2장: 이것으로 플라니 당대에 목도하고 있는 19세기의 문명 붕괴와 그를 이은 거대한 전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국내 정부, 자기 조정 시장, 국제 금본위제, 세력 균형 체제로 구성된 지구적 시장 자본주의는 곧 제국주의적 경쟁과 1차 대전의 파국을 맞는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세계가 19세기의 자기 조정 시장 체제라는 유토피아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자유주의자들은 1차 대전 이후에도 국제 연맹과 금본위제를 앞세워 19세기 문명을 재건하려는 헛된 노력에 몰두한다. 하지만 결과는 금본위제의 몰락과 함께 산사태와 같은 붕괴 및 전환의 물결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대중 민주주의를 장악한 반(反) 시장 세력과 산업을 장악한 자본가들이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한 쪽씩 찢어가면서 사회는 결국 가랑이가 찢어지고 만다.

21장: 이것이 19세기 이래로 서구 문명이 걸어온 파우스트적 몸부림의 자초지종이다. 이제 시장 경제라는 것을 구성하겠다는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은 전지구적으로 힘을 잃어버렸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와 어떤 사회를 구성해야 할까. 과연 파시스트들처럼 산업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회를 기능적 구조로 완전히 재편하고 인간은 자신의 영혼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포기한 채 그 구조의 숫나사 암나사로 변해가야 할까. 아니면 이러한 끔찍한 결말을 피하기 위해 자유주의자들처럼 시장 경제에 대한 일체의 개입과 간섭을 거부하고 19세기 문명의 형태를 고집해야 할까.

플라니의 대답은 다시 “자유”이다.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영혼은 분리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본연의 모습이다. 이것을 여러 기능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 사회

라는 “복합 사회”와 양립 가능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시장이라는 유토피아를 걷어내고 그 밑에 버티고 있는 실체, 지난 2세기 동안 한 순간도 그 유토피아에 길들여지지 않고 이중적 운동이라는 역동을 만들어냈던 사회라는 실체를 발견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이제 2천년전 예수의 복음서 이후로 새롭게 재정의되어야 할 순간이 왔다. 이것이 사회의 발견이며, 그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사회주의가 인류의 나아갈 길이다.

《거대한 전환》은 즉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1945년에 골란츠(Gollancz) 출판사에서 나온 영국판은 완전히 무반응에 싸여버렸으며, 1944년에 출간된 미국판도 비록 몇 군데 학술지에서 논평이 실리기는 하지만, 그 논지는 거의 이해되고 있지 못했으며 반응도 냉담한 편이었다. 비록 맥이버(McIver)와 같은 사회학의 거장은 즉각 이 저서의 심대한 중요성을 이해했지만, 이는 오히려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전 이후 다시 대서양 헌장의 정신으로 전후의 세계 자본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바빴던 미국인들로서는 이 책의 논지가 반가울리 없었다. 게다가 곧이어 시작된 냉전의 상황은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극도로 단순화된 이분법으로 몰아넣어 버렸고, 이 저서의 섬세하고 복잡한 논지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을 것이다.

3. 실체 경제학: 인간 사회에서의 경제의 위치

하지만 폴라니는 이러한 냉담한 반응에 굴하지 않고 《거대한 전환》에서 일단락된 시장 경제의 유토피아적 성격 그리고 사회 실체의 현실이라는 주제를 더욱 밀고 나가, 전 인류 역사의 모든 사회와 경제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분석의 틀, 즉 “실체 경제학(substantive economics)”을 구성할 수 있는 범주와 이론을 마련하고 또 그에 근거한 실체의 역사적 인류학적 사회 조사 작업에 착수한다.

20년간의 “거대한 전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는 19세기적인 경제주의의 편견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마르크스주의 쪽이나 부르주아 사회과학 쪽이나 훨씬 더 체계화되고 강화된다. 먼저 영국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모리스 돕(Maurice Dobb)의 《자본주의 발전 연구(Studies of Capitalist Development)》가 전후에 출간된다. 폴라니는 이 책이 마르크스 경제학의 긍정적 측면인 역사적 접근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동 시장도 엄연히 존재하지 않았던 (그렇다면 노동력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 잉여 가치의 형성도 가치 법칙의 작동도 성립할 수 없다)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가치

법칙을 적용하는 경제주의적 시대 착오를 범했다고 격렬하게 비판한다. 그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자인 돕 또한 “하이에크나 미제스와 같은 적편에 나란히”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²¹⁾ 한편 탈코트 파슨스와 닐 스멜서(Neil Smelser)는 자신들의 구조주의적 기능주의에 근거하여 경제를 나머지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는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즉, 사회란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며, 그 중 하나의 기능인 경제는 거기에 종속된 하나의 독자적 “하위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에서 순수하게 “경제적 합리성”으로 지배되는 “경제적 행동”의 영역을 명확하게 갈라내는 것이 가능하며, 그 영역은 이제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의 《경제 분석의 기초(The Foundation of Economic Analysis)》에서 시장 경제의 일반 법칙으로 지배되는 무수한 경제 변수들의 방정식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²²⁾

폴라니는 3년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지만, 1947년 콜럼비아 대학교에 다시 자리를 얻어 또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캐나다 토론토 근교의 피커링(Pickering)에 정착한다.²³⁾ 1953년에 폴라니는 퇴임하지만, 그는 이 대학의 역사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을 포괄하는 학제적 연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포드 재단에서 연구비를 얻어내는 데에 성공한다. 이 프로젝트가 1957년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이 《초기 제국에서의 교역과 시장(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이다.²⁴⁾

폴라니가 이 책에 수록한 논문 《제도화된 과정으로서의 경제(Economy as Instituted Process)》는 바로 그러한 실제 경제학을 수립하려는 야심적인 기획이 잘 드러나 있다. 자기 조정 시장 경제학이라는 시장 유토피아의 환상에 빠져 그 개념과 범주를 인류 역사에 존재한 다종다기한 사회에 마구잡이로 적용하게 된다면, 사회의 실체라 할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경제가 실제로 어떠한 과정으로 작동하며 그를 위한 제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실제적 측면을 모조리 놓치게 된다. 따라서 먼저 폴라니는 경제라는 말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음을 주목한다.²⁵⁾ 첫째는 실제적 정의로서,

21) *The Journal of Economic Hisotry* 8(2), 1948 November, 206-7.

22) T. Parsons and N. Smelser, *Economy and Society* (Glenco, Ill.: Free Press, 1958)

23) 당시 매카시 광풍이 불고 있었던 미국 정부는 일로나 두친스카의 공산주의 활동 전력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한다. 폴라니는 피커링의 작은 집에서 1964년 서거할 때까지 살면서 뉴욕으로 기차를 통해 통근하였다.

24) Karl Polanyi, Conrad M. Arensberg, and Harry W. Pearson ed.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Economies in History and Theory* (New York: Free Press, 1957).

25) 폴라니가 이러한 경제의 두 개의 정의를 발견하게 된 중요한 영감으로 1923년에 출간된 칼 멩거(Carl Menger)의 《일반경제학원리》을 언급하고 있다. 주지하듯 칼 멩거는 오히려 시장 경제의 순수 이론을 개발한 선구자로서 이 형식적 경제학의 원조라 할만한 이이다. 하지만 멩거 자신도 이러한 경제에 대한 형식적 정의와 그에 기반한 이론이 인간 역사에 모두 적용되기 힘들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이론을 담고 있는 1871년의 《국민경제학비판요강》을 절판시키고 번역도 모두 거부한 채 2판의 준비

“인간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적 수단을 조달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형식적(formal) 정의로서, “인간이 가장 알뜰한 선택을 하는 것 즉 경제화(economizing)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폴라니는 첫 번째의 정의는 실제 사회의 경제적 작동이라는 사실적 실체적 측면을 대상으로 삼는 정의인 반면, 후자는 순전히 비용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논리적 차원에서 도출된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실제 사회에서 경제가 작동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의에 기초한 경제 이론과 개념 범주를 설정해야 하며, 후자의 정의에 근거하여 구성된 시장 경제학의 이론과 개념 범주들은 오로지 시장 경제로 조직된 근대 자본주의의 경제 작동의 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외의 사회들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체적) 경제란 그러한 추상적 논리적 구성물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의 여러 구체적 제도를 통하여 조직되는 실제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실체적 경제학의 이론들에 기대어 폴라니는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나타났던 유사 시장(pseudo-market)적 경제 행태의 패턴들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이 사실상 현대의 시장 경제와는 판이한 것임을 밝혀내는 작업을 인도한다.²⁶⁾ 이 책의 1부에 참여한 고대 사가들은 놀랍게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역사가들이 지금까지 상정해왔던 시장 경제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아예 도시에 시장터(marketplace)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발표한다. 2부에 나오는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여러 부족 사회에서의 시장의 존재 형태가 전혀 형식적 경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또한 보인다. 이 저서는 이후 고대 경제사 분야와 경제 인류학에서 큰 논쟁을 낳아, 두 분야의 연구가 소위 형식주의(formalism) 대 실체주의(substantivism) 학파의 논쟁이라는 두 개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분립되도록 만드는 성과를 낳는다. 폴라니는 이후에도 서아프리카의 다호메이 왕국과 고전 고대의 그리스 경제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이렇게 실체적 경제가 실제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과정으로 자리잡고 또 시장 경제와의 접촉 혹은 변질을 겪어나가게 되는가를 연구한다.²⁷⁾

를 위해 몇 십년간의 연구에 착수한다. 그의 사후인 1923년에 출간된 2판은 일단 《일반경제학원리》라는 전혀 다른 제목을 달고 있었고, 인간의 욕구의 보편적 성격을 탐구한 장을 추가하는 등 큰 변화를 담고 있다고 한다. 폴라니에 의하면, 인간 경제의 실체적 정의가 본격적으로 개진된 저서가 바로 이 《일반경제학원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사후 멩거의 저서의 영역분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하이에크와 나이트(Frank Knight)는 이 2판을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1871년의 1판을 번역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2판은 《일반경제학원리》라는 제목으로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다.

26) 이는 그의 사후 피어슨(Harry Pearson)이 유고를 정리하여 편집한 《사람의 살림살이(The Livelihood of Man)》의 1부에 더욱 풍부하게 개진되어 있다.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27) 그리스 경제에 대한 연구는 The Livelihood of Man 의 후반부를 보라. 또 다호메이 왕국에 대한 연구는 *Dahomey and the Slave Trade: An Analysis of an Archaic Economy* (Seattle: University

폴라니는 만년에도 학문적 연구 이외에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한다. 1957년 고국인 헝가리에서 노동자 봉기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를 정열적으로 지지하며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의 꿈을 키웠고, 혁명에 참여한 문인들의 시를 모아 영어로 번역하여 내기도 한다. 또 냉전과 핵무기 경쟁이 벌어지게 되자 버트란드 러셀, 아인슈타인, 사하로프 등의 여러 인사들과 힘을 합쳐 《공존(Co-existence)》이라는 잡지를 준비하기도 한다. 1964년 서거한다. 부인 두친스카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어느 헝가리 시인의 구절로 그가 일생 섬겼던 이름 모를 신에 대한 그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신이시여,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만약 당신이 길거리의 신문팔이 소년이라면

저는 소리 높여 신문을 팔겠습니다

4. 맺으며: 시장 유토피아와 사회라는 실체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출간된 지 65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사회 과학 전반과 역사학에 있어서 중요한 고전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저서가 회자되고 논의되는 방식을 보면 이 저서의 논지가 그 때 그 때 변하는 시대의 담론과 관심사라는 프리즘으로 굴곡되어 본래의 의도가 무시된 채 이해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거대한 전환》을 주의깊게 읽지 않은 이들은 폴라니의 논지를 단지 “시장 경제의 비인간성에 대한 고발”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국가 개입과 규제의 필연성”을 설파하는 흔해빠진 명제로 왜곡 축소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9세기 초 생 시몽(St. Simon)과 시스몽디(Sismondi)가 시장 자본주의의 폐해와 모순을 최초로 고발한 이후, 전 세계적 규모의 시장 자본주의가 지난 200년간 인간과 자연과 사회를 어떻게 황폐화시켰는가를 고발한 중요한 저작과 논자들은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다. 그 저작과 논자의 길고 긴 목록 뒤에 그저 한 사람 덧붙이는 정도로 폴라니를 이해한다면 이는 《거대한 전환》의 핵심 논지와 그 새로움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시장 경제라는 제도가 인간과 사회와 자연에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폴라니의 논지는 시장 경제의 비인간성이나 비합리성을 고발하려는 것에 있지 않다. 그의 주장은 시장 경제란

아예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적나라한 유토피아(stark utopia)”라는 것이다. 시장 경제라는 제도가 그토록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妄想)에 불과한 것이기에,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 사회가 단 한시라도 그 이상에 수렴하여 형성되는 일이란 결코 벌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에 실제로 작동하는 법칙은 그래서 모든 시장들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자기 조정 시장의 정치경제학이 아니라, 그러한 유토피아를 어거지로 현실에 덧씌우는 무리한 폭력에서 사회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자기 조정 시장과 충돌하면서 빚어내는 일대 소동 즉 “이중적 운동”의 정치경제학인 것이다.

여기에 시장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자로서의 폴라니의 시각의 새로움을 찾을 수 있다. 칼 마르크스는 시장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그 작동 법칙의 내적 모순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아예 폐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시장 자본주의 특히 금융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서 그것을 국가의 적절한 개입으로 조절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폴라니는 그보다 시장 경제란 현실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며, 거기에 담겨 있는 인간, 자연, 화폐가 상품에 불과하다는 상품 허구는 단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착각하는 일종의 상상이요 매트릭스일 뿐이라고 갈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의 방향 또한 시장 경제를 폐절하거나 국가에 의한 적절한 개입 등으로 그저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로버트 오언의 사상을 빌어 폴라니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핵심은, 이제 우리가 사회라는 실체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국가도 시장도, 이 사회라는 실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를 시장에 물어버리려 하거나 국가에 물어버리려 하는 짓은 모두 인간의 자유와 이상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비극만 낳고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폴라니가 정치경제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 사상가로서 갖는 새로움이 있다. 올바른 방향은 사회라는 실체와 거기에 담겨 있는 인간의 자유와 가치와 이상을 틀어쥐고서, 국가와 시장이 그러한 목적에 복무할 수 있는 기능적 제도로서의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폴라니가 제시하는 사회 변혁의 방향이 될 것이다.

폴라니는 아마도 20세기의 끝무렵이 되어 다시 인간 만사와 세상 만물을 상품으로 바꾸어 상품 시장과 금융 시장을 전 지구적으로 그것도 19세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규모와 깊이와 강도로 벌이자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 지구를 덮게 될 것임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분명히 자신의 시대에 “달성 불가능한 적나라한 유토피아”임이 밝혀졌다고 생각했던 시장 경제의 유토피아가 다시 한번 과학과 자유와 문명의 이름을 참칭하고 또 한번 인류의 의식을 옛날의 매트릭스로 다시 한번 뒤집어 씌우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금융 위기를 겪은 2009년의 오늘날 약 30년간 전 지구적으로 자행된 상품화(commodification)는 어쩌면 다시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전 지구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세계 경제의 조직 원리였던 금본위제가 하루 아침에 붕괴하고 그를 이어 거대한 전환의 급류가 터져 나와 전 지구를 바꾸어 놓은 바 있다. 오늘날 지구적 경제의 조직 원리인 지구적 자본 시장의 자기 균형 원리는 지금 심한 의심과 불신을 받기 시작했으며, 어쩌면 이것이 다시 급격하게 무너지는 날 새로운 거대한 전환의 급류가 다시 터져 나올 지도 모른다. 낙관도 비관도 절망도 희망도 쉽게 가지기 힘든 2009년 지구촌의 우리—어쩌면 폴라니의 이 저서는 동시대인들보다는 우리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읽히도록 쓰여진 책인지도 모른다. 시장 경제의 유토피아라는 매트릭스에서 깨어나 우리 이웃과 자연을 바로 보고 바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회 실체의 복원도 우리를 위해 그가 일생을 준비한 메시지인지도 모른다.

2

폴라니 사상과 사회적 경제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폴라니와 사회적 경제

- 일시: 2015년 7월 16일(목) 19:30~21:3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4층)

주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교육기간: 2015. 7. 9(목)~8. 20(목)

폴라니 사상과 사회적 경제

- 칼 폴라니 해제 -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1886년에 태어나 1964년에 죽은 칼 폴라니는 제국주의, 러시아 혁명, 양차 세계대전, 과시즘, 식민지 해방, 냉전 등의 역사적 대사건을 겪으며 19세기의 부르주아 근대에서 20세기의 현대로 넘어서는 숨 가쁜 역동기를 살았다. 그 역동기 속에서 다섯 나라를 옮겨 다니며 네 번의 망명을 해야 했던 칼 폴라니가 시장 자본주의라는 현대 문명의 역동을 근원적으로 통찰할 수 있었던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러한 통찰력의 바탕에는 초인적인 박학다식이 있었다. 칼 폴라니는 ‘전공이 무의미한’ 19세기적인 일류 유럽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다. 모국어인 헝가리어 외에 영어, 불어, 독일어에 능통하였고 라틴어와 그리스어 등 고전 언어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다. 젊은 시절의 미출판 초고를 보면 경제학이나 사회과학은 물론 상대성이론, 마하Mach의 자연철학, 예술이론, 셰익스피어 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는 그의 지적 이력을 알 수 있다. 그의 대표 저서인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Boston : Beacon Press, 1944/1957)》도 마찬가지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누구나 역사, 경제학, 인류학, 사회학, 사회사상사, 국제정치학 등의 분과 학문이 어떻게 것처럼 풍부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룰 수 있는지, 압도당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천재성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종교적 도덕적 영감으로 가득찬 그의 독특한 인격일 것이다. 그의 아내의 회상에 따르면 폴라니는 평생 동안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살이 마를 정도로’ 고통스럽게 고민했다고 한다. 그가 귀 기울이고 기꺼이 나누어 지려 했던 이웃의 고통은 단지 경제적인 궁핍만이 아니었다. 그의 이론적 틀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데서 오는 모든 종류의 절규와 신음을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인간 영혼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인간의 정신 깊숙이 영적 차원을 짚어내는 예언자에 가까웠다. 하지만 동시에 냉철한 현실주의적 정신의 소유자였던 그는 인간 고통의 근원을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인 제도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키에르케고르같은 이를 “철학으로 구도(求道)했던 이”라고 한다면 폴라니는 “사회과학을 무기로 택한 예언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폴라니가 평생동안 시장 자본주의와 맞서 제시했던 명제들을 개괄하고 그의 작업이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¹⁾

1. 시장이라는 신화

“태초에 개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본성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적 인간,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라는 것이다. 이런 개인들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고립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이들은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데는 타인과의 교환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교환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 노동 분업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이 확장되면서 교환에 필요한 각종 제도, 화폐, 사적 소유, 치안 유지 등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국가를 구성하고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탐욕스러운 정치가나 지배자들이 국가기구를 통해 개입하지 않는 한 시장은 인간의 본질과 부합하는 가장 자연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제도이자 사회 체제이다.”²⁾

폴라니의 이론적 작업의 첫 번째 주요한 목표는 근대인들에게 하나의 종교처럼 굳어

-
- 1) 칼 폴라니의 삶과 역사적 배경 등은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책세상)에 실린 “칼 폴라니 약전”을 참조.
 - 2) 필자는 이런 담론을 시장 신화라고 부를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장 신화는 폴라니가 구성해 낸 일종의 이념형으로, 순수하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어느 한 명의 사상가를 집어내는 것은 어렵다. 또 18세기나 19세기 초에나 통했을 법한 이 신화를 그대로 신봉하고 가르치는 지식인은 드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신화의 현실적 영향력이 사라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존 로크나 루소가 사회계약론의 전제조건으로 세운 ‘자연 상태’(State of Nature)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전혀 존재한 적이 없는 이론적 허구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 사회계약론이라는 정치철학이 무력해졌는가? 사회계약론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체제야말로 후쿠야마가 말하는 소위 ‘역사의 종말’ 이후 유일무이한 정치 체제라고 선전되고 있지 않은가? 또 오늘날 천지창조나 무구수태(無垢受胎)의 신화를 글자 그대로 믿는 기독교인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성직자들이 그들의 정신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그에 비례하여 줄어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신화 체계들의 특징은, 논리적으로 완결된 하나의 보편적인 세계상을 그려냄으로써 특수한 문제들에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은 현실적 근거가 있고 없고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신화의 체계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그리고 이런 서민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지식인으로 행세하려는 속물들이 그러한 신화를 재생산한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가설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신화의 체계로서 현대 사회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 신화를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를 따져나가는 일은 중요하다.

저버린 이러한 시장이라는 신화가 역사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완전히 그릇된 허구에 바탕을 둔 그야말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 인간 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해온 위치와 성격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1) 인간과 삶의 의미

인생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자의 화두라기엔 조금 엉뚱해 보인다. 폴라니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파고들어 자신의 이론 체계에 통합시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폴라니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의미를 논하는 글을 보면 이 물음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시장 신화 비판의 초석이 되는 그의 독특한 인간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³⁾

폴라니는 1차 대전 당시의 경험에서 햄릿을 이해하는 열쇠를 찾는다. 오스트리아 기병으로 러시아 전선에 나간 폴라니는 당시 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유럽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은 아무 의미도 정열도 찾을 수 없는 세계의 부조리 자체라고 느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폐결핵까지 앓으면서 정신적 육체적 힘을 모두 잃는다. “대낮의 밝음은 점점 좁아지는 원반에 갇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타고 있던 말이 쓰러졌는데도 안장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않고 멍하니 있다가 깔려 죽을 뻔한 일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막다른 곳에서 폴라니는 햄릿의 상태를 이해하게 된다. 저 유명한 햄릿의 독백을 보자. “살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어 없어질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저 쾌쌌던 운명이라는 년이 던져대는 돌팔매와 화살에 시달릴 것인가 아니면 저 번뇌의 바다에 맞서 무기를 들어 그 고통을 끝장내버릴 것인가? 죽는다— 잠든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햄릿은 삼촌을 죽여야 한다는 너무나 분명한,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당위 앞에서 인생의 비밀을 엿보게 된다. 그 당위를 실행으로 옮기는 선택을 제쳐놓는다면, 삶은 이제 능동적 삶(to live)이 아니라 아무 의미도 책임도 없는 그저 ‘살아 있는 것(to be)’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시달리는 것’일 뿐이다.⁴⁾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무기를 들어’ 삶을 끝내는 것이 더 능동적이라고 느낄 만큼, 햄릿은 그런 식의 생존과 죽음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죽음과 같은 삶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햄릿은 온갖 미친 행동을 일삼으며 그 당위의 수행을 질질 끌어대지만(procrastination), 결국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진정

3) Karl Polanyi, "Hamlet", Yale Review New Series 43, 1954

4) 인생이란 이 운명의 여신의 장난에 농락당하는 것이어서, 인생과 세계는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은 중세 이탈리아의 시집 《카르미나부라나Carmina Burana》에 실린 칸초네 <운명, 사바세계의 여왕>에도 보인다. “오 운명, 달님처럼 너도 변하는구나 항상 기울고 항상 이울고 / 이가 갈리는 인생 처음엔 짓밟고 다음엔 달래 주고 변덕이 죽 끓듯 하는구나.”

한 삶의 결단을 통해 복수를 끝낸다. 그리고 삶의 완결로서 죽음을 맞는다. “<햄릿>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연극이다. 죽기를 거부하는 한 우리는 모두 살게 된다. 하지만 삶이 우리를 초대하면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본질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삶에 다가서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삶에 완전히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미루고 있다. …… 인생은 인간이 놓치고 있는 기회이다.” 단순한 숨쉬기에 지나지 않는 무의미한 생존을 거부하고 의미와 결단의 시간으로 삶을 채우는 것. 그렇지 않다면 삶은 죽음보다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 또 그렇게 삶을 의미와 결단으로 채워나가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인간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폴라니의 생각인 듯하다.⁵⁾

2)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시장 자유주의의 인간관은 설 자리를 잃는다. 후자의 관점은 인간을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하나의 성격으로만 이해하는데, 이는 사실상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의의는 경제적 이익을 통한 쾌락의 추구에 있다’는 공리주의적 혹은 쾌락주의적 인생관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란 폴라니의 눈으로 보면 죽음과 다르지 않는 그저 ‘살아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막스 베버 Max Weber가 그려내는 초기 프로테스탄트 — 만약 실제로 존재한다면 — 처럼 돈벌이 자체에 초월적인 인생의 의의를 부여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돈벌이에 의의를 느끼게 되는 것은 종교적인 사색을 통해 인생과 세계의 의미를 찾은 뒤에야 가능한 것이다. 폴라니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은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하나의 본질로 환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의미와 결단으로 삶다운 삶을 꾸려가는 것이 인간과 인생의 본질이며, 그러한 삶을 위한 노동, 돈벌이, 기도, 예술, 정치, 사랑, 결투, 음주와 가무 등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본질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폴라니는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했던 초기 사회주의자 로버트 오언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오언은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끔찍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들의 경제적 궁핍보다도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릴 정도에 이른 문화적 도덕적 퇴락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오언의 사회주의 실험은 단지 노동

5) 이러한 인생관은 마르크스의 젊은 시절의 저작 《경제학 철학 초고》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과 일맥 상통한다. “노동, 생명활동, 생산적 삶 그 자체는 사람에게서는 처음에는 그저 필요욕구 즉 물질적 존재를 유지하는 필요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생산적 삶은…… 삶을 생겨나게 하는 삶이다……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은 인간의 유적 성격이다. 삶 자체는 오직 삶에 대한 수단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다.”(Marx and Engels, Collected Works, vol. 3,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5) 276쪽.

계급의 경제적 궁핍 해소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인간 활동의 기회와 능력을 개발하여 노동자들을 도덕적이고 총체적 자아를 갖춘 인간으로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가 뉴라나크에 세웠던 실험적인 사회주의 공동체나 그 뒤 영국 노동운동의 중심이 된 오언주의 운동은 따라서 다양한 교육 체제를 갖추고 인간 생활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 자체적으로 조직되는 총체적인 생활 공동체를 지향했다.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교육과 활동을 통해 총체적 인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폴라니는 오언이 19세기 사상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처럼 총체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자본주의가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였는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할 수 있었다고 본다.

3) 노동의 동기

폴라니가 강조하듯이 시장의 신화는 인간 활동 특히 노동의 궁극적 동기는 경제적인 이익과 물질적 굶주림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굶주리게 된 아담이 땀을 흘리게 되었다는 성경 이야기 외에 이런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 폴라니는 경제인류학과 역사학 연구를 통해 그런 신화가 허구임을 밝혀냈다. 동서고금의 다양한 사회를 비교한 결과 사람들이 노동하게 되는 동기는 사회에 따라 실로 다양하며 경제적 손익이라는 개인적 동기는 사회 전체의 가치와 조직에 따르는 것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손익 계산을 인간 활동의 동기로 삼는 것은 근대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일 뿐, 거의 모든 사회에서 오히려 금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음을 폴라니는 보여준다.

인간의 활동이 삶을 충만하게 채우려는 영혼의 욕구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집단적인 문화와 가치 체계를 통해서 비로소 그러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선이나 종교적 신비주의자가 아닌 한 개인이 혼자서 노동의 동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안에서 부여되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종류의 사회가 동서고금에 있어왔고, 각 사회의 문화와 가치 체계가 다른 만큼 사회에 따라 가지각색의 노동의 동기가 존재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대사회나 현대의 부족사회 모두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천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그러한 행위가 사회의 통합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폴라니는 풍부한 인류학적 역사적 예를 들고 있지만, 그가 인용한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 Margaret Mead의 다음과 같은 보고가 이러한 논점을 가장 간명하게 보여준다. “개개인들이 노동하는 목표란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문화적으로 규정되지도 않은 외적 상황 이를테면 단순히 식량이 모자라든가 하는 상황에 생리적 유기체로서 대처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미개인 집단을 금

광의 광부로 또는 뱃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미개인들이 힘써 노동할 모든 동기를 빼앗겼기 때문에 물고기가 우글대는 시냇물 옆에서 그냥 고통 없이 죽어가게 버려지는 일은 이상해 보일지 모르⁶⁾지만 이런 사례는 너무나 흔하게 발견된다고 미드는 말하고 있다.

4) 사회에 ‘묻어 들어가 있는’ 경제

여기서 시장 자본주의 외의 사회에서 경제는 사회에 ‘묻어 들어가 있다(embedded)’고 하는 폴라니의 유명한 테제가 나온다. 시장 신화에서 가장 1차적이고 주요한 개인들의 상호작용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시장에서의 교환이며, 노동 분업과 국가, 사회 제도 등은 그 결과로서 혹은 그것을 보조하는 장치로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처럼 그려진다. 그러나 역사적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실제 모습을 보면 사회적 관계와 과정이 선행한다. 경제적 과정은 따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사회적 관계와 과정의 한 측면으로서 통합되어 있다. 이를 폴라니는 ‘묻어 들어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아주 쉬운 예로 전통적인 중화 문명권에서 행해지던 조공(朝貢) 행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변방에 있는 국가들이 중원의 천자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사신과 물건을 파견하고, 중앙의 천자는 답례로 일정한 품목을 하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공은 지배 계급간의 국제 교역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 재정이 어려워 답례로 줄 만한 물품이 없을 때엔 조공을 만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국제 무역이라는 경제적 과정이 제국적인 중앙 권력과 변방의 지방 권력 간의 정치적 외교적 행위라는 정치적 사회적 과정에 그야말로 ‘묻어 들어가 있는’ 셈이다.

폴라니는 경제인류학에 기초한 말리노프스키Malinowsky와 투른발트Richard Thurnwald의 연구에 크게 의존하여, 경제적 과정이 사회적 과정에 묻어 들어가 있는 형태를 크게 호혜성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교환exchange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호혜성은 말리노프스키가 연구하여 유명해진 트로브리앙 제도의 쿨라Kula 교역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이 제도의 각 섬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붉은 팔찌가 시계 방향으로, 흰 팔찌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는 것을 말한다. 팔찌를 받은 이는 그것을 준 상대자에게 일정한 품목 — 이 품목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 을 선물하여 답례한다. 그 결과 이 교역에 참여하는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결속을 강화하게 된다. 이 교역은 ‘수백 킬로미터, 수십 년’에 걸쳐 있는 정교하고 복잡한 것인데, 팔찌를 이 교역에 참여하는 이들의 사회적 정치적 위치가 올라간다고 한다. 재분배의 고전적인 예는 북아메리카 콰키우틀족의 포틀래치potlatch풍습이다. 이 부족의 부유한 추장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물건을 마구 부수기도

6) 《거대한 전환》, 158쪽.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베블렌 Thorstein Veblen이 말하는 것처럼 추장은 이러한 과시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지만, 그 과정에 경제적인 재분배의 과정도 ‘묻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여러 지역을 점령한 광대한 제국의 중앙에서 공물의 형태로 다양한 산물을 거두어들인 후 하사의 형태로 재분배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제국에서도, 또 대기업이나 부유층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여 사회보장 제도의 형태로 하층 계급에 재분배하는 현대 복지국가에서도 이러한 재분배의 예를 찾을 수 있으며, 경제적 과정은 항상 그 정치적 과정에 ‘묻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풀라니는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 하나는, 이러한 형태들이 시장 신화에서처럼 개인들이 경제적 교환을 하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거래에 앞선 사회적 관계, 즉 지지구조supportive structure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호혜성의 경우엔 선물을 주고받는 이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대칭성이 바로 사회적 지지구조다. 그리고 재분배의 지지구조는, 물자가 집중되는 중앙이 지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런 형태로 경제적 과정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의 경제적 성격이 튀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쿨라 교역에서 팔찌를 받는 때와 답례를 하는 시기 사이에 정교한 시간 간격을 둠으로써 이 행위가 똑같은 대가를 노리는 교환 행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선물의 답례가 되도록 유의하는 것이다.

5) 시장의 역사적 위치

시장 신화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초역사적인 인간관에 따라 인간의 역사에는 항상 독자적인 경제 영역이 존재했고 그것은 시장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왔음을 함축하고 있다. 반면 풀라니는 역사적으로 경제는 대부분 위에서 본 호혜성이나 재분배와 같이 ‘사회적 과정’에 묻어 들어가 있었고 시장에서의 교환은 오히려 예외적이거나 부수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9세기 말 카를 뷔허Karl Buecher와 에두아르트 마이어Eduard Meyer의 논쟁 이후 고대 경제의 성격을 놓고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마이어를 비롯한 사학자들은 고대 경제의 근본적 성격이 현대의 시장 경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여러 개념 도구들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뷔허 편에 선 사학자들은 고대 경제는 현대 시장 경제와 질적으로 다르므로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한다. 풀라니는 아마도 후자 진영의 가장 강력한 선수라 할 것이다. 그는 함무라비 법전과 관련 문헌을 꼼꼼히 연구한 끝에 옛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에는 아예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고대 그리스 경제에서도 시장은 예외적이거나 나중에야 발명된 제도였다고 말

한다.

시장에서의 교환은, 호혜성이나 재분배와는 달리 어떤 인격적 사회적 관계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물적 관계이다. 따라서 시장이 주요한 경제 제도가 될 때 기존의 사회적 관계는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사회적 관계와 모순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주요한 경제적 통합 형태는 앞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과정에 묻어 들어가 있으므로, 시장이라는 제도는 오로지 사회와 사회 사이 즉 대외 교역이라는 장에서만 작용할 수 있다.⁷⁾ 그리고 시장 제도가 기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금기가 마련되어 있었다. 또 원거리 대외 무역이라는 초기 시장 교역의 형태가 평화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 기원을 볼 때 사실 원거리 교역은 약탈이나 도적질 같은 행위와 쉽게 구별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6) 시장의 진화와 국가의 역할

시장 진화는 일종의 진보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장과 경제 영역은 처음부터 인간 사회에 있어왔지만, 그 풍부한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인류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기까지는 탐욕스러운 국가나 무지몽매한 종교와 관습 등 수많은 사회적 장애물들과 몇천 년 동안 투쟁을 벌여야 했다. 근대 서양의 합리적 이성의 진보에 힘입어 시장은 19세기에 들어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다. 그 뒤 국가와 기타 사회제도는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다시 정비되었는데, 특히 이상적인 국가 형태는 시장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것 외에는 자유방임을 원칙으로 하는 최소 정부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진화의 내용이다.

그러나 플라니는 역사적으로 항상 억제되거나 부속품에 머물렀던 시장이 근대 유럽에서 주된 경제제도가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국가의 개입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역사 속에서 시장이라는 제도가 자연적이기는커녕 곳곳에서 억제되는 부수적인 경제제도였다면, 시장 제도로 경제 전체를 조직하는 현대의 시장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 개입과 폭력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다.

중세까지도 유럽에서의 시장 교환은 위에서 플라니가 설명한 경제와 시장 제도의 일반적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시간의 대외 교역은 각 도시 주변의 국지 시장과 효과

7) 시장이라는 제도의 기원이 본질이 이렇게 사회 바깥에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마르크스, 베버, 플라니의 견해가 같다. 《정치경제학비판요강Grundrisse》의 서문이나 《자본론》 1권의 1장과 2장에서 마르크스는 상품적 교환은 그 기원을 볼 때 공동체 외적인 관계에서만 시작된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며, 베버도 시장적 관계의 몰인격성에 주목하여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질서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사회 외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Max Weber, "Market: Its Impersonality and Ethic(fragment)" in *Economy and Society* vol. 2, (New York : Bedminster Press, 1968).

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시장 제도가 장원 같은 봉건적 경제체제와 뒤섞이는 일은 드물었다. 그런데 16세기 들어 강력한 주권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절대주의 군주들은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야 했고, 또 독립적인 지역 권력으로 할거하는 도시나 특권체들을 깨뜨려 통일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이에 그들은 각종 특권을 누리던 도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적인 전국적 시장을 건설하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국가와 사회제도의 질곡으로 시장의 발전이 제약당하기는커녕, 강력한 주권을 얻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던 근대 국가가 출현하는 과정의 부산물으로써 역사적으로 아주 특이한 전국 규모의 시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상주의 국가는 한편으로는 시장의 발전을 촉진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영국을 비롯한 나라에서 시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면서 현대의 시장 자본주의 사회가 출현한다. 폴라니는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능동적 활동이 시장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중반에 자유 무역, 금본위제, 구빈법 철폐 등의 조치를 감행했던 영국은 사회 전체가 시장 자본주의의 작동에 순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엄청난 규제를 했다는 것이다. 소위 자유방임국가의 고전적 모델로 알려져 있는 당시의 영국이 자유방임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그렇게 많은 규제를 가했다는 기묘한 역설이다. 여기서 폴라니의 유명한 패러독스가 나온다. 자유방임은 국가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2. 시장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 — 이중적 운동

이처럼 폴라니는, 시장 경제야말로 인간의 본질에 가장 적합한 자연적인 제도라는 시장 신화가 역사적 인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허구가 하나의 허구나 가설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 사회를 근본적이고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유토피아’ 이데올로기로 변할 때, 또 그런 ‘유토피아’가 현실의 권력을 장악하여 사회 전반에 강요될 때 재난이 시작된다. 그러한 ‘유토피아’는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일 뿐이므로 그것을 사회 전반에 강요한다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이라는 유토피아를 강요할 경우 사회 전체가 엄청난 모순과 격동에 휘말리게 된다. 둘째, ‘유토피아’라는 허구가 마치 과학적인 법칙인 것처럼 통용되면 사람들의 이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역동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마비되므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된다. 따라서 폴라니는 시장 신화라는 허구 대신 실제 시장 자본주의 사회의 역동을 설명할 현실적인 정치경제학을 확립하려고 한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작업의 방향이며, 그 결

실이 대표 저서인 《거대한 전환》이다.

1) 대체적 정치경제학의 필요성

특히 폴라니가 안타까워한 것은 위의 두 번째 측면이다. 19세기와 심지어 192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유럽 지식인들은 시장이라는 ‘유토피아’를 과학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었고, 또 자신들이 만들어낸 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그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줄 알고 있었다. 세계적 규모의 금본위제와 자유무역을 보장하기만 하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나라의 경제가 저절로 균형과 번영을 이루도록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경제와는 완전히 분리된 사안으로,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든 개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법을 만들어 그 법에 따라 통치하는, 즉 대의제와 입헌주의라는 절차적 합리성만 확보되면 정당을 얻고 정치도 안정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강대국의 발호를 견제하기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가운데 다다른 일종의 균형 상태인 세력 균형이라는 장치를 통해 국제 평화가 달성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1873년에 시작된 세계 공황을 거치면서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본격화되었고 적자국과 흑자국이 뚜렷이 나누어지면서 세계 시장의 소위 자동조정은 이름뿐이었다. 영국의 단기 자본 수출을 통해 세계 각국의 수지 불균형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국내 정치를 보면 좌파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또 우파의 군국주의가 강력하게 입헌주의나 대의제니 하는 제도를 밀치고 현실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식민지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으로 이어졌다. 근본적으로 세력 균형이란, 균형 상태가 본디 그렇듯이 현상 유지를 전제로 했을 때에나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찾아 미친 듯이 팽창하려는 상황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결국 1차 대전이 터지게 된다.

하지만 시장 신화와 자유주의적 세계관은 이러한 현실과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인들의 의식을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19세기로 복귀하는 것 말고는 어떤 대안도 생각할 수 없었다. 이미 그러한 세계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현실을 파악할 능력이 마비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는 윌슨 대통령 주도 아래 베르사유 체제 — 어떤 면에서는 더욱 ‘급진적/근본적(radical)’인 자유주의적 세계관으로의 복귀한 것이다 — 를 구축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전후 복구가 시급한 각국 경제에 극약에 가까운 처방인 금본위제 — 그것도 평가절하 없는 — 로 복귀하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 나온 것이다.⁸⁾ 이러한 유토피아적

8) 이러한 1920년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Charles Maier, *Recasting Bourgeois Europe*(Princeton :

인 시도가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한 이는 폴라니뿐이 아니었다. 카E. H. Carr도 전후 체제를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시도로 진단하고, 그러한 미몽을 가져오는 데 기여한 자유주의적 이상주의를 거세게 공격했다.⁹⁾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도 베르사유 회담에 파견되었던 1919년부터 유럽인들의 유토피아적 사고에 절망하고 있었다. 1925년 영국이 금본위제로 복귀하자 그는 유럽인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자유방임 시장이라는 괴물과 금본위제라는 ‘미개사회의 유물’이 그러한 유토피아적 사고의 바탕이라고 지적했다.¹⁰⁾

폴라니는 이처럼 잘못된 현실 인식이 낳은 비극의 하나가 과시즘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는 시장적 자유주의의 신화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넘어서서 현실의 역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현실주의적인 정치경제학이 필요하다.

2) 자기조정 시장과 허구적 상품

이 개념은 본문에 실린 《거대한 전환》의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 반복하여 설명하지는 않겠다. 어떤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폴라니는 인류 역사에서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 항상 존재해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러한 시장이 전체 경제 조직에 부수적인 것으로 머물도록 사회가 항상 억제해왔기 때문에 가격 결정 기능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산업혁명 후 산업의 모든 투입물과 산출물들의 가격을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개별 시장이 모든 사회적 제약 조건에서 풀려나와 자신들끼리의 일관된 시장 체계를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자기조정 시장self-regulating market의 개념이다. 이 개념에서 중요한 핵심은, 인간, 토지, 화폐가 상품으로 매매되는 노동 시장, 토지 시장, 화폐 시장 등의 요소 시장이 존재하는가이다. 모든 산업 체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이 세 가지 요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참조. 그는 폴라니와 매우 비슷하게 1920년대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돌이켜보건대, 부르주아 사회는 보수적인 유토피아(칼 만하임적인 의미에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 일단 옛날을 단순히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자 유토피아로서의 부르주아 사회는 보수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합주의적 전략을 고무했다…… 부르주아적 유토피아와 조합주의적 결과 사이의 긴장—이는 역사에서 결코 풀기는 법이 없는, 인간들의 의도와 그 의도가 집단적으로 실현되는 것 사이의 변증법의 일부이다.”(15쪽.)

9) Edward Hallet Carr,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second edition(New York : Harper and Row, 1946/1964). 이 저서는 현대 국제 정치학의 효시로 평가받는 고전이다.

10) J. M. Keynes, "Economic Consequences of Mr. Churchill" in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9 D. Moggridge ed.(New York : St. Martin's Press, 1925/1977); A Tract on Money Reform(London : Macmilan, 1923)

소의 가격이 완전히 시장의 수요 공급에 맡겨지지 않는다면 전체 시장 체계의 자기조정 기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9세기 초에 벌어진 미증유의 상황에서 폴라니는 이 세 가지 완전히 자유로운 요소 시장이 성립했다고 주장한다.¹¹⁾

그런데 인간, 토지, 화폐는 신이 창조했거나 인간의 사랑으로 태어나거나 신용과 채무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다. 결코 판매하기 위해서 더 많이 혹은 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기조정 시장에 꼭 필요한 요소 시장을 확립하려면 이 세 가지 존재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품이라는 일종의 허구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세 가지 물건은 허구적 상품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3) 사회의 존재론적 안정성과 자기 보호 운동

폴라니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말이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의 정치경제학에서 사회의 자기 보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필연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개념은 ‘사회적 존재론적 안정성’이다. 사회를 하나의 구조물에 비유한다면, 인간과 자연은 그 구조물의 실체인 벽돌과 철근이다. 그리고 사회 체제나 제도란 벽돌과 철근이 서로 결합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때 그 결합 방식, 즉 체제나 제도의 우월성을 논할 수 있는 규범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라는 실체가 어느 만큼이나 자유와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키는가, 그것이 아닐까. 사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동료 인간들과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자연과 교호하는 방식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안정성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회의 제도가 그 존재론적 안정성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장의 자기조정 과정이 인간과 자연에 가져온 결과가 바로 이 존재론적 불안정성이다. 폴라니는 이 점에 주목한다. 여기서 인간, 자연, 생산조직 세 가지를 다 논할 수 없으니 인간의 경우만 생각해 보자. 흔히 얘기하는 ‘노동 시장의 탄력성’이라는 말은 경제 상황에 따라 해고와 고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자 편에서 보면 이는 시장의 자기조정을 위해 자신들의 존재론적인 안정성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노동 시장의 인간을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일손, 즉 공급으로 생각하여, 수요와의 균형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임금을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부평초로 생각하는 경향

11) 이러한 폴라니의 주장을 “산업사회 이전에는 모든 시장이 규제되어 자유로운 가격 결정 시장 따위는 없었다”고 오해한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 아날 학파의 거장 페르낭 브로델 Fernand Braudel이다. 비록 오해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브로델의 폴라니 비판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18th Century, vol. 2 The Wheels of Commerce(New York : Harper and Row, 1979/1982), 225—226쪽.

이 있다. 고용 정보만 확실하게 주어지면 오늘 해고당한 구미 공장의 텔레비전 조립공이 내일 여의도 빌딩의 수위가 되고, 내일 또 잘리면 모레는 가락동 수산시장의 짐꾼이 된다는 식이다. 이론으로나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자. 그런데 내일 일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삶을 존엄과 행복을 갖춘 안정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경제학자들이라면 이런 삶을 만족스러워할까. 대학의 인원 감축 방침으로 해고당한 경제학 교수들은 저 위대한 시장의 자기조정과 노동 시장의 탄력성을 위해 내일은 아파트 수위로, 모레는 증권 회사로 기꺼이 달리고 달릴 수 있을까. 혹시 머리띠 둘러메고 “고용 안정 보장하라”고 외치지 않을까. IMF 이후 대량 해고가 줄을 이을 때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대량 해고를 해야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을 통해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고 그래야 다시 일자리가 생긴다고 계몽의 목소리를 높였다. 설령 그대로 된다고 해도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1년 혹은 2년? 경기 순환의 장기 추세 그래프에서 1, 2년은 대단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인생에서 1년 2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사이에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 남편에게 영원히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도 있다. 또 노숙자가 되어 몸을 망칠 수도 있으며, 그 사이 전셋값을 까먹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다. 여기서 시장 자본주의나 경제학자들이 비인간적이라고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옳건 그르건 자기조정 시장의 작동이 요구하는 ‘탄력성’이라는 것이 인간과 자연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존재론적 불안정성’을 안겨준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업들마저 시장의 자기조정에서 파생되는 존재론적 불안정성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된다. 노동조합, 곡물에 대한 보호 관세, 사회 입법과 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과 탄력적 금융제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 및 교육 제도 실시 등 시장의 횡포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사회적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폴라니가 지적하듯이, 소위 자유방임 체제라는 것이 국가가 강제한 것인 반면 이러한 보호 운동은 자생적으로 그야말로 자유방임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운동의 소용돌이에 인간, 자연, 생산 조직이라는 벽돌, 철근, 목재가 휘말려들어 사회라는 구조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보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폴라니는 이를 ‘사회의 자기보호’라고 부른다.¹²⁾

12) 폴라니는 이러한 자기보호 운동이 항상 진보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일관되게 시장 자본주의를 견제하는 세력 중에는 항상 진보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노동 계급의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대조적으로 토지에 기반을 둔 보수반동적인 성격을 띤 토지 기반 세력들—토지 귀족, 교회, 반동적 농민 운동, 군국주의 등—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다. 폴라니는 파시즘의 기원을 사회의 자기보호운동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반동적인 흐름에서 찾고 있다. 그 내용은 개인의 자유나 민주주의처럼 시장 자본주의에서 이룩한 모든 진보적인 것들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퇴행시키려는 것이다. 필자가 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동의 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이다. 그 반대의 방향이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

4) 이중적 운동

폴라니의 정치경제학의 핵심 주장은 위에서 본 두 가지 모순되는 운동 경향, 즉 이중적 운동이 시장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역동성이라는 것이다. 이 이중적 운동에서 시장의 ‘유토피아’적인 성격 그리고 그 유토피아를 강요함으로써 나타나는 뜻밖의 현실적 결과라는 폴라니의 관점이 집약되어 나타난다. 사회의 한 부분에서는 국가 기구를 통해 사회 전체를 시장의 자기조정애 순응시킴으로써 시장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순수한 ‘시장적 사회’를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런 운동은 사회 조직의 뼈대인 인간과 자연의 존재론적 안정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마찬가지로 국가 기구의 힘을 빌려 시장 경제에 개입하고, 시장으로부터 사회 조직을 지키려고 애쓰게 된다. 이 두 운동은 서로 모순된다. 시장으로의 운동이 확장될수록 인간, 자연, 생산 조직의 고통은 심해진다. 그리고 사회의 자기보호가 강화될수록 요소 시장이 경직되고 시장의 자기조정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한편 이 두 대립물은 통일되어 있기도 하다. 사회의 생산 과정이 시장이라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모든 계급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자기보호를 통해 사회의 기본 조직이 유지될 때에만 비로소 시장 경제도 작동할 수 있다.

결국 시장 자본주의는 자신의 터전인 사회 기본 조직의 파괴라는 모순을 그 안에 품고 있으므로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일 뿐이다. 그것을 모른 채 시장만을 강요하면 이렇게 모순되고 아슬아슬한 이중적 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폴라니는 19세기 이후의 사회사 전체를 이 이중적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5) 세계 체제의 긴장

이 이중적 운동은 분명 모순된 것이며, 그 모순의 긴장은 결국 세계 체제의 붕괴를 낳는다. 폴라니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정치와 경제라는 틀로 보았을 때 19세기의 세계가 입헌주의 정치, 시장경제, 세력 균형, 금본위제라는 제도적 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미 20세기 초의 국가를 보면, 위에서 본 사회의 자기보호로 인해 중앙은행을 통한 탄력적 통화 공급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정 확장을 통한 사회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내걸었던 입헌주의 원칙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국내 경제의 불황으로 실업이 발생하면 국가는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쓰려는 유혹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금본위제 아래 고정되어 있는 외환의 가치를 떨어뜨릴 위

는 것일 수도, 또 더 어두웠던 과거로 돌아가는 반동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폴라니의 주장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힘이 있었다. 결국 이중적 운동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느껴지는 곳이 시장 확장의 도구 이면서 동시에 또 경제 개입의 도구이기도 하였던 국가 기구였던 셈이다.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외 무역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어 국내의 시장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사회의 자기보호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해야 했다. 내부의 모순을 외부로 표출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가 민족국가 단위로 강력하게 결집했다. 폴라니는 19세기 말의 민족국가가 느슨했던 전 시대의 민족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뭉친 하나의 ‘갑각류’로 변해버렸다고 말한다.¹³⁾

그 결과 세계의 정치 경제는 경쟁적인 무역 전쟁, 식민지 확장, 제국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변화가 세력 균형 체제를 무너뜨려 1차 대전으로 이어진다. 또다른 차원에서의 국제 체제인 금본위제는 1930년대 들어서 붕괴되는데, 이는 1차 대전을 거치면서 각 나라의 계급 판도에 나타난 결정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전쟁에 동원된 노동 계급, 농민, 여성 등의 서민들의 정치 진출이 크게 늘어나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입각한 19세기의 보수적 부르주아와 국가가 대중 민주주의 국가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금본위제로 복귀하는 것은 시장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활발하게 개입해야 했던 그 대중 민주주의 국가에게 19세기 국가에나 걸맞은 균형 재정과 보수적 통화 정책을 강요하는 ‘족쇄’¹⁴⁾가 되었다. 미국의 자본 수출로 그러한 틈을 메꾸었던 1920년대에는 모순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1929년 주식시장이 대폭락함으로써 유럽의 미국 자본이 본국으로 급히 철수하자마자 금본위제는 바로 위기를 맞는다. 그리고 1931년 당시 금환본위제의 기축통화국이던 영국이 금본위제 탈퇴하고 공황과 금융 위기에 편승한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종말을 맞게 된다.

요컨대, 이 이중적 운동의 모순은 민족국가라든가 제국주의 중상주의 등의 방법으로 그 폭발이 지연되고 또 전가되기도 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세계 체제 차원의 위기 모습으로 나타내는 셈이다.

6) 파시즘의 출현

폴라니는 이중적 운동의 모순이 낳은 파국이 파시즘이 승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

13) 볼셰비키 이론가 부하린의 ‘국가—자본 트러스트’ 개념에서도 이러한 폴라니의 진단과 비슷한 분석이 보인다. 주로 20세기 초의 독일 자본주의를 모델로 한 이 개념은 노동자, 농민, 자본가가 민족국가기구를 매개로 뿔뿔 뭉쳐서 단일한 이익의 집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ikolai Bukharin, *Imperialism and World Economy* New York : Howard Fertig, 1917/1966). 이 책은 1980년대 지양 출판사에서 지은이를 밝히지 않은 채 ‘제국주의론’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바 있다.

14) 아이헨그린의 표현이다. Barry Eichengreen, *Golden Fetters : The Gold Standard and the Great Depression, 1919~1939*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참조.

고 분석하고 있다. 이중적 운동의 논리적 구조에 내재한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자기조정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회 전체를 시장에 순응시키려는 운동과, 그 반대로 자기조정 시장의 영역 밖으로 사회를 끄집어내려는 자기보호 운동이 같은 사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나의 사회가 것처럼 모순된 두 가지 경향을 동시에 떨 수 있는가. 자기조정 시장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계급은 경제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게 마련이다. 특히 1차 대전이 끝나고 선거권이 확대된 뒤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을 선도하는 노동자나 토지 세력은 의회와 국가 기구의 정치 영역을 장악했다. 하나의 사회를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두 운동의 모순은 결국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사태를 낳았다. 즉 자본가 계급이 장악한 산업과 경제가 인민 세력이 장악한 국가 기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파국 상태에서, 대중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치 영역을 산업과 경제 영역의 요구에 종속시키는 수단으로서 파시즘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민주적 사회주의를 향하여

그렇다면 어떠한 사회 경제적 질서가 좀더 많은 자유와 인간적 존엄, 그리고 안정을 보장하는 대안적 체제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폴라니의 세 번째 화두다. 폴라니는 1910년대부터 이미 사회주의자가 되었으며 죽을 때까지 사회주의자로서의 그의 신념은 모든 학문적 사회적 활동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으며, 그의 아내의 말에 의하면 “사회민주주의자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가 꿈꾸었던 이상적 사회주의는 어떤 것이었을까? 앞의 두 가지 방향에서의 작업과 비교해 볼 때 이 방향의 폴라니의 연구는 산발적이고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그가 초석으로 삼았던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은 독창성과 적실성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1) 청년 마르크스의 영향: 인격적 관계로서의 공동체

폴라니와 마르크스주의의 관계는 양가(兩價)적이다. 폴라니는 마르크스주의의 객관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심하게 반발했지만, 1844년에 쓰여져 1932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경제학 철학 초고》에 나타난 젊은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는 강렬한 긍정과 열정적 찬사를 보내고 있다. 폴라니는 생산력의 발전을 매개로 역사와 사회 진보의 필연성을 역설하는 제2인터내셔널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진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라 만유인력에도 불구하고 새가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는 것”라고 말

한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결단이 지니는 중요성을 옹호한 것이다.¹⁵⁾ 그리고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마르크스의 경제학에 대해서도 리카도의 잔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기계론적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¹⁶⁾

하지만 《경제학 철학 초고》에 나타난 젊은 마르크스의 주장에서 폴라니는 자신의 사회주의적 이상의 핵심이자 시장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데도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의 영감을 얻는다. 바로 사회가 인격적 존재 사이의 관계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맺는 모든 사회적 관계는 계약과 상품 거래라는 시장 허구의 틀을 빌려서만 나타난다. 사람과 사람이 개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일부분으로서 비인격화된 모습으로만 비로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비인격화를 없애고 다시 인격적 관계로서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폴라니의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폴라니는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방식, 즉 합리적인 중앙계획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제도를 세우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관점에 반대한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인격적 존재로서 관계 맺는 것을 도와주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¹⁷⁾

15) 하지만 폴라니는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헝가리 공산당의 당원이었다. 이 일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폴라니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가 마르크스주의 운동에 취했던 태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 직후 중동부 유럽을 휩쓸었던 사회주의 혁명의 물결 속에서 헝가리에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이 수립되어, 루카치 Gyorgy Lukacs 등 많은 폴라니의 친구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당시 전쟁에서 막 돌아와 아직 폐결핵을 심하게 앓고 있던 폴라니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여러 차례 좌익 정권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극우세력의 쿠데타로 좌익 정권이 무너지고 많은 혁명가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망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내 일로나(Ilona)의 회상에 의하면, 쿠데타 소식을 접한 그 날, 폴라니는 공산당 입당을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루카치에게 보낸다. 어느 편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정치적 결단의 순간에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사상이 일치하지도 않는 집단에 지지를 보냄으로써 내면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던 폴라니의 인격적인 면모가 인상적이다.

Karl Polanyi in Vienna, ed. by K. Polanyi-Levitt et.al. (Montreal: Black Rose Books, 2000) 309쪽.

16) 폴라니는 멩거 Carl Menger나 뵘-바베르크 E. Boehm-Bawerk 같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 이론을 따르고 있다. 그는 한계효용가치론이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 여지를 둔다는 점에서 노동가치론보다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이론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사회주의 경제학자 가운데 한계효용론에 기반한 유일한 예가 아닐까 싶다.

17) 1844년 노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마르크스의 구절과 대비해보라. “(사회적 생산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를 위해 네가 너의 유(類)와 연결될 매개자가 되어주며, 따라서 너 자신은 나를 너 스스로의 본질적 성격의 완성으로서 또 너의 필수적인 일부로서 느끼고 인정해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너의 생각과 너의 사랑 모두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가 확고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Collected Works, vol. 3, 228.)

2) ‘길드’ 사회주의

그렇다면 그런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까? ‘길드’ 사회주의는 영국의 콜 G. D. H. Cole 등이 벌였던 사회주의 운동의 일파를 부르는 이름이지만, 폴라니가 생각했던 사회주의의 이상과 닮은 점이 많다. 폴라니나 콜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폴라니와 관계했던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오토 바우어 Otto Bauer 등이 주장한 기능적 사회주의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길드gild에 속한 생산자들은 전체 공동체의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을 주도하고, 작업장에서 단지 보수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공동체라는 조합적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주의도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조합과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조합을 만들어 조합들의 직접적인 모임과 토론 속에서 생산의 양, 방법, 분배 등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폴라니의 사회주의적 이상은 단지 시장 자본주의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전략, 즉 국가 기구가 전체 권력을 행사하는 계획적인 통제 경제에 대한 반대를 함축하고 있다.¹⁸⁾

3) 지역주의적인 세계 질서

하지만 19세기처럼 또 21세기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전 세계적인 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를 장악하면 이처럼 다른 종류의 경제 체제는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다. 폴라니는 지역과 문화에 맞는 다양한 성격의 경제 체제가 번성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정치 경제 환경을 선호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난 뒤 세계 질서를 다시 전 세계적인 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로 몰고 가려고 한 미국의 시도에 반대하고,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다원적인 세계 질서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가 죽기 전에 냉전과 핵전쟁의 위협에 대항하여 잡지 《공존Co-existence》을 창간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던 것도 이러한 시각에 따른 것이다.

시장이나 재분배, 호혜성 가운데 하나를 택해 단일한 형태로 경제 체제를 세우기보다는 경제 관계가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이들 원리가 다양하게 적용되면서 서로 공존하며 연결되는 복합적인 경제 질서를 좋아하는 듯하다. 그가 미래의 바람직한 세계상을 그리면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바빌로니아 같은 고대 제국을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가령 부존자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 교역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때 이를 매우 불안정하고 열강의 격전장이 되기 쉬운 국제 원자재 시장에 맡기는 대신 자원의 재분배를 전담하는 국제기구를 창설한

18) 자세한 내용은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책세상)의 본문에 실린 “우리의 실천과 반성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 참조.

다든가, 규모가 비슷한 지방 자치체들처럼 같은 규모 안에서 벌어지는 경제 행위에는 호혜성의 원리를 적극 이용한다든가 하는 예를 들 수 있다. 자연의 생태계도 다양한 원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듯이, 건강한 인간의 경제라는 것도 다양한 원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탄력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4. 폴라니의 영향

폴라니의 첫번째 책이자 대표작인 《거대한 전환》은 1944년 처음 출판되었는데, 당시에 큰 반응을 얻었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폴라니 연구의 여러 흐름과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다.

1) 경제인류학

경제인류학은 폴라니의 영향이 가장 안정적으로 ‘담겨’ 있는 분야인 것 같다. 앞에서 보았듯이, 폴라니는 근대의 시장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 대해 시장 자본주의를 분석하는데 쓰이는 개념 틀—최적화, 자본 축적, 화폐, 가격, 수요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했다. 이는 원시 부족들의 경제생활을 경제인류학적으로 연구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이라고 폴라니와 그의 제자들은 믿고 있었다. 따라서 시장적 개념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존의 경제인류학 전통과 크게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시장적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는 형식주의(formalism)와 비(非)시장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할 때는 좀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개념 틀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 폴라니 일파의 실체론(substantivism)이 맞선 것이다. 실제로 폴라니도 만년에 스스로 보편적인 경제 연구의 틀과 개념을 짜서 ‘실체 경제학’이라 할 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¹⁹⁾ 노스웨스턴 대학의 조지 돌턴George Dalton 교수가 오랫동안 실체론 진영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논객이었다. 최근에는 폴라니와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결합하여 비교경제 연구의 방법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신시내티 대학 인류학과의 로다 헬퍼린Rhoda Halperin 교수의 작업이 주목할 만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폴라니 일파의 방법이 경제인류학 분야에서 확고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폴라니의 영향력이 1970년대 초반까지도 오랫동안 경제인류학의

19) 이러한 노력이 거둔 주요한 성과는 *Livelihood of Man*, Harry Pearson ed.(New York : Academic Press, 1977) 일부분에 실려 있다.

영역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아마 폴라니는 무엇보다도 경제학에 도전하려 했을 텐데, 오늘날 경제학의 주류인 미국 경제학에서 폴라니의 영향력은 아직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하긴 요즘 미국 경제학에서는 케인스도 경원시되는 상황이니 폴라니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인류학은 폴라니의 영향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그것이 위협하게 경제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억제하는’ 그릇이 되어왔는지도 모른다.

2) 역사 / 고전 연구

앞서 얘기한 고대 경제의 성격 논쟁에서 적어도 서양 고전 경제에 관한 한은 핀리 Mose I. Finley 같은 권위있는 연구자들이 폴라니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어 한결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핀리도 폴라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동양사의 오펜하임 A. L. Oppenheim이나 서양 경제사의 노스 Douglas North도 폴라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의 사회사가 에릭 홉스봄 Eric Hobsbawm은 특히 영국의 구빈법과 관련하여 폴라니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대한 전환》을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연구로 꼽는다. 톰슨의 《영국 노동 계급의 형성 Making of English Working Class》도 폴라니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폴라니에게 영향을 끼친 오언이나 해몬드 부부가 톰슨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폴라니가 《초기 제국의 교역과 시장 Trade and Market in Early Empires》에 실은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발견하다 Aristotle Discovers the Economy>라는 논문은 그때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을 해석하는 주된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를 자극하여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3) 사회학

겉으로만 보아도 시장 체계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월러스틴 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은 폴라니로의 영향을 크게 입었다고 보인다. 오랫동안 월러스틴과 같이 세계체제론을 정초한 테렌스 홉킨스 Terrence Hopkins가 1950년대에 폴라니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조직했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그 성과물로 펴낸 《초기 제국의 시장과 교역 Trade and Market in Early Empires》에 글을 썼다는 점은 흥미롭다. 경제 사회학에서 독특한 접근으로 튼튼하게 자리잡은 프레드 블록 Fred Block도 폴라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4) 정치학 및 국제 정치경제

1970년대 들어와 미국 정치학이 정치와 경제 영역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이며 소위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라는 하위 영역을 낳으면서 폴라니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정황은 한때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 교과서로 쓰인 린드블럼(Charles Lindblom)의 《정치와 시장》²⁰⁾에서도 읽을 수 있다. 또 국제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러기(John G. Ruggie)가 1982년에 발표한 논문²¹⁾에서 2차 대전 뒤의 브레튼 우즈와 가트(GATT)의 제도적 성격을 설명하면서 폴라니의 논지를 이용하여 ‘묻어 들어간 자유주의’라고 표현함으로써 폴라니가 주목받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국가와 시장의 관계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이제 폴라니는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고전적인 이론가의 자리에 오른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 설정’이라는 틀에 폴라니를 끼워 맞추다보니 단순히 ‘자유방임 시장의 효율상의 한계’를 경고한 케인스주의자나 그 밖의 국가 개입론자의 하나로 그를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근본적인 사회사상이나 사회주의사상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듯하다. 러기가 쓴 ‘묻어 들어간 자유주의’라는 일종의 형용모순—러기는 전후의 시장 자본주의가 단지 국가 개입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도 폴라니가 정치학 분야에서 얼마나 편의적으로 단순화되어 이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로버트 콕스(Robert Cox)나 스티븐 길(Stephen Gill) 등을 비롯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서 국제 정치경제를 분석하는 소위 신그람시학파(neo-Gramscian)의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폴라니를 매우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폴라니의 ‘이중적 운동’의 개념을, 현재의 시장적 지구화가 불러올 전 지구적인 역사적 블록의 재편 과정을 분석하고 또 진보적인 변혁을 계획하는 데 주요한 개념으로 활용하려 한다.

20) Charles Lindblom, Politics and Markets(New York : Basic Books, Publisher, 1977)

21)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 2, Spring 1982.

폴라니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와 그와 연관된 다른 말들—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등—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 개념을 이루는 이론적 실천적 경험은 물론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만능주의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정치 경제 담론이 지난 30년간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노정된 많은 문제들과 한계들을 놓고 이를 타개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특히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를 경과하면서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의심과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더욱 증폭되어, 특히 유럽 몇몇 나라를 필두로 하여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을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대한 일의적인 명확한 정의는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¹⁾ 이 말을 사용하고 논구하는 나라 및 지역이나 주체에 따라 이 말은 오히려 주어진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일종의 ‘벤처 창업’으로 이해되고, 사회적 경제는 공공근로 사업을 대체할 ‘일자리 창출’의 한 방편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국적 맥락에서는 최근의 한국적 맥락에서 이러한 난맥상은 더욱 더 많은 이론적 실천적 혼란을 낳을 위험이 있다. 무엇을 정의(define)한다는 것은 그것이 괴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선(fine)을 놓는다(de-)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경제라는 독특한 영역의 경계를 명확하게 할 개념 정리 작업이 뒤로 미루어지고 그래서 그 경계선이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는 자칫 국가나 시장 영역에 의한 침윤을 계속 허용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제인류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몇 가지 사유는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논의에 중요한 출발점을

1)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말 자체도 과연 이것이 적합한 용어인지 아니면 특정한 이론적 실천적 편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용어로서 검토해 봐야 할지도 문제가 된다. 프랑스의 일군의 학자/실천가 그룹은 이 때문에 이 용어보다는 ‘또 다른 경제’라는 말을 제안하기도 하고 있다. 김신양 편역, 알랭 까이에 외 《다른 경제》(실업극복국민재단, 2006) 참조.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그의 ‘살림살이의 영역으로서의 경제’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가—시장—사회’라는 삼발이(tripod)의 생각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인간 발전의 장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조합하기를 시도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가 한국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갖는 적실성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1. 경제: 최적화 행위의 영역이 아닌 인간 살림살이의 영역

폴라니는 먼저 우리가 흔히 ‘경제’라고 부르며 쓰는 말에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경제의 정의가 중첩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 둘을 분리할 수 있어야 혼동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 첫 번째 정의는 단순히 인간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욕구들(needs, wants)을 충족하는 데에 필요한 물적 수단을 조달하는 행위로서의 경제이다. 사람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필요욕구들을 생성하게 되며, 삶이란 바로 이것들을 충족하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다. 이 필요욕구가 ‘천한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등등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종류의 욕구이건 그것을 충족하는 데에 유형 무형의 수단이 필요하다면 사람은 그것을 조달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되어 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며 삶을 영위하는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과 생명 활동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체적 경제(substantive economy)라고 폴라니는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류의 경제의 개념을 우리 고유어를 써서 표현한다면 ‘살림살이로서의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의 경제는 이와 달리 순수하게 추상적이며 논리적으로 구성된 형식적 경제(formal economy)이다. 추상적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은 자명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희소성(scarcity)이라는 조건에서 볼 때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유한한 수단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택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며, 결국 가장 ‘알뜰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게 된다. 이러한 ‘아낌(economize)’, 즉 요즘의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로 ‘최적화(optimize)’하려고 하는 행위를 모두 인간의 경제 행위로 보는 것이 이 정의에서의 경제이다.

폴라니가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번째 의미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돈벌이 경제’

2) 폴라니는 이를 최초로 명확하게 인식한 이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조인 칼 멩거(Carl Menger)였다고 지적한다. Karl Polanyi, "Carl Menger's Two Meanings of Economic," in G. Dalton ed., *Studies in Economic Anthropology*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971). 하지만 인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물적 수단을 조달하기 위한 획재술(chrematistike)과 단순히 화폐를 더 많이 얻기 위한 획재술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사상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보이고 있다. 홍기빈 저,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책세상, 2001) 참조.

로 귀결된다. 질적으로 상이한 여러 재화와 욕구들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이한 것들을 동질의 단위—‘효용’ 혹은 ‘노동 가치’ 등등—로 환원하여 수적인 계산을 가능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선택의 최적화라는 행위는 투입-산출 혹은 화폐로 계산된 바의 비용-편익의 차이를 극대화하려는 행위로 귀결되므로, 이러한 원칙으로 구성되는 경제를 ‘돈벌이 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바이다. 이러한 ‘살림살이의 경제’와 ‘돈벌이 경제’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의미의 경제를 우리는 하나의 말로 섞어서 쓰고 있다는 것이 폴라니의 지적이다.

이 두 개의 경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끝없이 혼동되어 쓰인다. 그런데 이러한 혼동이 현실적으로 가져오는 귀결에 대한 연구가 폴라니의 경제 사상에서 극히 중요한 축이 된다.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최초로 성립한 시장 경제—자기 조정 시장(self-regulating market)—은 ‘살림살이의 경제’를 ‘돈벌이 경제’로 완전히 환원하고 해소할 수 있다는 전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활동하는 인간은 ‘노동’이라는 상품으로 변해 버리고, 태고로부터 종말까지 존재하며 우리를 낳아준 자연은 ‘토지’나 ‘자원’이라는 상품으로 변해 버린다. 이러한 ‘상품 허구(commodity fiction)’에 기초하여 인간 사회의 모든 존재들과 관계들을 ‘더 많은 화폐적 이익을 찾아가는 상품들의 운동’으로 환원하여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19세기의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폴라니는 이렇게 ‘살림살이의 경제’가 ‘돈벌이의 경제’로 환원 해소 당하게 되면, 인간의 집단적 삶 속에 묻어 들어가(embedded) 있었던 경제라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며, 거꾸로 인간의 집단적 삶이 시장 경제에 묻어 들어가 버리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이들이 부닥쳤던 문제, 어째서 시장 경제나 일반 기업은 그 정체성과 구성을 단순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음에 반해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은 그것이 용의하지 않은가에 대해 일정한 해안을 얻을 수 있다. 시장 경제나 일반 기업은 ‘돈벌이 경제’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들이므로 그 정의가 대단히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를 ‘돈벌이 경제’로만 이해하는 기존의 사고 편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무릇 모든 경제는 오로지 시장 경제이며 모든 기업은 오로지 영리 기업(business enterprise)이며 이것이 유일의 준거점이자 표준이 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 또한 자꾸 그러한 준거점과 표준에 수렴시키고자 하는 편향을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폴라니의 예를 따라서 ‘돈벌이 경제’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의미의 ‘살림살이 경제’의 관점에서 서서 그 각도로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해 조명을 비춘다면 상당히 분명한 규정과 정체성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경제란 ‘돈벌이’를 목표로 하는 인간 활동으로 구성되는 경제가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종다기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인간들의 모든 구체적 활동으로 구성되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살

림살이의 경제'라는 관점만으로는 아직 사회적 경제의 명확한 정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바로 그러한 '다종다기한 욕구를 위한 모든 구체적 활동'을 시장 경제로 포섭해버리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모든 활동을 '돈벌이 행위'라는 단일한 매개로 통일시킬 때에 비로소 개인이나 전체나 가장 큰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돈벌이 경제'의 존재 근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국가 및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플라니가 강조했던 '사회'의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사회: 국가도 시장도 아닌 총체로서의 인간의 관계

플라니의 《거대한 전환》 10장의 초두에 아주 짧게 제시되는 다음의 문장은 근대 서구 사회 형성사라는 거시적인 역사에 대한 독특한 혜안을 압축하고 있다.

“토머스 모어, 마키아벨리, 루터, 칼뱅 등 국가의 발명자들로부터 시작된 한 시대는 그 마지막 인물인 스미스를 이정표로 하여 종결된다. 그리고... [19세기는] 리카도와 헤겔이 각각 정반대의 각도에서, 국가의 여러 법률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국가를 스스로의 법칙에 종속시키는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시대이다.”³⁾

16세기를 통과하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겪은 서유럽은 건잡을 수 없는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명을 조직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원리의 일대 파탄을 겪게 된다. 여기에서 최초로 인간 세상을 조직할 수 있는 원리로 출현한 것은 주권 국가이며, 그 방법으로 출현한 것은 국가의 폭력으로 뒷받침되는 법과 행정이었다. 하지만 18세기 말 특히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국가’를 정점으로 한 인간 세상의 조직은 분명한 한계에 달하게 된다. 국가의 법과 행정의 힘으로 도저히 규제할 수 없는 독자적 운동 조직 원리를 가진 ‘경제적 사회’ – 즉 시장 경제 – 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데이비드 리카아도의 정치경제학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헤겔의 《법철학》에서 “정신적 동물계”로서의 시민사회(Bürgerlichegesellschaft)로 포착된 사회이다. 이후 19세기와 20세기 전반을 풍미하며 서구 문명을 지배한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리는 후자 즉 시장 경제의 원리로 인간 세상이 완전히 새로이 정렬하도록 그 전의 낡은 방법, 즉 법과 행정을 앞세운 국가의 영역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거대한 전환》, 337쪽.

다시 말해서, 16세기 이후의 근대 서유럽 문명은 그 진화 과정에서 전혀 다른 각도와 차원에서 인간 세상 전체를 포괄하여 일률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조직 원리를 발견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폴라니는 이렇게 새로운 ‘경제적 사회’가 발견된 19세기 초에 국가도 아니며 시장도 아닌 또 다른 영역이 발견되었음을 강조한다. 주로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의 사상과 실천을 내세워서 폴라니가 전개하는 이 ‘사회’라는 것의 개념을 구성해보면 이러하다. 먼저 인간은 총체적 존재(man as a whole)이다. ‘국가의 발명자들’은 인간을 자신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레비아탄(Leviathan)과 같은 거대 국가를 구성해 놓고 그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신민(臣民) 혹은 시민(citizen)으로 관념한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의 발명자들은 인간을 철저히 자신의 개인적 이익의 계산에 근거하여 이리저리 밀치고 당기는 시장에서의 원자적 이익 추구자들로서 관념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인간 본성에 대한 포괄적인 관찰과 성찰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며, 역사적 인류학적인 연구로 보았을 때에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면 어떤 원리 어떤 동기로건 자신의 행동과 내면을 움직일 수 있는 총체적인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사회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이 사회란 추상적으로 관념된 구조물과 같은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총체적 존재를 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만 인간의 총체적인 발전이 벌어질 수 있으며, 또 실재의 인간은 항상 그러한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상적 신민이나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이론적 추상일 뿐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은 항상 ‘총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들이 맺어나가는 구체적 관계로서의 사회 또한 현실에 엄연히 실재하고 있는 것이다.

폴라니가 보기에, 로버트 오언의 천재성과 위대성이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이다. 오언은 국가나 시장을 무조건 배척했던 이도 아니었지만, 이 사회를 조직해 달라는 지나친 기대를 그것들에 넘기는 법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인간을 다방면에서 풍부하게 발전시켜 인간 본연의 형상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사회’의 조직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으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기존의 국가와 시장을 오히려 변형시켜나갈 것을 꾀했던 것이다. 이러한 폴라니의 오언 독해는 그가 믿고 제시했던 ‘사회주의’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국가와 시장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사회를 파괴하고 침식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 집단의 도덕적 정신적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적 관계를 탄탄하게 조직하고 이것을 실체로 삼아서 두 제도를 거기에 복무할 수 있도록 관계의 전복을 꾀하는 것이 그가 생각했던 ‘민주적 사회주의’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⁴⁾

4) 이렇게 ‘복합 사회에서의 자유’가 유지되는 그의 사회주의가 파시즘과 구별되는 바이다.

이러한 국가-시장-사회라는 폴라니의 삼발이에서 중요한 점 하나가 함축되어 있다. 사회는 국가, 시장이 발견된 이후에야, 폴라니의 표현으로 자기 조정 시장이라는 ‘생체 해부’가 사회체(body social)에 가해진 뒤에야 발견되었다. 이렇게 ‘사회’란 오히려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회의 영역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명시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국가나 시장이라는 조직 원리는 무한정 이 영역을 침윤(浸潤)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혁명의 여파로 일터를 잃고 떠돌아다니게 된 사람들을 국가는 ‘궁핍민(pauper)’으로 여겨 구빈법 행정의 대상으로 여겼고, 스피넘랜드법이라는 끔찍한 실험 속에서 인간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타락시켰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유노동 시장이라는 ‘악마의 맷돌’이 등장하여 이 똑같은 인간들을 또 다른 의미에서 짐승과 동일한 존재로 보아 실제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파괴해버렸다. 여기에서 오언 등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사회’를 발견하면서 비로소 이들을 자공심과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갖춘 버젓한 인간의 집단 즉 노동 계급으로 구성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폴라니의 인식이다. 하지만 국가 이성을 앞세운 국가나 시장 원리를 앞세운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회’ 영역의 독자적 실재를 부인하고 노동 운동을 적대시하고 ‘사회’의 전 영역이 국가 혹은 시장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호 운동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3. 사회적 경제의 개념: 인간 발전의 영역

‘사회’와 ‘경제’에 대한 폴라니의 새로운 이해에 근거하여 ‘인간 발전의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살림살이의 경제’의 개념에 근거한 부(富)의 개념을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요강(Grundrisse)》에서 얻을 수 있다.

“사실상 부란 제한적인 부르주아적 형상을 벗겨버리고 나면, 전면적인 교환을 통해 창출되는 개인들의 필요욕구와 잠재적 재능, 오락, 생산력 등등, 이러한 것들이 가지는 보편성 이외의 또 무엇이겠는가?”⁵⁾

인간들이 실제로 맺고 있는 관계-사회 실제의 현실-만을 앞세워서 근대의 자유를 가능하게 했던 민주주의 국가의 영역이라든가 시장 경제의 영역을 모두 파괴하고 오로지 기계의 합리성과 효율성 앞에 전 사회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그가 본 파시즘의 본질이었다.

5) Karl Marx, *Grundrisse*, Martin Nicolaus tr. (Hammondsworth: Penquin, 1973) 488p.

즉, 사실상 부의 증대란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을 무제한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며 “인간 능력 그 자체를 목적으로서 계발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⁶⁾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유에는 부 개념에 대한 중대한 혁신이 잠재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부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대상들의 총량이며, 그것을 보통 화폐적 단위로 표현하는 사유에 익숙해 있다. 이러한 ‘대상화된 총량’이라는 부의 관점은 곧바로 ‘돈벌이 경제’와 연결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여기서 마르크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는 그러한 경제 활동을 행하는 인간 주체들이 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일신에 익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적 육체적 능력과 그를 통한 삶의 풍부한 영위를 부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폴라니가 말하는 ‘살림살이의 경제’와 깊게 조응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과도 긴밀히 상통한다.

“노동자들이 더 높은 만족, 심지어 문화적인 만족까지 누리는 것,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일, 신문을 정기 구독하는 일, 강의를 듣는 일,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 취미를 개발하는 일 등, 즉 그 자신을 노예와 구별해 줄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일...”⁷⁾

여기에서 우리는 자본의 순환으로 유명한 M—C—M'이라는 도식 대신에 H—M—H'이라는 도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H는 인간적 부). 화폐는 스스로를 더 많은 양으로 증식시키기 위해 상품을 생산하여 그것을 판매하여 실현시키게 된다. 반면 인간은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능력과 재능과 삶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화폐를 매개물로 사용하며, 이것으로 자신을 더 풍부한 인간(H)으로 확장한다. 전체적인 사회적 노동 분업이 화폐를 사용하는 시장 경제로 조직된 상황에서 인간이 그러한 활동 속에서 화폐를 매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목적은 화폐의 증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과 주변 이웃들의 삶을 더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 발전을 최고의 목표이며 조직 원리로 삼는 영역’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째서 국가와 시장과 구별되는 ‘사회’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성립해야 하는가. 국가와 시장도 분명히 인간의 다면적인 재능과 능력의 계발을 수반하는 측면이 분명

6) *ibid.*

7) *Grundrisse*, 287p. 마르크스 또한 폴라니와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돈벌이 경제’와 ‘살림살이 경제’의 차이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가 본래 6권으로 기획했던 《경제학(Economics)》의 1부인 《자본론》 세 권은 이 ‘돈벌이 경제’의 운동 법칙을 다루는 것이었고, ‘살림살이 경제’는 2부인 《임노동(Wage Labor)》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었다고 보는 주장이 있다. 마이클 레보위츠, 홍기빈 역, 《자본론을 넘어서: 맑스의 노동자 계급의 정치경제학》(백의, 2000)을 참조.

히 존재하지 않는가. 어째서 ‘인간 발전’을 목표로 삼는 영역이 따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가. 여기에서 국가와 시장이라는 영역의 특성을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먼저 이 두 영역은 ‘사회’와는 달리 분명히 논리적 합리적 원칙에 따라 특정한 기능과 목적을 위해 구성되는 기능적 사회—퇴니스(Ferdinand Toennies)적인 의미에서의 Gesellschaft—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은 분명히 명시적인 지상(至上)의 조직 원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국가 이성(raison d'etat)이라는 독특한 합리성을 근간의 원리로 삼고 이것으로 정당화되는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법과 행정을 방법으로 하여 사회를 재조직하는 영역이다. 또 시장이란 ‘화폐의 축적과 자산 가치의 증식’이라는 원칙을 명시적인 지상의 조직 원리로 삼아 구성되는 영역이다. 물론 국가와 시장 각 영역이 작동하는 가운데 ‘사회적’ 관계가 더 풍부해질 수도 있고 그 속의 인간들의 발전이 풍요하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이고 우발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거나 협소해지고 또 그 속의 인간들의 역량과 잠재적 가능성이 황폐화되어 버리는 일도 얼마든지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명분으로 늘어나기만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년 후 6년 후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있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라. 의료와 교육도 모두 ‘비즈니스’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빈곤층의 상태를 생각해보라. 무엇보다도, 국가와 시장의 독재 아래에서 몇백 년이 경과한 근대 사회에서 발생한 자연 환경의 전면적 위기 상태를 생각해보라. 국가와 시장이라는 영역이 그 자체로 ‘인간 발전’을 최고의 조직 원리로 삼는 사회적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오히려 인간 세상 어딘가에 ‘인간 발전’ 그 자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장의 합리성으로 전 사회가 전일적으로 침윤당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여기에서 국가 이성에 대해서도 또 수익 창출이라는 원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비되는 인간 발전이라는 원칙을 고유한 조직 원리로 삼는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분명하게(positively) 규정될 필요가 도출된다.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라. 모든 인간들이 국가 이성의 명령에 완벽하게 일치되도록 행동하는 사회는 ‘착한 병사 슈바이크(Good Soldier Schweik)’와 같은 IQ 50의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이며 그 즉시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이 완벽하게 수익 극대화 원리 하나만으로 움직여서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 일체의 문화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활동을 중지하고 할 줄도 모르는 사회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 사회 또한 작동을 멈추게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국가와 시장 영역의 잠재적 가능성조차 이렇게 ‘인간 발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계속 작동하는 영역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한국 사회와 사회적 경제

‘개체 발생이 계통 발생을 되풀이 한다’는 원칙은 진화 생물학에서는 꼭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 전체의 질서가 붕괴했다가 먼저 국가 나중에 시장이라는 원리로 온 사회가 새로이 조직되고 구조화되었던 경험에 있어서만큼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앞에서 플라니가 지적한 근대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36년의 식민 통치와 3년간의 파괴적 전쟁 및 분단을 거치면서 50년대의 한국 사회는 원조와 가림주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적 붕괴 상태에 있었다. 여기에 극단적 철권통치라는 국가 권력이 등장하면서 단지 정치 영역과 시장뿐만이 아니라 농촌, 문화, 사회 어디라 할 것 없이 철저히 국가의 명령에 의해 줄을 세우는 ‘조국 근대화’의 시기를 겪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심지어 시장 경제라 할지라도 전횡적인 국가 권력의 명령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자체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독자적인 조직 원리였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관치 경제’는 대략 80년대 말 혹은 90년대 초까지도 계속 되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IMF 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조직 원리는 국가에서 ‘시장’으로 급격하게 이동하였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이번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제 누군가의 말대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한국 내의 사회적 관계 전체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원칙은 이제 예전처럼 국가 권력에 대한 맹목적 복종과 충성이 아니라 수익 계산을 내면화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행동과 위계질서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빈 공간이 존재한다.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회 전체를 줄 세우기 시작한 국가 이성의 폭력은 당연히 사회적 관계 곳곳에 심각한 상처를 내게 되었고, 이를 맞서서 방어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본격화되었다. 이후 80년대를 거치면서 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역사 인식과 대외 정치에 대한 인식으로 그 지평을 심화시키면서 민족 민주 운동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97년 IMF 위기 이후 약 10년간의 위밍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온 사회와 자연을 건드리기 시작한 시장과 수익성 원칙의 폭력적인 사회 침탈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효과적으로 맞서서 사회와 ‘인간 발전’의 최후 보루를 지켜낼 수 있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예전의 민주화 운동에서 민족 민주 운동에 이르는 운동 방법과 진영의 구성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권력 앞에서 그다지 효과적인 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이렇게 국가와 시장이라는 조직 원리로 한 번씩 온 사회가 뿌리까지 재구조화되는 극심한 사회 변동 속에서 아직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전면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가치가 있

다. 바로 ‘인간 발전’이라는 가치이다. 예전에 대한민국 국가는 ‘뫼공통일’과 ‘조국 근대화 경제 발전’을 지상의 가치로 삼아 온 국민을 동원 대상으로 삼았다. 그 후 최근 십 몇 년간에는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마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지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면서 그것에 맞추어 모든 사회를 재편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하지만 한번 뿐인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하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피어나는 것 자체가 지고의 목적이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지켜 내어 주는 사회 영역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있었는가? 국가주의와 시장주의로 점철된 반세기를 보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장차 필연적으로 생겨날 의문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천은 지금 큰 역할을 말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도전에 처해 있다고 보인다.

3

폴라니와 협동의 경제학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폴라니와 사회적 경제

- 일시: 2015년 7월 23일(목) 19:30~21:3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4층)

주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교육기간: 2015. 7. 9(목)~8. 20(목)

폴라니와 협동의 경제학

정 태 인



不敢請固所願

“이러한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다원적 경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 경제 운동”은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참석자들은 사회적 경제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을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서울선언문)



다원적 경제?

“통합의 형태들, 즉 상호성, 재분배, 교환은 경제의 다양한 수준과 상이한 부문에 나란히 발생할 수 있다. 그것들 중 지배적인 것을 꼽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종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부문과 수준 간에 분화함으로써 그들 형태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경제과정을 기술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경제의 끊임없는 변화에 질서를 부여하게 된다”

(Trade and Market, p250)



	인간본성	상호작용 메커니즘	가치	단점
시장경제	이기성 (Homo Economicus)	경쟁 (교환)	효율성	불평등, 생태문제, “시장심성”
공공경제	공공성 (Homo publicus)	재분배	평등 (공정성)	리바이어던, 관료화
사회적 경제	상호성 (Homo reciprocans)	협동	연대	가부장성, 배제성
생태경제	공생 (Homo symbiotes)	공존?	지속가능성	세대 간 정의의 불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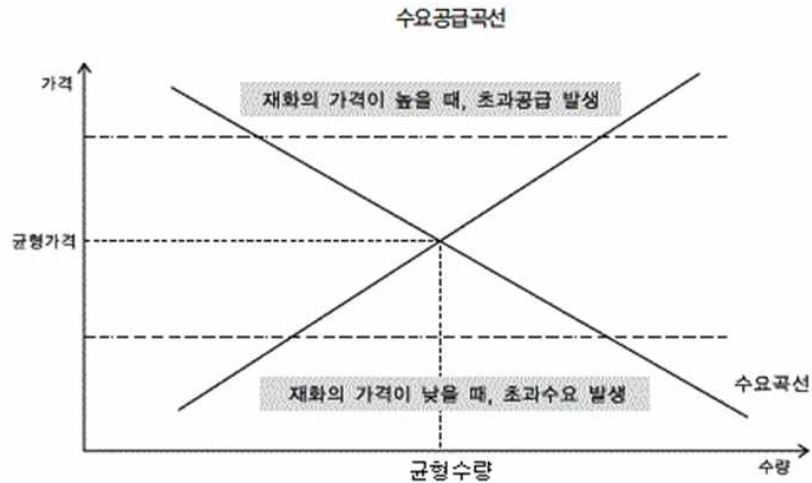
만일 하나의 논리로 모든 영역을 구성한다면? “과멸”
(예. 시장사회, 국가사회주의)

다원성 or 단일성?
착근성(탈착근성)의 재해석



보이지 않는 손

시장경제의 효율성



“개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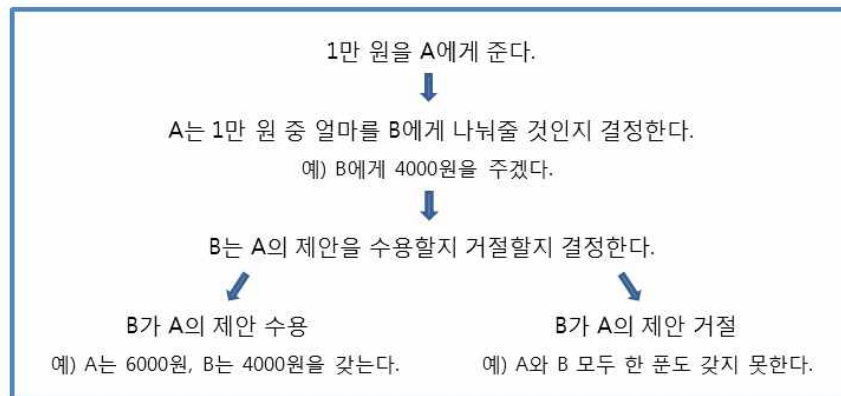
- 애덤 스미스, <국부론>



최후통첩게임

인간은 협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최후통첩게임의 진행 과정



실험 결과, 대체로

A는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B에게 제시한다.

A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B는 이를 **거절**한다.



첫째, 인간은 남을 생각한다.

둘째, 인간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한다.

→ 상호성(reciprocity)

→ 상호적 인간(Homo reciprocans)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_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己所不欲 勿施於人”

_논어 12편



“내가 살기를 좋아하며 죽음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를 좋아하고 고통을 달가워하지 않는 누구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이는 그에게 유쾌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일일 것이다. 나에게 즐겁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것은 그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_Saṃyutta Nikāya, V, pp. 353-354

“One who, while himself seeking happiness, oppresses with violence other beings who also desire happiness, will not attain happiness hereafter”

_Dhammapada 10. Violence



“Hurt not others in ways that you yourself would find hurtful”

_Udanavarga 5:18

Aheb li akheek ma tuhibu li nafsik. "Wish for your brother, what you wish for yourself" or "Love your brother as you love yourself"

_Quran



사회적 딜레마

= 개인의 합리성과 전체의 합리성이 불일치



사회적 딜레마

사회적 딜레마 게임

죄수의 딜레마

		B	
		협동	배반
A	협동	(3, 3)	(1, 4)
	배반	(4, 1)	(2, 2)

치킨게임

		B	
		협동	배반
A	협동	(3, 3)	(2, 4)
	배반	(4, 2)	(1, 1)

사슴사냥게임

		B	
		협동	배반
A	협동	(4, 4)	(1, 3)
	배반	(3, 1)	(2, 2)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협동과 신뢰

첫째, 사슴사냥게임의 형태로 바꿔라

→ 이기적 인간이 아니라 협동이 가능한 인간을 상정

둘째, 사슴사냥게임에서도 협동해를 선택하게 하라

→ 상대가 협동할 것임을 신뢰

사슴사냥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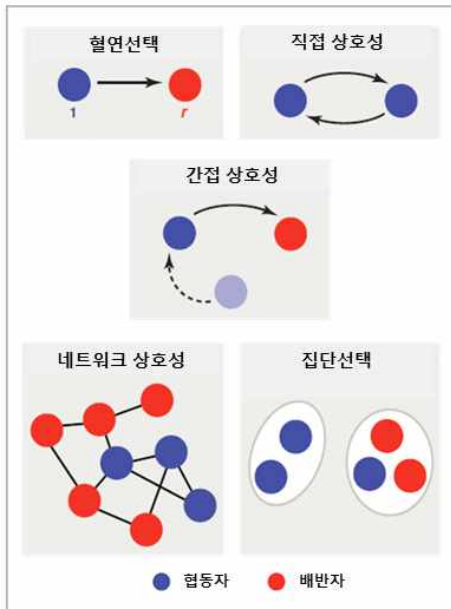
		B	
		협동	배반
A	협동	(4, 4)★	(1, 3)
	배반	(3, 1)	(2, 2)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인간은 언제 협동하는가

인간협동의 5가지 조건



신뢰의 네트워크와 규범이 사회적 자본



* Nowak, 2006, Five rule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인간은 언제 협동하는가

인간협동의 5가지 조건을
아래와 같은 게임이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경기자 II	
		C	D
경기자 I	C	$b-c, b-c$	$-c, b$
	D	$b, -c$	$0, 0$

$b = \text{이익}, c = \text{비용}$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인간은 언제 협동하는가

	보수행렬		협동			
	C	D	ESS	RD	AD	
혈연 선택	$(b-c)(1+r)$	$br-c$	$\frac{b}{c} > \frac{1}{r}$	$\frac{b}{c} > \frac{1}{r}$	$\frac{b}{c} > \frac{1}{r}$	$r \dots$ genetic relatedness
직접 상호성	$(b-c)(1-w)$	$-c$	$\frac{b}{c} > \frac{1}{w}$	$\frac{b}{c} > \frac{2-w}{w}$	$\frac{b}{c} > \frac{3-2w}{w}$	$w \dots$ probability of next round
간접 상호성	$b-c$	$-c(1-q)$	$\frac{b}{c} > \frac{1}{q}$	$\frac{b}{c} > \frac{2-q}{q}$	$\frac{b}{c} > \frac{3-2q}{q}$	$q \dots$ social acquaintance-ship
네트워크 상호성	$b-c$	$H-c$	$\frac{b}{c} > k$	$\frac{b}{c} > k$	$\frac{b}{c} > k$	$k \dots$ number of neighbors
집단 선택	$(b-c)(m+n)$	$(b-c)m-cn$	$\frac{b}{c} > 1 + \frac{n}{m}$	$\frac{b}{c} > 1 + \frac{n}{m}$	$\frac{b}{c} > 1 + \frac{n}{m}$	$n \dots$ group size $m \dots$ number of groups

해밀턴의 법칙 $\frac{b}{c} > \frac{1}{r}$ 의 의미

r 은 상호성의 강도로 해석할 수 있음



r 이 최소화되면 시장 교환이 되며, 이에 따라 익명의 원거리 교역 가능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제도와 규범의 상충

다음 사례로부터 옳게 추론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는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돌본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오후 6시가 넘어서 아이들을 데리러 온다. 그 때문에 일과가 모두 끝난 후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를 남겨 두어야 한다. 부모들의 지각을 막기 위해서 갑은 부모가 늦을 때 10분당 2,000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러자 지각하는 부모가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갑이 벌금을 10분당 5,000원으로 올리자 비로소 지각하는 부모가 없어졌다.

<보기>

- ㄱ. 지각하는 부모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지 않는다.
- ㄴ. 지각하는 부모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선택을 한다.
- ㄷ. 지각하는 부모는 갑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 ㄹ. 10분당 벌금을 올릴수록 갑의 벌금 수입은 증가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0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경제영역 2번 문제



협동의 규칙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원칙	오스트롬, 공유자원 관리의 8가지 규칙	노박, 인간협동의 5가지 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와 공동이용 2. 민주적 의사결정 3. 참여 4. 자율성 5. 교육 6.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7. 공동체에 대한 기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의 확정 2. 참여를 통한 규칙 제정 3. 규칙에 대한 동의 4. 감시와 제재 5. 점증하는 제재 6. 갈등해결 메커니즘 7. 당국의 규칙 인정 8. 더 넓은 거버넌스 존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혈연선택 2. 직접 상호성 3. 간접 상호성 4. 네트워크 상호성 5. 집단선택
	<p>*이후 협동을 촉진하는 미시상환변수 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소통 2. 평판 3. 한계수익 제고 4. 진입 또는 퇴장 가능 5. 장기적 시야 	<p>*이후 행동/실험경제학과 진화생물학이 찾아낸 협동촉진 변수 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주의적 소통 2. 집단정체성 3. 사회규범의 내면화

이들 원칙은 모든 경제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경제에서 특히 그러하다.



서울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협동의 규칙	장단점과 정책방향
공유와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와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란 공유자원의 생산과 이용 • 공유 이익과 비용의 공정한 분담 • 토론과 의사소통 참여에 의한 딜레마 극복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는 혈연선택, 반복거래(직접상호성), 평판(간접상호성)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공간 • 집단 정체성의 형성과 제고 • 집단 경쟁에 의한 집단 내 협동 촉진 • 기술혁신을 위한 개방적 학습시스템(open learning system)의 형성 • 자치체 간 규칙의 일관성(시의 정책과 구의 정책)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공동수립(co-construction)과 공동실천(co-production)은 사회적 경제의 자율성을 전제 •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자율성을 전제, 특히 금융
제도와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적 인센티브 등 공식 제도가 사회의 규범, 특히 도덕 규범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수립 시 반영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이상적인 자본조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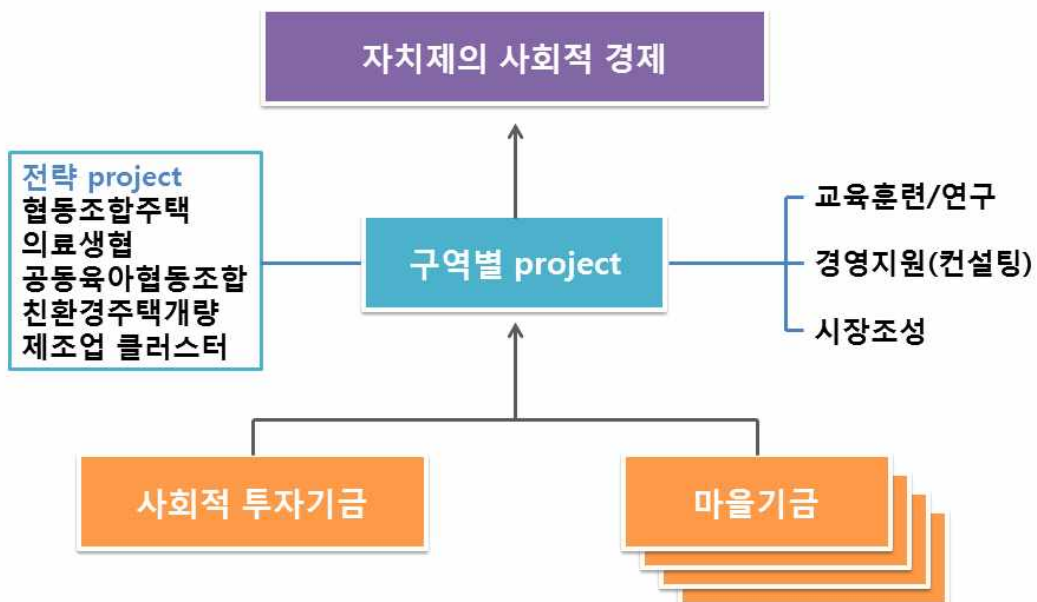
퀘벡 식품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사례

조합원 출자	금액	450,000 CAD달러	외부 출자1	지원	상티에
	기한	지속적으로		금액	750,000 CAD달러
	용도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		기한	15년 간 상환유예
대출	재원	금융협동조합 데자르댕	금리	7.37%	
	금액	900,000 CAD달러	용도	토지 구입, 슈퍼마켓 건축, 운영자금	
	기한	8년 후 상환	외부 출자2	재원	민간재단 소베이
	금리	8.5%		금액	700,000 CAD달러 (이중 505,101 달러는 무이자)
보조금	용도	장비 구입	기한	10년 후 상환	
	재원	지역개발센터와 소베이	용도	슈퍼마켓 건축, 장비 구입	
	금액	지역개발센터 20,000 CAD 달러 소베이 91,650 CAD 달러			
	기간	최소 10년 동안 지원			
	용도	운영비용, 장기 구입, 주택담보대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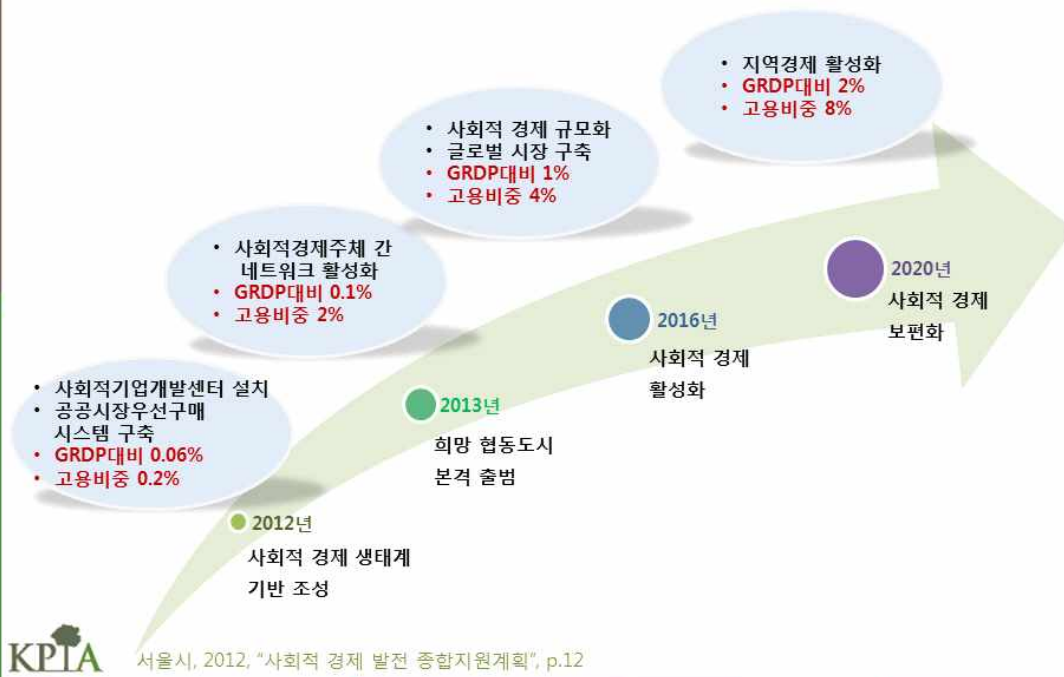


Re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ebec for the Fiducie du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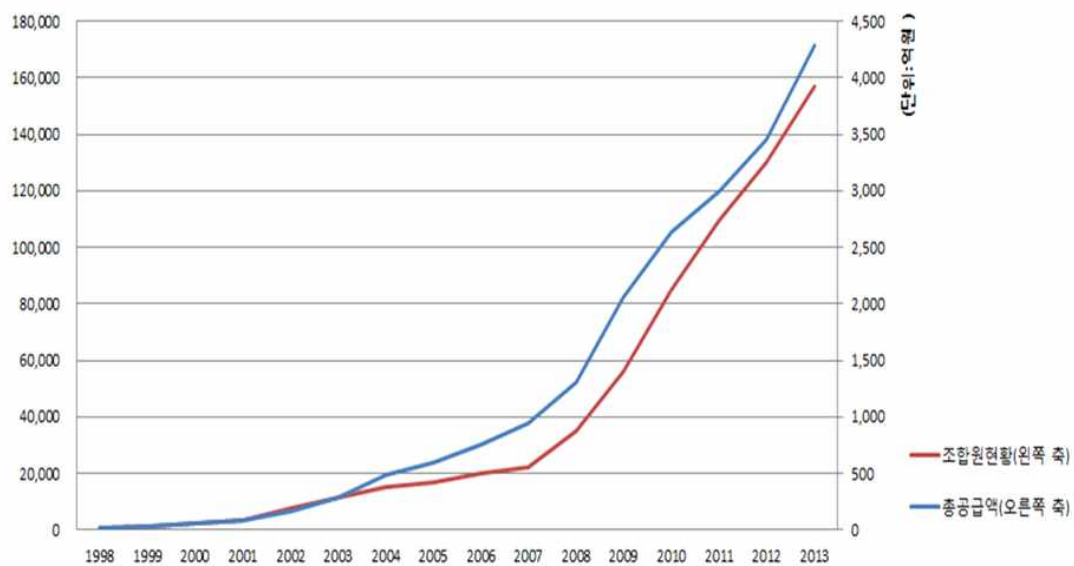
발전계획 개요



서울의 사회적 경제 발전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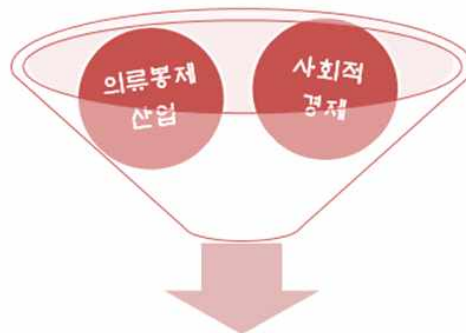
아이쿱 조합원과 매출액 추이



“봉제산업, 사회적경제를 입다”

서울시 성동구

추진전략



전통 의류봉제산업의 전환점 창출



협동, 협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 마련



민·관·산·학이 협업하는 일자리 모델 창출

- 한양여대,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성동구, 기업체

서울시 우수사례_성동구 의류패션 분야 일자리 창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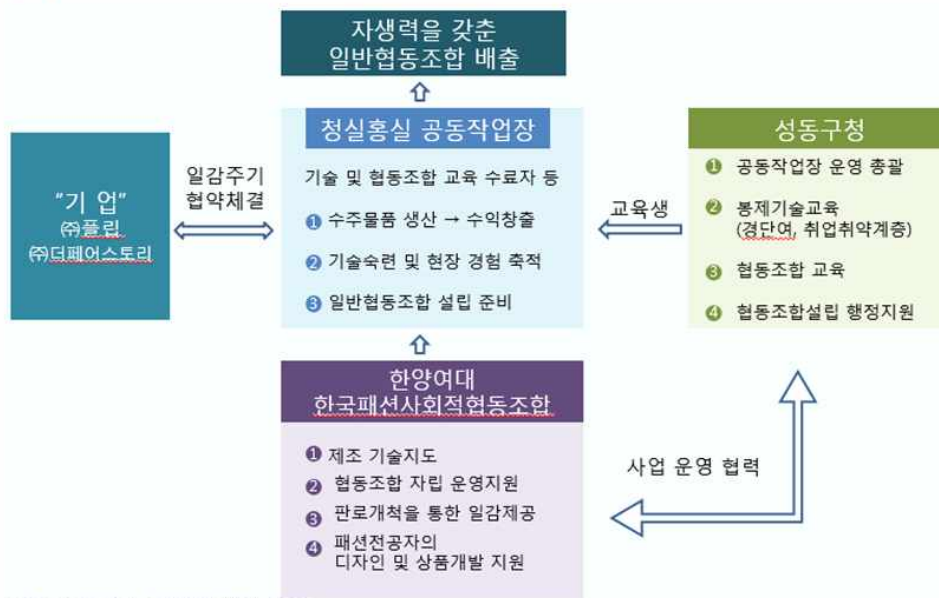
추진전략



KPIA 서울시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2015

서울시 우수사례_성동구 의류패션 분야 일자리 창출 사례

사업체계도



KPIA 서울시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2015

서울시 우수사례_성동구 의류패션 분야 일자리 창출 사례

기대효과

고용
창출

다문화가정여성,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독창성

열악한 봉제산업에 협동조합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경제
활성화

한양여대 디자인 전공 졸업생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4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폴라니와 사회적 경제

- 일시: 2015년 8월 6일(목) 19:30~21:3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4층)

주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교육기간: 2015. 7. 9(목)~8. 20(목)

사회적 경제, 그리고 생존가능성

정 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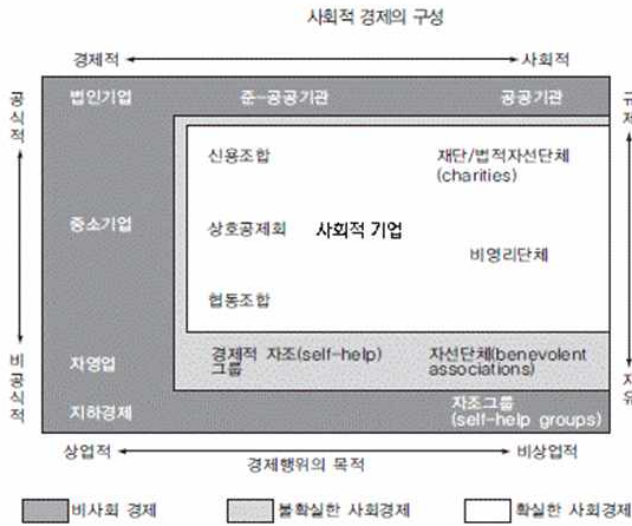
	인간본성	상호작용 메커니즘	가치	단점
시장경제	이기성 (Homo Economicus)	경쟁 (교환)	효율성	불평등, 생태문제, "시장심성"
공공경제	공공성 (Homo publicus)	재분배	평등 (공정성)	리바이어던, 관료화
사회적 경제	상호성 (Homo reciprocans)	협동	연대	가부장성, 배제성
생태경제	공생 (Homo symbiotes)	공존?	지속가능성	세대 간 정의의 불가능성

만일 하나의 논리로 모든 영역을 구성한다면? "과열"
(예. 시장사회, 국가사회주의)

다원성 or 단일성?
착근성(탈착근성)의 재해석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구성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자발적 개인의 참여에 의해 경제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 형태

사회적 경제 사례: 몬드라곤



사회적 경제 사례: 몬드라곤

- 스페인의 몬드라곤
 - 스페인 북동부 지역 바스크 지방정부 산하의 도시
 - 돈 호세 마리아 신부의 지도 아래 5명의 조합원이 모여 1956년 첫번째 노동자협동조합인 석유난로공장 울고(Ulgor) 설립
 - 현재는 111개의 협동조합과 120개의 자회사 등 초 255개의 사업체로 구성된 몬드라곤 협동조합으로 성장
 - 2009년 말 기준 금융, 제조, 소매, 지식산업에서 85000여 명의 근로자 종사
 - 매출 규모로 스페인에서 7위 기업
 - 민간의 사회적 경제가 지방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주도하는 형태



사회적 경제 사례: 에밀리아 로마냐



사회적 경제 사례: 에밀리아 로마냐

-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 이탈리아 북동부를 가로지르는 주
 - 2010년 기준 이탈리아의 약 43,000여 개의 협동조합 중 15,000여 개가 에밀리아로마냐에 존재 (인구 430만 명)
 - 이 지역의 독특한 경제모델을 두고 '에밀리아로마냐모델', '제3이탈리아', '유연전문화' 등이라 부름
 - 개별 민간 주체들은 회계, 금융, 사업서비스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전국연합(Legacoop)과 중소기업연합회(CNA)를 설립하고, 이에 맞춰 정부는 산업진흥공사(EVERT)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

사회적 경제 사례: 퀘벡



사회적 경제 사례: 퀘벡

• 캐나다의 퀘벡

-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주, 프랑스계 캐나다인 거주지
- 3000개의 협동조합과 39개의 공제조합 존재
- 조합원은 8백만여 명 (인구수 7백만여 명)
-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근로자 7만 8천여 명
- 협동조합 전체 연간 매출 180억 달러, 자산 1000억 달러
-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지역운동가들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시민세력과 정부가 합의하여 의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지역경제 개발 모델로서 만들어가기 시작한 형태



사회적 경제 사례: 3개 모델 특징

① 몬드라곤

- 협동조합 기업집단의 수직적 통합 모델
- 기업집단 내 복지, 교육, 혁신센터 구비

② 에밀리아 로마냐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전문화 네트워크
- 지방 정부의 역할 : 산업지구조성(60년대), 산업별 리얼서비스센터(70~80년대), 첨단기술 센터(90년대), 기술전문인력 육성(2000년대)

③ 퀘벡

-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참여, 사회경제가 정책 수립과 실행의 핵심 수단
- 지방 정부의 역할 : 정책 수립과 기금의 조성



사회적 경제 사례: 3개 모델 특징

	몬드라곤 모델	에밀리아 로마냐 모델	퀘벡 모델
특성	수직적 협동조합 기업집단 (한국 재벌의 이상적 개혁모델)	수평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이상적 모델)	정부-시민단체의 협업적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사회서비스의 이상적 공급 모델)
업종	제조업(전기전자), 금융, 유통, 사회서비스	제조업(기계), 유통 사회서비스, 금융	사회서비스, 금융, 유통
금융의 성격	협동조합 내부 기금, 협동조합 은행 및 보험	협동조합 네트워크 내부 기금, 협동조합 보험, 정부예산	공동체 기금, 정부예산, 협동조합은행
역사와 정치	바스크분리주의와 가톨릭 사회주의	좌파의 장기집권과 시민인본주의, 가톨릭	퀘벡 분리주의와 사회민주주의(퀘벡당)
장점	규모 및 범위의 경제와 세계화	네트워크 외부성, 일반 신뢰와 협동	시민의 참여민주주의
단점	특수성과 상대적 폐쇄성	문화적 전통과 모방의 어려움	제조업 부재로 인한 고용의 한계



기업이론

기업의 다원성

이론적 자원

- Marx, 생산과정이론
- Coase, Williamson, 거래비용이론
- Jensen & Meckling, 대리인이론
- Hart, Grossman, 불완전계약이론
- Bowles & Gintis, 민주적 기업이론
- Freeman, E, Blair & Stout, 이해당사자이론
- Freeman, R 등, 공유자본주의론
- 행동/실험 경제학



- **최후통첩게임의 결론**

- 1) 인간은 언제나 남을 생각한다
- 2) 인간은 상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때는 값비싼 응징을 한다.

→ 상호적 인간(Homo Reciprocan)

- 공정성의 기준은 참조점(reference point) 또는 참조영역(reference range)

→ 참조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양의 상호성(선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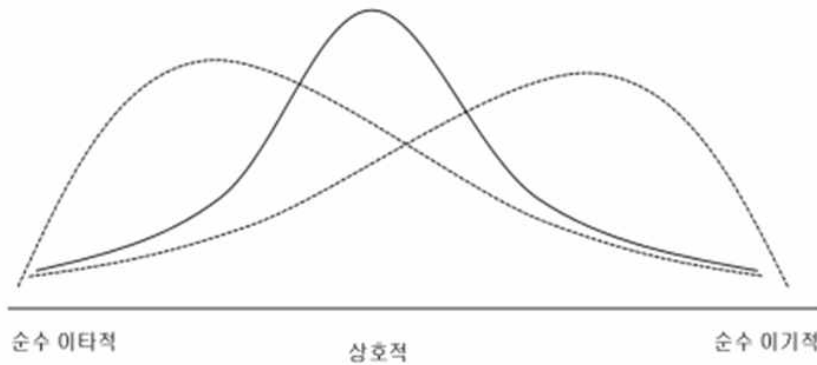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음의 상호성(응징)으로 대응

- 상호적 인간이 현실이라면,
상호적 인간과 이기적 인간 그리고 이타적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기업이론을 만들 수 있을까?

→ 현대 기업이론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상호적 인간
(집단)의 새로운 기업이론 모색

→ 협동조합은 상호적 기업의 이상적 형태(?)

인간 유형의 분포와 사회규범



외적 유인과 내적 동기



- 팀생산
 - 잉여의 극대화를 위한 팀생산
 - 기업은 기술/조직적 이유로 탄생
 - 학습과 혁신의 중요성
 - 스미스(A. Smith), 맑스, 진화경제학

- 팀생산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딜레마(무임승차자) 동반
 - 분배의 공정성과 생산의 효율성 간의 문제
 - 사회적 딜레마 해결 방법 :
 완전경쟁시장과 1차동차생산함수(신고전학파)
 vs 독재(맑스)

- 현대 기업이론 기업 내외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시작



물적 과정과 사회적 과정의 변증법적 통일

	자본제 생산양식	봉건제하 소생산양식	단순상품경제하 소생산양식
생산관계 :	지배·예속관계 자본가 → 노동자	지배·예속관계 영주 → 노동자 (지주) (직접생산자)	직접생산자
	소유 ↓ 소유 ↓	소유 ↓ 소유 ↓	소유 ↓
생산양식 :	지휘·통제관계 생산수단 → 노동력	지휘·통제관계 생산수단 ← 노동력	지휘·통제관계 생산수단 ← 노동력

* 출처 : 민정우, 1986, 식민지 사회의 성격 구명을 위한 일시론



물적 과정과 사회적 과정의 변증법적 통일

생산관계(그 법률적 표현으로서의 소유관계) 비노동자 ————— 노동자 (분배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구조=토대 (~적 생산양식)
↓ ↓	생산수단 ————— 노동력		
생산양식 자체		물적 구조	
직접적 생산과정	유통과정	과정	재생산과정 (~적 생산과정)

* 출처 : 민정우, 1986, 식민지 사회의 성격 구명을 위한 일시론



- 물적 과정은 기업의 팀생산적 성격
- 사회적 과정은 기업의 사회적 딜레마적 성격
- 생산수단의 소유 → 자본가의 통제 → 생산물의 소유
(잔여통제권) (잔여청구권)
-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생산의 사회화에 걸맞은 소유의 사회화 (<자본론> 3권)



- 맑스 :
착취, 산업예비군의 존재,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 벌르(Berle)와 민즈(Means) :
경영자의 독립과 공동체의 이해
- 대리인이론 :
잔여청구권과 통제의 유인 + 효율시장이론
= 주주자본주의론
- 쟁점
 - 노력(effort)의 지출 문제
 - 투자의 문제 : 발목잡기 (holdup) 문제
 - 의사결정의 문제



- 보울스와 진티스의 민주적기업이론
 - 경합교환관계,
그리고 내적 강제로서의 효율임금(실질비용 > 0)
→ 권력의 존재
(실질비용 = 고용의 가치 - fallback position의 가치)
 - 노동자의 이사회 선출(민주적 책임성)
 - 노동자의 상호감시가 더효율적(효율성)



- 실험경제학의 증거
 - 카펜터, 보울스, 진티스, 황성하(Capenter 외, 2009)
 - 인간의 상호성에 입각해서 노동자 상호감시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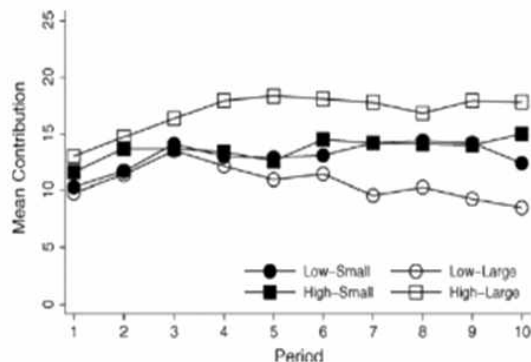


Fig. 2. Mean contribution by treatment and round (Note: low or high refers to the team's q/n and small or large refers to the team size).



• 애컬로프(Ackerlof)의 선물교환이론

TABLE I
WORK PERFORMANCE OF INDIVIDUAL CASH POSTERS

	Age in years	Time on job in years-months	Mean cards per hour	Mean errors per hour
Asnault	22	3-5	363	0.57
Burke	26	2-5	306	0.66
Coughlin	20	2-0	342	0.40
Donovan	20	1-9	308	0.79
Granara	21	1-3	438	0.65
Lo Presti	25	-11	317	0.03
Murphy	19	-7	439	0.62
Rourke	17	-4	323	0.82
Shaugnessy	23	-2	333	0.44
Urquhart	18	-2	361	0.49
Average	21.1	1-4	353	0.55

• 애컬로프(Ackerlof)의 선물교환이론

- 노동자들의 '공정한 하루치(노동규범)'와 회사의 '관대한 최저기준과 높은 임금'의 교환
→ 효율임금(노동시장의 이중화)
- 애컬로프는 처음부터 상호성에 근거, 이후 집단선택 (economics of identity)을 강조

• 보울스와 진티스의 민주적 기업이론과 애컬로프의 선물 교환이론, 그리고 후일 이루어진 실험경제학들은 노동자의 잔여청구권 보유, 그리고 자치(self policing)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명제를 뒷받침한다.

- 윌리엄슨의 근본적 전환과 발목잡기 문제
 - 관계특수투자의 역선택
 - 하트와 그로스만의 잔여통제권 해법

- 아기온(Aghion)이 제시한 숫자 예
 - 부품 판매자가 5달러 투자
 - 16달러짜리 부품을 10달러에 생산 가능
 - 부품 구매자가 5달러 투자
 - 32달러짜리 완성품을 40달러에 판매 가능
 - 이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순간 '근본적 전환 (fundamental transformation) 발생
 - 잉여를 50:50으로 분배한다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음



		판매자	
		투자	홀드업
구매자	투자	(10, 10)	(7, 12)
	홀드업	(11, 6)	(8, 8)

- 하트와 그로스만은 잔여통제권의 판매자 소유(상방통합)을 해로 제시
 - (투자, 홀드업)의 잉여 > (홀드업, 투자)의 잉여

$$19(=7+2) > 17(=11+6)$$

cf) 윌리엄슨은 구매자 통합 암시?



- 협동해의 가능성?
- 페어(Fehr) 등의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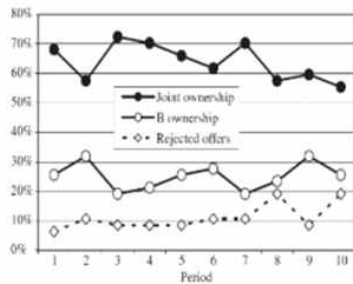


Fig. 1. Share of Ownership Gains (J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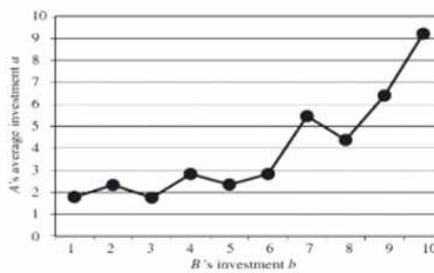


Fig. 2. A's Average Investment Given b Under Joint Ownership (JOD)

- 실험의 결과는 합작소유(joint ownership)
- 공동소유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공정성을 암묵적 계약의 이행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 공정성의 규범이 작동하는 경우 협동해 달성 가능



- 기업 내 주요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가?
- 맑스 : 자본가(주주, 경영자)의 독재
- 대리인이론 : 주주가 이사회를 통한 제한, 금융시장의 경영자 통제
- 불완전계약이론 : 정보의 생산과 소통을 위한 하부 권한 위임



- 이해당사자론과 공유자본주의론

- 경영학의 이해당사자론(E. Freeman 외, 2004)과 법학의 이해당사자론(Blair, 2012, Blair&Stout, 1999) : 기업 내외의 이해당사자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들의 이해를 조정, 이해당사자론에 입각한 기업이 효율적(전략적 이해당사자론)

- 경제학의 공유자본주의론(R. Freeman 외, 2011) : 영국과 미국에서 종업원 지주제(ESOP), 이윤공유제를 각종 경영참가제도와 결합한 기업들이 높은 성과를 얻었음을 실증



- 협동조합의 가버넌스

-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 물적 유인제도보다 규범에 의존
- 잔여청구권과 잔여통제권의 조합원(노동자) 소유
- 1인 1표에 의한 주요 의사 결정
- 협동조합의 7원칙은 오스트롬의 8규칙, 노박의 5규칙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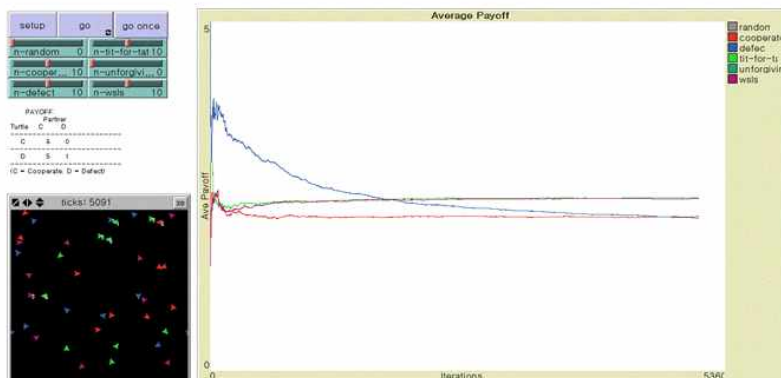


- 그런데 왜 협동조합은 희귀한가?
- 맑스, 밀(J. S. Mill), 발라스(Walras)의 예찬
- 과소투자, 과소고용, 단기시야는 비현실적 비판
- 문제 : 대규모 자금조달, 우수한 인력 조달, 이질적 구성원의 의사결정 어려움
- 대책
 - 자금 :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필요성
ex) 노동금고, 유니폴, 데자르댕
 - 인력 :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필요
 - 민주적 의사결정 : 교육과 훈련 필요



ABM 모델에 의한 협동조합의 가능성

- 자본주의 기업의 전략 - 항상 배반 또는 WSLS
- 협동조합의 전략 - 항상 협동 또는 TFT



논리적으로 협동조합은 생존 가능,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협동조합의 기업이론을 위한 메모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 머리말 - 협동조합의 기업이론

이 글은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유인구조, 분배원칙 등을 현대의 기업이론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특히 언제부턴가 경제라는 영역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1인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협동조합의 분배원칙과 유인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느냐가 핵심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현대 기업이론의 초보자나 다름없으며 협동조합의 역사, 무엇보다도 한국의 실제 상황에 대한 공부도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의 경제학계에서도 과거 협동조합의 효율성(“협동조합은 왜 그리도 드문가”)에 관한 논쟁을 간헐적으로 수차례 한 적이 몇 번 있지만 이를 실증까지 끌어간 예는 별로 없었다.

해서 이 글의 제목에 메모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저 겸양이 아니다. 그간 협동조합에 관한 논의가 현대 기업이론이 달성한 성과, 또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행동경제학/실험경제학의 논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글은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다. 협동조합의 실천가들이나 기업이론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느낌만 받을 수 있어도 꽤 성공일 것이다.

이 글은 현대 기업이론을 분해해서,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요소들 위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다. 그 다음 각 이론들의 논점을 비교해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과거 협동조합에서 이뤄진 논의와 최근의 행동/실험경제학의 성과로 해석한다. 이런 작업의 밑바탕에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인 “이기적 인

1) 메모(2014년 5월 20일판)에 불과하므로 공식적 출판물에 의한 어떤 방식의 인용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비판은 환영합니다.

간으로만 이뤄진 기업”이 아닌, 상호적 인간이 함께 존재하는 기업이론을 구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더 일반적으로는 장차 “상호적 인간의 경제학”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업에서는 경쟁보다 협동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²⁾

단, 현대 기업이론을 적용하다 보니 전문가에게나 제 격인 미묘한 논점까지 건드릴 것이고 어느 정도 일반이론 차원의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경제민주화, 또는 재벌논쟁도 염두에 둘 텐데) 이런 점은 부분적으로 주에 반영할 것이다.

이 글은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부터 간단히 다룬다. 나는 시장이나, 기업이냐라고 하는 코즈의 고전적 문제제기는 참신하지만 실제 역사나 현실의 기업과는 무관한 질문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만일 기업이 더 많은 잉여를 목적으로 생겨난다면 그것은 시장이 일반화하기 전에도 존재했다. 즉 기업은 무엇보다도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이유 때문에 출현했으며 흔히 비판받듯이 신고전파가 기업을 생산함수(기술의 표현)로 기술한 것 자체는 오류가 아니다.

모든 기업은 기술/조직의 시너지효과를 노린 팀생산을 하는데 이는 곧 잉여의 분배와 의사 결정권의 할당이라는 사회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기업은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것이 거버넌스의 다양한 공존으로 나타난다.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래비용이론이나 불완전 계약이론의 해법은 기업의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해법은 특정한 가정 하에서 그럴 듯 하지만 어디에나 적용될 수는 없다. 나는 최근 진화생물학과 행동경제학/실험경제학이 제시한 협동의 이론이 사회적 딜레마의 일반 해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기존 기업 거버넌스 논의가 특히 중요하게 다룬 것은 노동자의 노력(effort)와 관계특수투자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정보경제학의 틀에서 전자는 태만(shirking)³⁾, 후자는 과소투자의 문제⁴⁾로 나타난다. 우리는 보울스의 민주적 기업이론, 하트의 불완전계약이론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소유해=권위에 의한 해결보다 협동해가 더 우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최근 이뤄진 행동경제학/실험경제학의 결과는 이런 주장을 (간접적으

-
- 2) 이미 경영학이나 산업경제학에서는 기업 간 협동에 관한 연구가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 3) 게임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임승차의 문제로 표현되고 정보경제학에서는 계약 후의 기회주의, 즉 도덕적 해이로 표현된다.
 - 4) 여기에서는 주로 사전적 기회주의, 즉 역선택이 문제가 된다. 즉 관계특수투자를 한 뒤 상대의 기회주의에 의해 불리한 위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 합리적 기업은 투자를 최소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 증명하고 있다.

넷째로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협동의 원리, 예컨대 노박의 5원칙이나 오스트롬의 8규칙을 기업 규범으로 삼고 있는 팀생산조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즉 기업법이나 유인구조보다 사회규범이 더 중요한 행동의 원리가 되고 따라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조금 더 현실을 기술하는 블레어와 스타우트(Blair, M. & Stout) 등 법학의 이해당사자론, 그리고 프리만(Freeman, E) 등 경영학의 이해당사자론은 일반 기업법인에도 이런 시각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프리만(Freeman, R.) 등 경제학의 “공유자본주의론”은 이런 시각이 현재의 자본주의, 즉 시장 중심의 사고와 제도가 가득찬 상황에서도 효율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했다.

기업의 사회적 규범과 인센티브 제도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규범이 강조되는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함부로 주식회사에서 사용되는 유인체계를 도입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Bowles, Huck et.al, 2012).

타락명제는 넓게 봐서 이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도는 결국 최근 제기된 세 개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폴리(D. Poley)는 “아담의 오류”가 “경제적 부문을... 정치, 사회적 갈등과 가치라는 훨씬 지저분하고 덜 결정적이며 도덕적으로 더 의심스러운 이슈들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경제와 사회의 분리가 문제의 뿌리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프리만(E. Freeman)은 경영과 윤리의 분리를, 보울스는 물질적 인센티브와 도덕감정(사회규범)의 분리를 문제삼는다. 이런 지적은 이미 60여년 전에 폴라니가 사회로부터 경제가 “떨어져 나옴”(disembedded) 때 생길 비극을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의 주장은 상호성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입각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기업도 상호성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기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과 기타 사회 제도로 가득 찬 현재의 상황에서 협동해를 택할 가능성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서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몬드라곤 기업집단이나 에밀리아로마냐의 산업지구들은 협동해가 사회적 경제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좋은 사례들이다.

2. 협동의 경제학⁵⁾

내가 지금까지 찾은 협동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내 논리는 이들 규칙을 바탕으로 전개될 것이다.

<표1> 신뢰와 협동에 관한 규칙들

ICA, 협동조합의 7원칙	오스트롬, 공유자원 관리의 8가지 규칙	노박, 인간협동진화의 5가지 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와 공동이용 2. 민주적 의사결정 3. 참여 4. 자율 5. 교육 6.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7. 공동체에 대한 기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계확정 2. 참여에 의한 규칙 제정 3. 규칙에 대한 동의 4. 감시와 제재(응징) 5. 점증하는 제재 6. 갈등 해결 메커니즘 7. 당국의 규칙 인정 8. 더 넓은 거버넌스의 존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혈연선택 2. 직접상호성 = 단골 3. 간접상호성 = 평판 4. 네트워크상호성 5. 집단선택
	<p>+ 협동촉진의 미시상황변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소통 2. 평판 3. 한계수익 제고 4. 진입 또는 퇴장 능력 5. 장기 시야 	<p>+이후 행동/실험경제학, 진화생물학이 찾아낸 협동의 촉진수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통 - 민주주의 2. 집단정체성 3. 사회규범의 내면화

출처: 정태인·이수연,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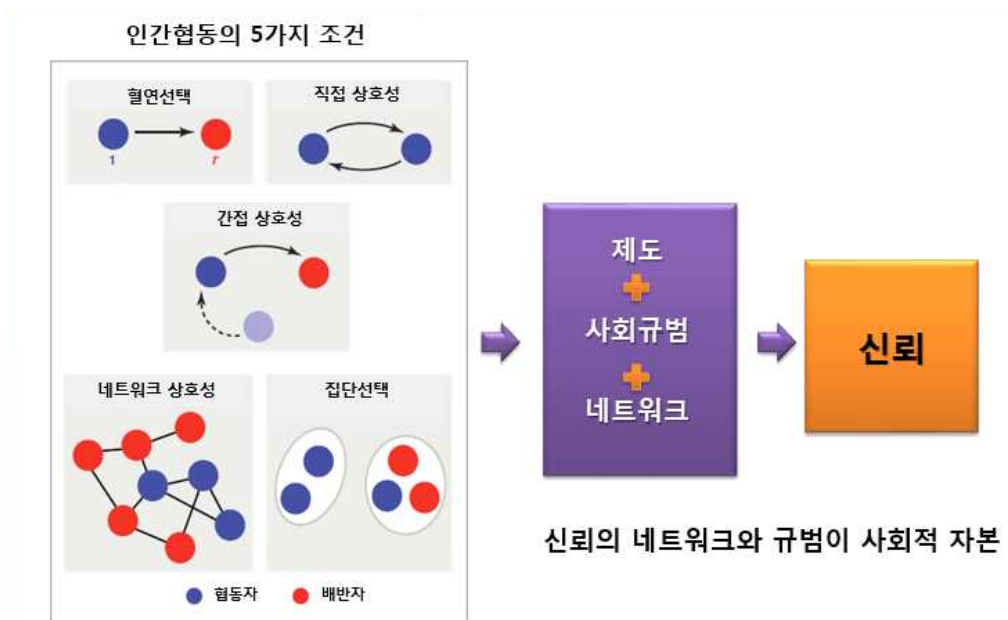
이 세 가지 규칙 또는 원칙을 이루는 요소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여기서는 노박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본다. 노박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다섯 가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Nowak, 2006).

5) 이 절은 나와 이수연이 쓴 “협동의 경제학”을 지면상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다. 지면을 줄이기 위해 그림과 표 위주로 소개한다.

<표2> 인간 협동진화의 5가지 규칙

	보수행렬		협동			
	C	D	ESS	RD	AD	
혈연 선택	$(b-c)(1+r)$	$br-c$	$\frac{b}{c} > \frac{1}{r}$	$\frac{b}{c} > \frac{1}{r}$	$\frac{b}{c} > \frac{1}{r}$	$r \dots$ genetic relatedness
직접 상호성	$(b-c)(1-w)$	$-c$	$\frac{b}{c} > \frac{1}{w}$	$\frac{b}{c} > \frac{2-w}{w}$	$\frac{b}{c} > \frac{3-2w}{w}$	$w \dots$ probability of next round
간접 상호성	$b-c$	$-c(1-q)$	$\frac{b}{c} > \frac{1}{q}$	$\frac{b}{c} > \frac{2-q}{q}$	$\frac{b}{c} > \frac{3-2q}{q}$	$q \dots$ social acquaintance-ship
네트워크 상호성	$b-c$	$H-c$	$\frac{b}{c} > k$	$\frac{b}{c} > k$	$\frac{b}{c} > k$	$k \dots$ number of neighbors
집단 선택	$(b-c)(m+n)$	$(b-c)m-cn$	$\frac{b}{c} > 1 + \frac{n}{m}$	$\frac{b}{c} > 1 + \frac{n}{m}$	$\frac{b}{c} > 1 + \frac{n}{m}$	$n \dots$ group size $m \dots$ number of groups

위의 보수행렬은 죄수의 딜레마를 사슴사냥게임으로 바꾸는 다섯 가지 규칙을 보여준다. 다음 그림의 왼쪽 부분이 이를 보여준다.



출처: Nowak, 2006, Five rule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그림1] 인간협동의 조건과 신뢰

그러나 물질적 보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슴사냥게임의 협동해를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배반해가 아닌 협동해를 선택하도록 해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를 제도와 사회규범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1>의 오른쪽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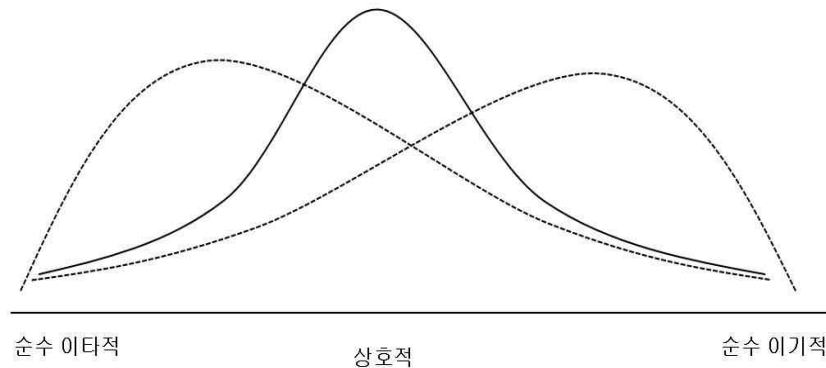
예컨대 사교육은 죄수의 딜레마에 속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사교육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이 다 같이 사교육을 하지 말자는 데 의견을 모은다면 사슴사냥게임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 가장 간단한 예로 정부가 배반의 이익을 낮추거나(예컨대 사교육 증지를 제도로 만들고 비밀과외를 하는 경우 입시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한다) 협동해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면(예컨대 공교육의 인력과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사람들은 타인이 협동을 택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목표이다⁶⁾.

한편 사회규범은 인간 내면에서 수치감이나 죄의식을 유발해서 스스로 배반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 행동을 규제한다. 사회규범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이 되며 어떤 사건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제도와 사회규범이 잘 조합되는 경우 사람들은 타인의 협동을 별 의심 없이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일반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나는 인간의 행동이 상호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에 나타나는 호모에코노미쿠스나 완전한 이타주의자는 실제로 별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에서 인간은 보통 물질적 보수, 상대의 의도성(intentionality), 상대의 유형 등에 따라 상호적 행위를 한다. 더 거칠게 요약하자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이기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겐 똑같이 이기적으로 대응하고 반대로 호의를 보이는 사람에겐 호의로 화답한다.

인간 유형의 분포는 대체로 정규분포의 모습을 보인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사회나 역사에 따라 아래 그림처럼 최빈값이 이기적인 쪽으로 기울거나, 또는 그 반대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30년 전의 한국사회와 현재의 한국사회는 각각 왼쪽(1)과 오른쪽(2) 곡선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번 사회는 상호적 행동이 사회규범이며 따라서 이기적 행동은 내면의 동기에 의해 자제될 테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사회에서는 이기적 행동이 일반적이고 착한 사람을 오히려 바보 취급하는 사회일 것이다.

6) 물론 제도는 이기적 행동을 촉진할 수도 있다. 성과급 등 물질적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그림2] 인간 유형의 분포와 사회규범

기업이론에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법과 각종 물적 인센티브이고 사회규범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의 문화나 노동규범이다. 이 둘은 주류경제학의 가정에서처럼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보완적일 수도 있고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분리/보완/대체가 일어나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Gneezy et.al., 2011, Bowles & Polania-Reyes, 2012). 현재의 논의 수준에서 거칠게 분류한다면 제도는 물질적 유인과 관련된 외적 동기화(extrinsic motivation)와, 그리고 규범은 내적 동기화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규범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 인간은 수치심을, 들키지 않는 경우에는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내적 동기는 인간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문제는 외적 동기화가 어떤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예컨대 “헌혈할 때 일정한 돈을 준다면 헌혈자는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라는 티트무스의 고전적 질문이 그러하다.

우리는 기업이 협동에 의해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노박의 5가지 규칙이나 오스트롬의 8가지 규칙은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혈연선택은 현대에도 그렇게 많은 가족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기업(또는 기업 간 관계)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반복게임을 할 수밖에 없으며(직접 상호성), 평판 역시 기업과 기업의 네트워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 기업 내의 상호 작용은 흔히 집단 간에 이뤄진다. 예컨대 노동자집단과 경영자집단, 모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관계가 그러하다. 그렇다면 집단선택 역시 기업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7) 실험경제학에서는 간접상호성의 역할을 보이기 위해서 이미지점수 매기기(image scoring)는 수법을 사용한다. 기업에서는 이런 이미지점수 매기기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이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대 기업이론의 재해석과 딜레마 해결의 방향

1) 팀생산으로서의 기업과 사회적 딜레마

(1) 팀생산으로서의 기업과 코즈 비판

모든 기업은 팀생산을 한다. 앨키안과 데메츠(Alchian and Demestz, 1972)의 정의에 따르면 팀생산이란 각 개별 투입요소의 생산을 합한 것보다 결합생산이 더 많은 산출을 하는 생산이다. 또한 어떤 개인이나 소집단이 모든 투입요소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이것이 기업이라는 조직이 생겨난 최초의 이유일 것이다. 예컨대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약 100만년의 수렵채취시대를 거쳤는데 이때도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냥조직이나 과일 따기 조직은 존재했을 것이다. 팀으로 일한 결과가 각자 일한 것과 똑같거나 그보다 더 나쁘다면 팀으로 같이 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즉 기업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술적/조직적 이유로 생겨났다. 초기 경제학 문헌은 이 점을 강조했다. 아담 스미스의 저 유명한 핀 분업의 사례나 맑스의 노동과정 분석은 이를 잘 보여준다. 마샬의 산업지구에 대한 분석은 특정 지역에 유사 업종의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를 집적효과 또는 외부 경제로 설명한다. 현대의 산업경제학이나 기술경제학/진화경제론은 특히 정보 및 위험의 공유와 학습 효과, 경로의존성 등을 강조한다. 즉 안정적인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특히 암묵적)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고전파가 기업을 생산함수로 표현한 것은 과거 전통을 충실하게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1930년대 이후의 경제학이 시장의 작동, 특히 가격의 결정에 관심을 가졌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기업은 주어진 투입들의 가격 하에서 이윤극대화의 문제를 푸는 기계로 상정되었고 기업의 내적 구성이나 동학은 사실상 무시되었다. 1950년대에 벌어진 “총비용가격설정(full cost pricing, 사실은 평균비용 가격설정)과 ”한계비용가격설정”(marginal pricing) 간의 논쟁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Simon, 1978 참조).

코즈의 문제제기는 그렇게 완전한 시장이(실은 완전한 정보가) 존재한다면 왜 현실에 기업이 존재하고 더구나 수직통합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가였다. 코즈는 이론을 넘어 맨 눈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로 몇 안되는 경제학자였다(이 점은 “사회적 비용의 이론”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태초에 시장이 존재했다”고 생

각하는 경제학의 전도된 시각에 산뜻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 역시 기업 자체를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도 완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가격메커니즘 사용 비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고, 여전히 시장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기업(조직)은 존재했고⁸⁾ 이윤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조직)을 만들었다. 인간은 이런 조직의 운영을 잘 하는 “초협력자(Nowak, 2011)”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엄청난, 어쩌면 파멸에 이르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만일 거래비용이 줄어든다면, 즉 시장이 더 완전해지면(또는 정보가 완전해지면) 기업은 숫자와 규모, 양쪽에서 줄어들까? “거래비용의 존재 때문에 기업이 형성되었다”는 코즈의 논리가 참이라면 이런 주장도 성립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지만 기업의 규모나 숫자가 줄어든다는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주 거칠게 말한다면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은 더 커지고 더 많아졌다고 하는 쪽이 더 올바른 것이다. 물론 완전한 시장이란 인간의 머릿속이나 존재하는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시장의 완전성을 수치화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시장의 완전성과 기업의 크기나 숫자의 관계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 자체가 코즈의 핵심 주장이 과녁을 빗겨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⁹⁾

(2) 기업이론의 전개와 사회적 딜레마¹⁰⁾

기업이 사회적 관계라는 것 역시 초기 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 특히 맑스는 착취를 증명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의 양 측면에서 분석했다. 맑스는 모든 사회 현상을 물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대립, 그리고 변증법적 통일로 이해했는데(민정우, 1986) 이런 사고는 기업이라는 조직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8) 고대에도 기업조직은 존재했고 18세기까지는 상인이 기업을 조직하였으며 가족기업을 벗어난 대기업을 나타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물론 임금이나 군대, 그리고 공동체의 주문에 의한 생산도 시장과 거래비용을 동원해서 묘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9) 코즈 이후 특히 윌리엄슨의 거래비용경제학이 거둔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이런 비판과 상관없이 관계특수투자, 또는 자산특수성 하의 쌍방 독점 문제에 주목하여 중요한 기여를 했다. 천동설을 기본으로 삼았어도 인류 역사 상의 노련한 항해사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 또한 코즈에 대한 비판 시각은 불완전 계약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계약이라는 관념이 없을 때도 기업은 존재했고 미국처럼 법이나 계약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회에 기업이 더 적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10) 여기서는 기업이론을 맑스의 틀에 따라 재구성할 뿐 기업이론 일반을 다루지 않는다. 예컨대 기업의 범위, 주주이론과 이해당사자이론에 관련된 쟁점은 논의의 전개에 필요한 부분만 다룰 것이다.

이었다. 맑스는 모든 물질 재생산은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자신의 관점에 따라 계급의 재생산을 논증하는 데 자본론 1권을 거의 다 바쳤다.

여기서 맑스는 훗날 현대 기업이론에서 다시 각광을 받는 생산수단의 소유-생산과정의 통제-생산물의 소유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한다. 즉 지주나 자본가가 생산물을 전유하는 것은 땅과 “(물질) 자본”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이며 이를 매개하는 것이 생산과정의 통제이다. 봉건시대에 전형적인 부재지주(영주)의 경우 생산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외적 강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신분 및 종교 등의 윤리규범이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소유하고 동시에 통제하기 때문에 기업은 윤리나 종교, 사회로부터 독립해서 생산물을 전유할 수 있다.¹¹⁾

자본론 3권에서 맑스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에 주목한 것도 이런 사고방식의 연장이다.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자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한다. 이것은 이미 진행된 생산의 사회화에 걸맞은 소유의 사회화가 아닐까, 맑스는 조심스럽게 진단한다¹²⁾. 만일 생산은 이미 사회화되었다면 이제 소유관계만 바꾸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맑스는 주식회사를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변화된 새로운 소유관계의 사례로 보았을 것이다. 반면 맑스에게 협동조합은 더 적극적인 소유의 사회화를 보여준다. 협동조합은 노동자가 바로 생산수단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벨르와 민즈는 어떤 의미에서 반대로 주식회사 현상을 해석한다. 즉 소유와 통제의 분리라는 점에서는 같은 현상이지만 벨르와 민즈(Berle & Means, 1932)에게 경영자는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 나타난다. 벨르와 민즈는 이런 분리가 내포하는 문제점(뒤에 언급할 주인-대리인 문제 등)을 알고 있었지만 경영자의 주주로부터의 독립보다 공동체로부터의

11) 이런 해석은 고등동물(현대사회)의 해부를 통해 하등동물(과거 사회)을 들여다보는 맑스의 방법론에서 기인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사물에 대한 소유권은 자본주의 사회를 제외하곤 중층적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토지는 궁극적으로 왕의 소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주가 1차로 잉여를 수취했으며 소작농 역시 토지를 점유하고 생산물 일부를 소유할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소유의 여러 측면은 쉽사리 일원화하지 않아서 법적,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권리가 인정된다. 예컨대 주류경제학이 기업의 소유자라고 상정하는 주주는 일정액의 증서를 소유하고 있을 뿐 기업의 어떤 물건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12) 3권이 노트 수준이었기 때문에 과연 맑스가 주식회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후 기금사회주의의 논의나 좌파 쪽의 주주행동주의는 맑스의 이런 생각을 이어 받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맑스의 협동조합에 대한 견해도 애매하다. 훗날 엥겔스가 쓴 “공상적 유토피아에서 과학적 유토피아”는 이론의 천착이라기보다 당시의 운동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쪽이 옳을 것이다.

분리를 더 걱정했다. 그런 의미에서 벨르와 민즈의 “경영자 자본주의”는 현대 경영학이나 법학의 이해당사자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리인이론은 이런 흐름을 급하게 뒤바꿨다. 기업의 주인이 주주라는 관념은 이 때 탄생했고 이제 정보경제학에서 주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 적용하던 “도덕적 해이”, “역선택” 개념이 기업이론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Jensen & Meckling, 1976). 사실 대리인이론은 맑스와 유사한 사고 방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가 잉여(잔여청구권)를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경영자가 게으름을 부리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잔여청구권을 가진 자만이 경영자와 노동자를 통제할 유인을 지니므로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가 그 권리를 가져야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주주는 경영자나 노동자의 통제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보충하는 논리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금융시장에 의한 경영자 통제이다. 즉 주로 진입과 탈출에 관심이 있는 주주들을 대리하여 시장이, 더 정확히 말하면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경영자를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과 주주는 주가를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할 테니 말이다. “효율시장이론”이라는 유토피아가 현실을 대변하게 되었고 기업법의 해석과 개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¹³⁾

대리인이론으로 정교하게 부활한 소유와 통제의 문제는 이후 거래비용경제론, 그리고 불완전 계약이론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특히 보울스와 애컬로프의 “효율임금이론”, 윌리엄슨과 하트의 “발목잡기 문제(hold-up problem)”는 기업이 마주친 사회적 딜레마의 두 요소를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즉 (부품)생산계약과 관계특수투자, 그리고 노동계약과 노력(effort)의 지출 간의 문제가 그것이다. 기업 간 투자의 문제와 노동자의 효과적 통제 문제는 모두 팀생산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와 직결되어 있다. 즉 팀생산 전체의 이익은 잉여를 최대화하는 것일 텐데 이것이 생산 이전과 이후의 계약 및 재협상, 즉 분배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¹⁴⁾. 문제는 여기서 계약의 당사자인 기업들, 그리고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어떤 해법을 따르든 이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전체의 이익, 즉 잉여극대화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즉 전체와 (이기적) 개인의

13) 한국에서 이 이론은 재벌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 운동이 재벌의 문제점을 드러낸 성과는 가히 영웅적이다. 하지만 김상조가 고백하듯이 이 수단으로 현실에서 재벌을 개혁하는 데는 크나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14) 기존의 미시이론은 분배를 다루지 않거나 한계생산성에 따른 배분, 즉 생산의 문제로 해소한다. 이 때도 전가의 보도 완전경쟁시장이 등장하며 1차동차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시장 임금이나 부품 가격대로 계약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업 내의 관계는 사회적 딜레마에 속한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라는 의사결정 문제까지가 기업의 사회적 딜레마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2) 사회적 딜레마 해법으로서의 기업 거버넌스

(1) 노력 지출의 문제와 “민주적 기업이론”

맑스는 노동력 지출의 문제를 사실상 시장 상황(또는 시대적 상황)으로 해소했다. 광범위한 산업예비군(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력에 대한 임금은 최저 수준, 즉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노동력의 재생산비까지 떨어질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그의 노동시간 중 일부에 불과할 것이므로 나머지는 착취라는 것이 그의 논증이다. 즉 모든 잉여(가치)는 착취의 결과이다.

한편 보울스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실업의 존재를 효율임금이론으로 해석한다. 신고전과 경제학은 무시할 만큼 적은 비용으로 사법부에 의해서 청구권을 강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이런 외생적 강제 계약을 구체화할 수 없는 경합교환상태이다. 이런 불완전 계약 상황에서는 내적 강제가 필요하다.

고용계약 후에 노동자의 노력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사전적으로 고용계약에 모든 경우를 반영할 수도 없으므로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는 경합교환이다. 경영자(A)가 노동자(B)의 노력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실직비용이 양(+)이어야 한다. 즉 고용이 가져다 주는 가치(=고용의 가치)가 실업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후방진지, fallback position)보다 커야 한다. 노동자는 유보임금(실직비용을 0으로 만드는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경영자의 통제에 응해서 더 많은 노력을 제공할 것이고 그 결과 노동시장은 청산되지 않는다¹⁵⁾. 즉 이러한 효율임금 하에서 공급과잉과 실업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즉 경영자는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시장 청산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 내에서는 효율임금이 경영자에게 권력을 부여하게 된다.¹⁶⁾ 보울스와 긴티스의 이 논리는 기업 내의 권력(위계)의 근거를 설명함으로

15) 물론 실직비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의 청산임금을 낮출 수 있다면 굳이 효율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제도(예컨대 과거 영국의 신규빈법이나 농촌의 몰락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실직비용이 늘어난다면 이후 청산임금이 낮아질 것으로 현재의 임금은 효율임금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16) 보울스와 긴티스의 이런 주장은 노동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교환이 이뤄지므로 기업 내에

써 민주적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규범적 주장으로 이어진다.

한편 애컬로프(Akerlof, 1982, 1984)는 “선물교환으로서의 노동계약”으로 효율임금을 설명한다. 애컬로프는 1950년대 한 공장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회사가 제시한 최소기준을 평균 15%가 넘는 성과를 내는 현상에 주목한다. 더구나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나 승진을 바라고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

모든 개인이 물질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최소 기준을 올리려 할 것이고 노동자는 최소 기준에 딱 맞춰서 일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노동자들이 “공정한 하루치(fair day's work)”라는 노동규범을, 그리고 회사는 청산임금 이상의 임금과 관대한 최소기준을 서로 선물로 교환했기 때문이다. 즉 고용계약은 선물교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만일 회사 쪽에서 임금을 낮추고 평균 수준의 최소기준을 제시한다면 노동자들은 노력을 줄여서 오히려 회사의 잉여는 줄어들 수 있다¹⁷⁾.

보울스와 긴티스는 이기적 인간이라는 가정을 유지한 채 효율임금을 설명했고 애컬로프는 이미 “상호적 인간”(homo reciprocans)을 상정한 것이었다. 훗날 보울스와 긴티스는 카펜터스, 황성하와 함께, 상호성에 입각한 실험 경제학 논문(Carpenter, et al., 2009)을 발표해서 1997년 논문의 두 번째 논점을 보완했다. 즉 민주적 기업은 상호 감시 비용을 줄여서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실험실에서 보였다. 한편 애컬로프는 이 논문의 사회규범을 집단 정체성의 문제로 발전시켰다(Akerlof & Kranton, 2011).

이런 주장은 물론 대리인 이론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대리인 이론은 노동자에게 잔여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회주의처럼 실상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감시가 소홀하여 태만이 만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상호성은 첫째, 회사에 대해서 유보임금(또는 뒤에서 제시할 참조임금)보다 높은 경우 더 많은 노력을 지출하고 둘째, 노동자 간 상호감시와 자발적 응징을 통해 팀생산에 필연적인 무임승차(즉 태만)를 줄여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회사 내의 이런 협동(노박의 직접 상호성)과 기업간 경쟁(노박의 집단선택)은 노동규범을 확립시켜 소유와 통제의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값비싼 응징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커다란 팀에서도 잔여청구권과 이타적

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엘키엔과 뎀체즈류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17) 벨러메어와 셔러(Bellmare & Sherer, 2009)는 기업 수준 실험에서 선물주기가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을 실증했다. 현실에서는 공유자본주의론의 많은 연구가 노동자의 이윤공유가 경영참가를 동반할 때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실증했다.

응징을 연결하는 기초가 된다. 팀원 모두에게 잔여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동료의 무임승차가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되므로 집단정체성에 의한 “사회적 선호”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런 메커니즘은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다(Carpenter. et.al., 2009)¹⁸).

한편 대리인 이론이나 불완전계약이론은 기업법을 보완하는 제도로 물적 인센티브제(성과급이나 보너스, 또는 벌금)을 제안한다. 하지만 첫째, 물적 인센티브 제도는 오히려 사회규범을 무너뜨려서 비효율을 높일 수 있다(물적 인센티브와 사회적 규범에 관한 실험의 다양한 결과와 분류는 Bowles & Polaynia-Reyes, 2012을 참조하라). 둘째, 팀 인센티브가 개인적 인센티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셋째, 물적 인센티브 제도는 추가적인 노력 한 단위를 추출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인센티브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보울스-긴티스의 민주적 기업이론과 애컬로프의 선물교환이론¹⁹), 그리고 후일 이뤄진 실험경제학들은 노동자의 잔여청구권 보유, 그리고 자치(self policing)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명제를 뒷받침한다.

(2) “발목잡기 문제”와 불완전 계약이론, 그리고 협동해의 가능성

카네기 멜론의 “행동기업이론” 전통 위에서 있던 윌리엄슨(Williamson, 2009)은, 전형적인 거래비용이론과 불완전계약이론(Hart & Moore, 1988, Grossman & Hart, 1986, Hart & Moore, 2007, Hart, 2011)을 이어주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그가 초기의 불완전계약이론이 초점을 맞춘 “발목잡기 문제”를 분석한 선구자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느 한편이 관계특수적 투자를 해서 상대방에게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면 그는 그 투자를 꺼릴 것이다. 그러므로 자산특수성이 높은 관계에서는 한 쪽이 다른 쪽을 수직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그의 거래비용이론이다.

18)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더 흔쾌하게 행동한다. 또 남의 행동을 판단할 때도 이런 기준을 사용한다.

19) 맑스의 착취이론은 사실상 대리인 이론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임금이 사회적 필요노동의 최저선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의 존재, 밤샘 노동과 아동 노동이 그가 관찰한 현실이었다. 한편 보울스&긴티스나 애컬로프의 효율임금은 상한선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임금은 그 사이 어디에서 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될 것이다. 즉 핵심노동자에게는 효율임금을, 그리고 언제나 대체가능한 단순 노동자에게는 맑스의 하한 임금을 주는 체제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핵심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집단 정체성보다 팀원으로서의 집단정체성이 더 강해질 것이고 단일한 노동자 정체성, 나아가 일국이나 세계규모의 정체성은 더욱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완전 계약이론은 인간이 제한 합리적이고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계약은 불완전하다고 가정한다. 기실 모든 제도는 불완전하다. 글로 쓰여진 명시적인 법이나 제도는 비유컨대 면을 지나는 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현실에는 법이나 계약에 명시할 수 없는 광범위한 공백이 존재하는 셈이다. 불완전계약이론은 이 공백을 잔여통제권이라는 개념으로 메꾸려고 한다.²⁰⁾

그로스만과 하트(Grossman & Hart, 1998), 무어와 하트(Moor & Hart, 1987)는 코즈와 윌리엄슨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수직통합의 비용과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A와 B가 각각 투자를 해서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지만(팀생산의 이익) 그 기여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통제권을 가진 A가, 상대방 B의 자산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면 B는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쪽, 즉 투자의 한계생산성이 높은 쪽이 잔여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기온 등(Ahlgion et.al., 2011)의 숫자례를 게임이론의 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부품 판매자가 5달러 짜리 투자를 하면 16달러에 생산되던 부품을 10달러에 생산할 수 있다. 한편 부품 구매자가 5달러 짜리 투자를 하면 현재 32달러에 판매하던 완성품을 40달러에 팔 수 있다. 이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순간 윌리엄슨이 말하는 “근본적 전환”(fundament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서 이들 관계는 발목잡기 상황에 들어간다.

투자가 일어나기 전에 이들은 부품의 판매가격 또는 분배 규칙을 미리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가 이뤄진 뒤 부품의 가격을 협상해야 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잉여를 50:50으로 나누기로 한다면 이들은 투자할까? 이들이 투자 또는 홀드업 전략을 선택하는 데 따라 얻게 될 보수는 아래 표처럼 죄수의 딜레마를 이루므로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20) 반면 우리는 규범이 이 공백을 메꾼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문제는 뒤에서 보듯이 잔여통제라는 위계와 (합의) 민주주의라는 규범의 대립으로 환원된다.

<표3> 불완전계약과 발목잡기

		판매자	
		투자	홀드업
구매자	투자	10, 10	7, 12
	홀드업	11, 6	8, 8

그로스만과 하트는(그리고 아기온 등도) 이 경우 부품판매자가 구매자를 인수(상방통합)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투자, 홀드업)의 잉여 $19=7+12$ 가 (홀드업, 투자)의 잉여 $17=11+6$ 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윌리엄슨의 직관과 달리, 완성품업체가 부품업체를 수직통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자신의 투자가 더 많은 잉여를 증대시키는 경우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한쪽에 의한 수직통합보다 둘 다 투자하고 잉여를 둘로 나누는 (투자, 투자)의 협동해가 가장 낫다는 점에 주목한다. 물론 불완전계약 이론에서는 팀생산의 한계 기여를 확정할 수 없고 정보가 불완전하기에 이런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협동해에 도달할 수 없다. 즉 판매자가 구매자를 수직통합해도 그 회사는 완성품기업이 투자하도록 강제하거나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만일 어느 한 쪽이 그런 계약을 맺도록 강제할 능력을 지니고 있거나 서로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최종의 총 잉여를 공정성에 입각해서 분배할 것으로 신뢰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는 한국의 재벌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가까울 것이다. 물론 그 경우 결합 이익의 분배는 (10, 10)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20,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일 하청관계를 포기하는 게 더 손해라면(즉 앞 절의 표현을 쓴다면 실적비용=“하청해제비용”이 양이라면) 하청업체(판매자)는 이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²¹⁾

즉 보울스-긴티스의 권력관계는 발목잡기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보울스-긴티스가 상정한 민주적 기업이론을 기업 간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관계특수투자가 정태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상태에 들어 있다면 협동해를 택해서 더 큰 전체의 이

21) 보통 대칭적 죄수의 딜레마를 상정하지만 비대칭적 죄수의 딜레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또 다스굽타(Dasgupta, 2005)는 구체적으로 “착취가 은폐된 협동”의 모델을 만든 바 있다.

익을 얻어서 공정하게 분배할 수도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최근의 실험경제학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페어 등(Fehr et.al, 2008)은 상호적 인간과 이기적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그림3> 참조)에서 관계특수투자와 공정성의 문제를 다뤘다.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들거나 이타적이지 않다면 그러할 것이다.

결과만 소개한다면 이들의 실험은 소유구조가 관계특수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초기 조건에서 출발해도 가장 효율적인 소유권 할당에 도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재산권이론(불완전 계약이론)과 동일한 결론이다. 하지만 재산권이론과 달리 이들 실험이 도달한 소유권 할당은 합작소유(joint ownership, 수직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력 투자)였다. 저자들은 이를 어느 한 쪽의 수직통합보다 공동 소유가(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공정성을 암묵적 계약의 이행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²²⁾

물론 스위스의 뮌히 대학생들이 행한 이 실험을 기업의 행동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의 각종 실험들은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상황의 사회규범에 의해 행동함으로써 이기적 인간을 상정한 제도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왔다. 이 점에서 앞으로 (모델링이 지극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에서 기업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22) 이 실험의 결론은 다음 두 그림이 간명하게 보여준다. 피실험자들 다수는 (하트와 무어의 숫자례와 같은 상황에서) 수직통합을 택하지 않았고(Fig1), 상대의 투자에 대응하여 상호적으로 자신의 투자를 늘렸다(Fi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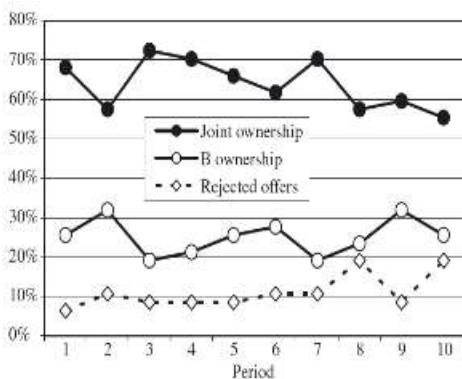


Fig. 1. Share of Ownership Choices (J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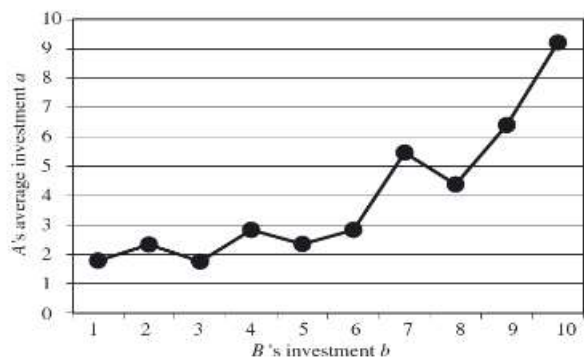


Fig. 2. A's Average Investment Given b Under Joint Ownership (JOD)

한편 페어와 하트는 최근에 공동 작업(예컨대 Fehr, et.al., 2011)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불완전 계약이론이 “상호적 기업이론”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실험 결과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지역의 특징은 정보와 위험의 공유이다(정태인, 이수연, 2013, 14장). 너무나 작은 기업들이기에 관련 기업이 동시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고도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지역에서는 지식과 정보 자체가 공공재에 가까운데 이런 공유하는 자산에 대해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규범을 어기는 일이고 상호성의 작용에 의해 퇴출된다. 페어 등의 실험은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3) 기업의 의사결정과 이해당사자론, 그리고 공유자본주의론

정치학자 달(Dahl, R)은 왜 정치에는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적용하면서 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리바이어던(즉 전제)을 당연시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반대로 기업에서 불가능하다면 국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 기업이론의 답은 각각 다르다.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코즈와 윌리엄슨은 당연히 권위 또는 위계(hierarchy)를 인정한다. 수직통합을 한 이유가 복잡한 정보의 탐색과 계약의 체결과 이행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리인 이론가들은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반면(왜냐하면 다른 이해당사자와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보울스 등은 내적 강제의 메커니즘으로서 권력을 상정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민주적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조한다²³⁾.

우선 기업이 기술/조직적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 또는 개인은 필요할 것이다. 그 기술이나 조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맑스의 비유를 따르자면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통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딜레마 측면에 이르면 얘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분배나 통제권의 결정은 곧 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현실의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법적으로 의사결정권을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지만 이 권한은 일시적이거나 조건부이다. 그

23) 보울스와 긴티스는 노동자들의 투표에 의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런 의미에서 “결정권은 대출(loan)되는 것이지 소유(own)되는 것이 아니다”(Baker et.al., 1997).

일반적으로 작업 현장의 정보는 하급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금융이나 최신 기술, 심지어 기업과 관련된 정치적 정보는 상급자가 더 많이 가질 것이다. 하지만 하급자가 자신의 정보를 생산해서 상급자에게 전달할 유인은 별로 없다. 그러므로 하급자에 대한 적절한 권한 위임은 정보를 생산하고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팀생산에서 각 이해당사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생산에 투입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단순히 계약에 의해서 완결되지 않는다. 특히 위에서 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투입인 노동이나 투자의 경우 인간(집단)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상의 논의와 팀생산 참여자의 권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이런 점에서 경영학의 이해당사자론(Freeman et.al., 2004) 법학의 이해당사자론(Blair, 2012, Blair & Stout, 1999)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학의) 이해당사자론은 팀생산 이론, 그리고 상호성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팀의 생산에 기여한 이해당사자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기업법인에서 이사회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

법적으로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주주우선론(shareholder primacy)”은 회사법의 주주 투표권, 경영자 보상 규칙, 인수 규칙 등에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팀생산 분석은 모든 참여자들이 법인기업(corporate enterprise)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원하며...참여자로부터 지지와 협동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거버넌스배열을 찾아내는 데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Blair, 2012)한다. 즉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이들에 따르면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지닌 독립적 이사회의 역할은 내생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주이론과 달리 통제권과 소유권의 분리는 고쳐야 할 어떤 질환이 아니라 회사 형태의 본질적 부분이 된다.

한편 경영학의 이해당사자론은 주로 전략적 경영과 경영윤리의 관점을 강조한다. 프리만은 현재의 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윤리를 분리시킨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현실에서도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고루 추구하는 기업들이 더 나은 성과를 얻는다. 예컨대 콜린스의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는 이런 주장의 좋은 사례로 간주

된다.

이 점에서 경제학자 프리만 등의 공유자본주의론도 케를 같이 한다. 프리만 등(Freeman, R. et.al., 2011)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지난 30년간 종업원지주제(ESOP), 이윤공유제를 각종 경영참가제도와 결합한 기업들이 높은 성과를 얻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그들은 최근에 출간된 책의 에필로그에서 이런 실증적 결과들을 애컬로프의 선물교환이론과 최근의 실험경제학이 이론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이들은 각 이해당사자가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기업의 존속이나 치명적 손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이론보다 현실에 기대고 있는데 법률학자들은 주주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에 재량권을 광범하게 허용하도록 기업법(특히 신의의 원칙)을 해석해야 한다(또는 법원이 이미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학자들은 이사회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와 이윤공유의 제도들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즉 이해당사자론이 더 효율적이면서도 공정의 규범에 걸맞다는 것이다.²⁴⁾

나는 기업에도 민주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적어도 한국의 재벌처럼 지배주주=경영자가 경제력과 정보력, 심지어 정치력까지 갖추고 기업 내외에서 독재를 하는 상황은 효율성이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차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주주(또는 금융시장)에 의한 통제나 국가의 규제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팀생산과 이해당사자론에 따르면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나 이사회 참여를, 하청 기업에는 단체협상권을, 소비자에게는 소비자 집단행동의 권리를 부여하는 등 이해당사자 각자에게 적절한 견제 능력을 부여하는(empowerment)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이들의 상호작용이 적절한 제도와 규범을 구성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효율과 공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방향만은 확실하다.

24) 한편 사회학이나 심리학자들은 집단 사고, 집단 정체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포스와 린덴버그(Foss & Lindenberg, 2011)는 개인을 단위로 하지 않고 팀 자체의 동기, 팀 추론, 팀 정체성과 목표 등 심리학, 진화인류학의 성과를 차용하고 있다. 또한 아르간도나(Argandoña, 2012)는 기업이라는 집단이 공동선을 인지하고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집단선택이론과 기업이론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협동조합의 기업이론을 향하여 -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협동조합의 거버넌스는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잔여청구권과 잔여통제권 모두 조합원에게 있으며, (물론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 이들이 선출한 독립적 이사회에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위임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자액과 무관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 1인 1표의 민주주의에 의해 이뤄진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은 ICA 7원칙²⁵⁾은 대단히 추상적이지만 협동조합 이해당사자들의 행동 규범을 정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협동조합은 상호적 인간관에 입각해 볼 때, 이상적인 기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7원칙은 협동에 의한 사회적 딜레마 해결을 이름에서부터 표방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공유와 공동이용, 그리고 자율성(자치는) 오스트롬의 공유자산 관리의 8원칙에 부합하며 협동조합의 협동은 단위 조합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오스트롬의 다중심 거버넌스에 해당한다. 즉 협동조합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는 단위조합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간 보수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팀생산에서 한계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협동조합의 규범에 비춰 볼 때 성과급 등 물질적 인센티브의 부과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정성의 규범에 의해 팀의 투입을 증가시키는 쪽이 더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춰 볼 때 협동조합의 거버넌스는 이상적이라 할 만 하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경제학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협동조합을 상찬했다. 앞에서 논의한 맑스는 물론이고 자유주의자라 할 수 있는 밀, 그리고 한계효용학파의 효시인 발라스²⁶⁾까지 19세기의 경제학자들을 폭넓게 망라하고 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 “협동조합은 희귀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09년에 발표한 글(정태인, 2009)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완해야 할 약점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25) 각 국의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단위 협동조합은 이 7원칙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이 논의는 사회적 경제 일반에도 대체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6) 발라스(프랑스 표기대로 발음하면 발라겠지만 가문에서는 발라스를 원한다고 한다)는 사회개혁의 3대 목표로 토지국유화, 협동조합 진흥, 그리고 독점규제를 내세웠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본질적 차이는 투자자가 기업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노동자가 기업을 통제하는가에 있다. 바꿔 말하면 투자자가 노동을 고용하느냐, 노동자가 투자를 고용하느냐의 문제이다. 현실에서 이 둘 간의 근본적 차이는, 물리적 자산의 소유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인간에 대한 소유권은 쉽게 이전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즉 주주는 언제든지 탈출(exit)라는 선택지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²⁷⁾ 조합원, 특히 노동자 조합원은 그럴 수 없다.

우선 자본동원의 면에서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을 통해 유한책임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단순하게 거품이 생긴다 해도)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비(up front fee)와 비분리 자산(Indivisible Reserve, 협동조합에 유보되는 자산은 조합이 해산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이라는 제약 속에서만 자본을 동원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이전은 노동자 구성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위험기피 성향의 조합원이라면 자신의 전 재산을 출자하기 어려우므로 출자만으로 투자자금을 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금융기관은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데 가장 평범하지만 일반적인 이유는 은행이 협동조합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앨키앤과 뎀제츠 등은 “모든 사람의 소유는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Alchian & Demsetz, 1972)여서 아무도 태만을 감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에서는 최대 주주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1인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노동자의 구성이 이질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Hansman, 1990, Kremer, 1997). 다수결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평균적 노동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 할 것이므로 고능력자는 협동조합을 기피할 것이다(Kremer, 1997).

이상의 비판은 우리가 앞 절에서 본 바대로 대리인이론과 불완전 계약이론의 노력 지출 문제(또는 태만 문제), 투자의 문제, 그리고 의사결정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신고전파의 워드-도마-바넥(W-D-V firm)의 고전적인 비판이 있다. 협동조합은 노동자/조합원 1인당 순수입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급대응에 비탄력적이며 심지어

27) 바로 그 때문에 주주는 경영자나 노동자를 통제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기업의 전망이 나쁘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탈출 시기를 따질 것이다.

수익성이 좋을 때 고용을 줄이거나, 비조합원 노동자를 고용하여 주식회사로 타락할 것이다(이른바 ‘워드효과’). 또한 은퇴에 가까운 노동자일수록 미래의 투자수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현재의 투자에 반대할 것이다(Pejovich, 1992, Jensen & Meckling, 1979). 따라서 과소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거나(‘시야문제 horizon problem’) 새로운 조합원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공동소유문제 common property problem’). 또한 소규모 협동조합은 기술혁신에도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중에는 현재 주식회사가 지배적이고 이에 따라 모든 제도가 이뤄져 있으므로 협동조합이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경로의존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평가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대출 기피라든가, 불신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프리미엄이 그러하다. 이런 측면은 사회적 경제의 존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협동조합의 상위 네트워크에 기금을 적립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주고(이탈리아 레가의 조합 기금의 사례),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설립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²⁸⁾ 장차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제조업에서도 협동조합형 기업이 성공하려면 금융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협동조합의 사회적 규범, 조합원들의 상호적 행동으로 인해 경제학의 예측이 빗나간 경우도 많다. 예컨대 협동조합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는 데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야문제’나 ‘공동소유문제’ 때문에 과소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수익을 배당하지 않고 조합 내에 자본을 축적한다든가, 상위 기관에 기금을 조성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협동조합은 경기 상황에 대해 주로 임금의 변화로 대응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최근의 유럽위기 상황에서도 몬드라곤이나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의 실업률이 훨씬 낮은 것은 이를 증명한다.

감시와 응징이라는 면에서도 서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동료 간의 상호감시가 더 효율적이고 노동자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합의(commitment)와 신뢰가 존재한다면 아예 규범 위반이 줄어들 것이다. 현실에서 협동조합은 적은 감시자와 이윤공유로 높은 생산성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Kruse, 1993).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문제에 관해서는 젠슨이 이해당사자론에 대해서도 제기한 질

28) 몬드라곤의 노동자금고, 레가의 유니폴, 퀘벡의 데자르탱 등, 협동조합이 성공한 지역에는 항상 탁월한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현재 발효되어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금융 행위를 금지한 것은 커다란 약점이다.

문, 즉 여러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한스만이 지적한 부분, 즉 조합원의 이질성이 증가할 때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고민해 볼 만하다. 여러 이해당사자(조합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생기는 난점은 문제해결을 위해 수학적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면 극히 곤혹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현실에서도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묘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은 명쾌한 연립방정식을 세운 뒤에 문제를 풀지는 않는다. 정보의 공유와 상호 학습, 그리고 토론이 “주먹구구”(heuristics)처럼 보이는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²⁹⁾

이질적 구성원이 많아질 때 의사결정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로일 수 있다.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규모로 유입됐을 때 생긴 노동문제, 몬드라곤이 국내 일반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것 역시 오랜 기간 동안의 숙의였다. 물론 급박한 경영 상의 결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회가 책임을 지지만 특히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는 조합원 스스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상의 반비판은 앞에서 본 “협동의 경제학”과 기업이론의 재해석에서부터 쉽게 도출된다. 즉 협동조합의 경제학은 기존의 호모에코노미쿠스에 입각한 기업이론이 아니라³⁰⁾ 상호성에 입각한 기업이론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협동조합이 희귀한 데는 그동안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제일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는 협동조합을 배우고 직접 만들려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가 그러 했듯이 만성적인 위기 속에서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일 테지만 현재의 불은 세계적으로도 유별나다. 하여 인식 상의 한계는 단숨에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면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협동조합의 네트워크화, 지역공동체에 뿌리 내리기, 복지제도와와의 적절한 연결을 통해서 한국의 협동조합은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

29) 논문을 쓰는 일과 비교해 볼 때 집안 일은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가정주부들은 수많은 주먹구구를 루틴으로 만들어 너무나 쉽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30) 예컨대 거래비용이론에 입각해서 협동조합을 기업과 시장 사이의 혼합종(hybrid) 또는 네트워크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물론 에밀리아 로마냐에서 보듯이 협동조합은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Zamgni, V, 2009), 다스굽타의 사회적 자본=신뢰의 네트워크로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과 자산특수성에 의해 분류된 네트워크는 분명 다른 기준에서 도출된 것이다.

서 사회적 경제는 상호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맞으므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할 수 있다(정태인 등, 2012).

참고문헌

- 민정우, 1986, 식민지 사회의 성격 구명을 위한 일시론, 《녹두서평1》, 녹두
- 정태인, 2010, 경제대안의 출발점, ‘사회경제’, 《리얼진보》, 레디앙
- 정태인 등, 2012, 《리셋 코리아》,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정태인 등, 2013,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 최정규, 2009, 《이타적 인간의 출현》, 뿌리와 이파리.
- Akerlof, G., 1982, Labor Contracts as Partial Gift Exchang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97
- Akerlof, G., 1984, Gift Exchange and Efficiency - Wage Theory : Four Views, Vol.74
- Akerlof, G., R. Kranton, 2010, 『Identity Economics』, 안기순역, 2010, 『아이덴티티의 경제학』, 랜덤하우스.
- Alchian, A. A., Harold Demsetz, 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2
- Argandona, A., 2012, The Common Good, Stakeholder Theory and the Theory of the Firm, The Role fo Business in Society and the Prusuit of the Common Good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 Bengtsson, N., Per Engstrom, 2012, Are Trust-based Contracts Efficient? Evidence from a Randomized Policy Experiment,
<http://www.parisschoolofeconomics.eu/IMG/pdf/may2012-paris-bengtsson-engstrom.pdf>
- Blair, M., Lynn A. Stout, 1999, A Team Production Theory of Corporate Law, Virginia Law Review, Vol.85
- Blair, M., 2012, Corporate Law and the Team Production Problem, Vanderbilt Law and Economics Research Paper, No.12-12
- Bolton, G. E., Werner Guth, Axel Ockenfles, Alvin E. Roth, 2010, Social Behavior in Economic Games, 『The Selten School of Behavioral Economics』, Springer
- Bowles, S., Herbert Gintis, 1993, A Political and Economic Case for the Democratic Enterprise, Economics and Philosophy, Vol.9
- Bowles, S., 2011, A Cultural-Institutional Market Failure,
<http://tuvalu.santafe.edu/~bowles/CulturalinstitutionalMarketFailure.pdf>

- Bowles, S., 2012, 『The New Economics of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wles, S., Sandra Polaynia-Reyes, 2012, Economic Incentives and Social Preferences: Substitutes or Complemen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 Brandts, J., Enrique Fatas, 2012, The Puzzle of social Preferences, Special Issue on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Vol.70
- Brown, M., Armin Falk, Ernst Fehr, 2012, Competition and Relational Contracts : The Role of Unemployment as a Dicipinary Devic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10
- Carpenter, J., Samuel Bowles, Herbert Gintis, Sung-Ha Hwang, 2009, Strong Reciprocity and Team Production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71
- Cirillo, R., 1984, Leon Walras and Social Justice,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43
- Dasgupta, P. 2005, Economics of Social Capital, *Economic Recore*, V81, Issue Supplement s1.
- Deakin, S., Frank Wilkinson, 1995, Contracts, Cooperation and Trust : The Role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ESRC Centre for Business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 Working paper No.10
- Dufwenberg, M., Alec Smith, Matt Van Essen, 2013, Hold-up : With a Vengeance, *Economic Inquiry*, Vol.51
- Emmett, R. B., 2011, Frank H. Knihgt on the "Entrepreneur Function: in Modern Enterprise, *Seattle University Law Review*, Vol.34
- Foss, N. J., Siegwart Lindenberg, 2012, Teams, Team Motivation, and the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Vol.33
- Freeman, R. E., 1988, Stakeholder Theory of the Modern Corporation, 『Perspectives In Business Ethics Sie 3E』, Tata McGraw-Hill Education
- Freeman, R. E., 1999, Divergent Stakeholder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4
- Freeman, R. E., Andrew C. Wicks, Bidhan Parmar, 2004, Stakeholder Theory and "The Corporate Objective Revisited", *Organization Science*, Vol.15
- Freeman, R. E., Kirsten Martin, Bidhan Parmar, 2007, Stakeholder Capitalism,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74
- Gneezy, U., S. Meier, P. Rey-Biel, 2011, When and Why Incentives (Don't) Work to Modify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25, No.4
- Greenwood, M., Harry J. Van Buren III, 2010, Trust and Stakeholder Theory : Trustworthiness in the Organisation-Stakeholder Relationship,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95

- Hahn, T., 2012, Reciprocal Stakeholder Behavior : A Motive-Based Approach to the Implementation of Normative Stakeholder Demands, *Business & Society*, 0007650312439029, first published on March 28, 2012
- Hansmann, H. 2008, Firm Ownership and Organizational Form, Yale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No.450
- Hansmann, H., Reinier Kraakman, 2011, Reflections on the End of History for Corporate Law, Yale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No.449
- Harrison, J. S., Douglas A. Bosse, Robert A. Phillips, 2010, Managing for Stakeholders, Stakeholder Utility Functions, and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31
- Hart, O., John Moore, 1996, The Governance of Exchanges : Members' Cooperatives Versus Outside Ownership,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12
- Hart, O., John Moore, 2007, Incomplete Contracts and Ownership : Some New Though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7
- Hart, O., 2011, Thinking about the Firm : A Review of Daniel Spulber's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49
- Jossa, B., 2005, Marx, Marxism and the Cooperative Movement,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29
- Kaufman, A., Ernie Englander, 2011, Behavioural Economics, Federalism, and the Triumph of Stakeholder Theory,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02
- Klein, P. G., Joseph T. Mahoney, Anita M. McGahn, Cristos N, Pitelis, 2012, Who is in Charge? A Property Rights Perspective on Stakeholder Governance, *Strategic Organization*, Vol.10
- Kruse, D. L., Richard B. Freeman, Joseph R. Blasi, 2010, Shared Capitalism at Work : Employee Ownership, Profit and Gain Sharing and Broad-based Stock Op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ndenberg, S., Nicolai J. Foss, 2011, Managing Joint Production Motivation : The Role of Goal Framing and Governance Mechanism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6
- Lorenz, E. 1999, Trust, Contract and Economic Cooper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23
- Mainardes, E. W., Helena Alves, Mario Raposo, 2011, Stakeholder Theory : Issues to Resolve, *Management Decision*, Vol.49
- Maximiano, S., Randolph Sloof, Joep Sonnemans, 2013, Gift Exchange and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Games and Economic Behavior*, Vol.77
- Nowak, M. 2006, Five Rule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V314, December.
- Nowak, M., 2011, 『Supercooperator』, 허준석역, 2012, 『초협력자』, 사이언스 북스.

- Parmar, B. L., R. Edward Freeman, Jeffrey S. Harrison, Andrew C. Wicks, Lauren Purnell, Simone De Colle, 2010, Stakeholder Theory : The State of the Art, The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Vol.4
- Sacchetti, S., Ermanno Tortia, The 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of Cooperatives : Effective Membership and Consistency of Values, AICCON Working papers No.111
- Simon, H., 1978, Rational Decision-making in Business Organizations, Nobel Memorial Lecture
- Stout, L. A., 2013, Oh the Rise of Shareholder Primacy, Signs of Its Fall, and the Return of Managerialism(in the Closet), Seattle University Law Review, Vol.36
- Tomasello, M., 2008, Origins of Human Cooperation,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Stanford University October 29-31, 2008
- Tullberg, J., 2013, Stakeholder Theory : Some Revisionist Suggestion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Vol.42
- Westphal, J. D., Edward J. Zajac, 2013, A Behaviorla Theory of Corporate Governance : Explicating the Mechanisms of Socially Situated and Socially Constituted Agency, The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Vol.7
- Wicks, A. C., Jeffrey S. Harrison, 2013, Stakeholder Theory, Value and Firm Performance, Business Ethics Quarterly, Vol.23
- Williamson, O. E., 2010, Transaction Cost Economis : The Natural Progre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100

5

실체경제학 대 형식경제학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폴라니와 사회적 경제

- 일시: 2015년 8월 13일(목) 19:30~21:3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4층)

주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교육기간: 2015. 7. 9(목)~8. 20(목)

제도화된 과정으로서의 경제

칼 폴라니

이 장에서 우리의 주된 목적은 모든 여러 사회 과학을 아울러서 “경제적”이라는 용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다¹⁾.

이러한 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출발에 있어서는 모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쾌하게 인식하고 시작해야 한다. 인간의 여러 활동을 지칭하는 경제적이라는 말에는 두 개의 다른 의미가 중첩되어 있으며, 그 두 의미의 근원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실체적 의미 그리고 형식적 의미라고 부를 것이다.

경제적이라는 말의 실체적 의미는 인간이 그 생계를 자연과 자신의 동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파생된다.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의 자연 및 사회적 환경과 맺는 교호 작용으로서, 그 결과로 인간에게 물질적 욕구 충족의 수단의 공급이 벌어지는 교호 작용을 지칭한다.

경제적이라는 말의 형식적 의미는 “알뜰하게 아끼는(economical)”이나 “절약함(economizing)”과 같은 단어들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목적-수단 관계의 논리적 성격에서 파생된다. 이는 구체적인 선택의 상황을 지칭한다. 즉 수단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여러 가지 수단 사용 방법들 사이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논리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러한 수단의 선택을 운용하는 여러 규칙들을 합리적 행동의 논리라고 부르기로 했을 때, 이 형태의 논리를 형식적 경제학이라는 말—비록 임기응변이지만—로 지칭할 수 있다.

“경제적”이라는 말의 이 형식적 실체적 두 가지 근원적 의미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후자는 논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며 전자는 사실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형식적 의미는 부족한 수단을 여러 용도들 가운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선택과 관련된 한 집합의 규칙들을 함축하는 것이다. 실체적 의미에는 수단의 부족함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하

1) “Economy as Instituted Process” in K. Polanyi et. al. ed. *Trade and Market in Early Empires* (Glencoe, Free Press, 1957), 홍기빈 초역, 역자의 허용 없이 인용 불가.

는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다. 인간의 살림살이에는 선택의 필요성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선택이 존재할 경우라고 해도 반드시 수단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제한의 결과로서만 선택이 도출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사실상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물리적 사회적 조건들의 일부는 공기, 물,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등과 같이 그다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선택의 상황에서 설득력을 갖는 논리와 살림살이에서 설득력을 갖는 논리는 삼단논법의 힘과 만유인력의 힘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제에서 작동하는 법칙은 정신의 법칙이요, 실체적 의미의 경제에서 작동하는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이 두 개의 의미는 실로 가장 거리가 먼 상극의 것들로서, 의미론적으로 보자면 남극과 북극만큼이나 서로 완전히 반대방향에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장은, 과거와 현재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경험적인 경제 형태들을 조사하는 작업을 위해서 사회 과학이 필요로 하는 개념들은 오로지 이 “경제적”이라는 말의 실체적 의미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라는 말에 대한 보편적인 준거틀을 구성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이 경제라는 주제를 실체적인 관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우리의 경로 앞에 가장 먼저 놓여 있는 장애물은 “경제적”이라는 개념에 실체적 그리고 형식적이라는 두 개의 의미가 전혀 반성 없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제한적인 의미로 쓰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한에서는 이렇게 이 하나의 말로 두 의미를 융합시키는 것도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재 쓰이고 있는 경제적이라는 개념에는 그러한 융합에 내재한 위험을 명징하게 사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식하지 않은 채로 “생계”라는 의미에서의 경제적이라는 말과 “희소성”이라는 의미에서의 경제적이라는 말을 융합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용어를 결합시키게 된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우연적인 정황의 산물이었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오로지 선택의 여러 규칙들만이 적용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의 살림살이를 조직하는 형태가 생산된 바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는 여러 가격 형성 시장들로 이루어진 단일의 체제였다. 이러한 체제에 참여하는 이들은 교환 행위들을 벌이게 되어 있고, 그들은 그 교환 행위에 있어서 수단의 부족함으로 유발되는 선택을 행동 원리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이 체제는 “경제적”이라는 말의 형식적 의미에 기초한 방법이 지배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패턴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체제로 경제가 통제되고 있는 한에서는 형식적 의미와 실체적 의미가 현실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일치하게 된다. 일반인들도 이렇게 중첩된 개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마샬, 파레토 또 뒤르켐 등과 같은 학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를 똑같이 받아들였다. 멩거 한 사람만이 그의 사후에 출판된 저작에서 이 용어에 대해 비판을 가

하였지만 그도 또 막스 베버나 그 뒤의 탈코트 파슨스도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 사회학적 분석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감지하지 못하였다. 사실, 앞에서 말했듯이 현실에서 하나로 일치하게끔 되어 있는 용어의 두 가지 근원적 의미를 굳이 구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듯 했다.

따라서 “경제적”이라는 말의 이 두 가지 의미를 일상적 언어 용법에서 굳이 구별하려 드는 것은 순전히 학자 냄새 풍기는 짓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 과학에서의 정밀한 방법론에서 보자면 이 두 개의 의미가 하나의 개념 안에 합쳐져 버렸다는 것이 대단히 해로운 것임이 입증된 바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경제학은 여기에서 예외이다. 시장 체제에서는 경제학의 여러 용어들이 상당한 현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 경제사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한 인간 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연구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살림살이가 묻어 들어 있는 제도가 시장 말고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과 맞부닥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 구체적 시장 요소들의 존재에 기초한 특수한 형태의 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 방법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시장 이외의 제도를 연구할 때에 나오는 문제들을 공략할 수는 없는 일이다.²⁾

이에 이 글의 논지를 펼쳐낼 순서를 대략 제시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경제적”이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에서 파생된 두 개의 개념들을 더욱 자세히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먼저 형식적 의미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실체적 의미의 개념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경제들 - 고대 경제이든 원시 경제이든 - 을 그 경제적 과정이 제도화된 방식에 따라서 서술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 시험적 경우로서, 교역, 화폐, 시장이라는 세 가지 제도들을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이 세 개의 제도들은 형식적 의미의 용어들로서만 정의되어 왔었기에, 이 제도들을 이해하는 데에 시장적 방법 이외의 그 어떤 접근 방법도 가로막혀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제도들을 실체적 의미의 용어들로서 다루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 경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준거들을 얻는 데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 이렇게 다른 의미가 중첩된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경제주의적 오류”라고 부를만한 것을 조장하게 된다. 이는 시장적 형태를 띤 경제를 경제 일반과 동일한 것인 양 여기는 인위적인 태도이다. 옛날 흄과 스펜스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프랭크 나이트(Frank H. Knight)와 노스롭(Northrop)에 이르기까지 사회사상에서 경제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항상 이러한 한계가 노정되었던 바 있다. 라이오넬 로빈스의 글(Lionel Robbins, 1932)은 경제학자들에게는 유용할지 몰라도 이 문제를 치명적으로 왜곡시켜버린 경우이다. 인류학의 경우에서 보자면 멜빌 허스코비츠(Melville Herskovits)가 1940년에 선구적인 노력을 보인 바 있지만 최근의 저작(1952)은 다시 후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1. “경제적”이라는 말의 형식적 의미와 실체적 의미

우선 형식적 의미의 개념들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그리고 그 시작으로 합리적 행동의 논리라는 것에서 형식적 경제학이 생산되고 또 그 다음에 이 형식적 경제학으로부터 경제 분석이 생겨나게 되는 방식을 먼저 살펴보자.

여기서 합리적 행동이란 목적과의 관계 속에서 수단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수단이란 그 목적에 복무하는 데에 적절하다면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자연 법칙들을 빌 수도 있고 게임의 법칙들을 빌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목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수단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수단이 목적과 맺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더 바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미신과 푸닥거리보다 과학을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고 해서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아니다. 왜냐면 합리적이란 목적이 무엇이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또 수단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 당사자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든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살하기로 결심했을 때 스스로의 죽음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을 고르는 행동이 합리적이다. 또 그 사람이 만약 흑마술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마술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죽음을 위한 푸닥거리를 준비해달라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합리적 행동의 논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목적 수단 관계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거의 무한에 가깝게 다양한 인간적 관심사에 등장하게 된다. 장기(將棋)나 기술에서 혹은 종교적 삶이나 철학에서 인간의 목적은 혼한 일상적 문제로부터 지극히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들까지 폭넓게 펼쳐져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의 영역에서 또한 그 목적은 잠깐 갈증을 달래는 것에서부터 무병장수(無病長壽)의 삶을 얻는 것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그 각각의 목적에 대응하는 수단은 한 컵의 물 그리고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공기 맑은 곳에서 보내는 노후 생활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수단이 충분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합리적 행동의 논리는 우리가 형식적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선택 이론으로 전환하게 된다. 물론 그렇게 해도 아직 합리적 행동의 논리는 실제 사람들의 경제와 논리적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된다. 이미 말했듯이, 형식적 경제학은 수단이 충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선택의 상황을 준거점으로 삼는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희소성 공준이다. 이 공준은 첫째 수단의 불충분성을 요청하며 둘째 그러한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을 요청한다. 목적과 비교해 볼 때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려면 “귀 표시(carmarking)”의 방법을 써서 수단이 모든

목적에 충분히 돌아갈 만큼이 있는가 아닌가를 밝히면 된다. 수단의 부족이 선택의 문제를 낳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수단에 두 가지 이상의 쓰임새가 있어야 하며 또 목적에는 서열이 있어서 두 개 이상의 목적을 선호 순서에 따라 줄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사실의 문제이다.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관습상의 문제인지 기술상의 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목적의 서열 매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선택, 불충분성, 희소성 등을 이렇게 조작 가능한 용어가 되도록 정의해놓고 나면, 수단의 불충분성이 없어도 수단의 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선택이 없어도 수단의 불충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선택이란 그른 것보다 옳은 것을 선호함에 의해 유발 될 수도 있다 (도덕적 선택). 또 두 개 이상의 길이 마주치는 교차로에서 있을 때에는 그 길들이 모두 똑같은 유리함과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하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작업상 생겨나는 선택). 이 중 어느 쪽 경우라 해도 수단이 풍족하다고 해도 선택의 어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다. 희소성은 모든 합리적 행동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철학 활동 또한 순전히 상상력을 발휘하여 무언가 만들어내기만 하는 놀이가 아니기에 여기에서도 논리적 명확성을 위하여 논리 전개에 필요한 전제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경제화(economizing)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간의 살림살이의 영역으로 되돌아가 보자. 어떤 문명에서는 희소성 상황이라는 것이 거의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으며, 또 희소성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보편적인 것처럼 되어버린 문명도 있다. 그 중 어떤 경우에서도 희소성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는 그 불충분성이 자연에 기인하는 것이건 인간이 만든 법률에 기인하는 것이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 경제 분석의 문제이다. 이는 형식적 경제학을 단일의 시장 체제라는 구체적 유형의 경제에 적용하여 생겨난 학문 분야이다. 시장 체제에는 여러 제도들이 있어서 그 제도들이 개인들이 내리는 선택으로부터 경제적 과정을 구성하는 여러 상호의존적 운동들을 만들어내게끔 만들거니와, 이 경우에 경제는 이 시장 체제의 여러 제도들 속에 구현되어 있게 된다. 제도들이 그렇게 개인들의 선택으로부터 상호의존적 운동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가격 형성 시장의 활용을 보편화시킴으로서 달성된다. 노동, 토지, 자본의 사용을 포함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될 것이며,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갖도록 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소득은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에서 생겨나도록 되며, 노동, 토지, 자본은 각각 임금, 지대, 이자를 발생시키며 이들은 판매되는 항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 판매되는 것의 가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들이다.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보편적 구매력이라는 것이 널리 도입됨에 따라, 희소성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과정은 화폐 즉 여러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지만 항상 부족한 수단을 배분하는 과정으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선택의 여러 조건들은 물론 선택의 여러 결과들 또한 이런저런 가격의 모습으로 수량화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형식적 접근 방법은 가격을 모종의 특출한 경제적 사실로 삼아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묘사를 내놓는다. 수단의 불충분함에서 유발되는 무수한 선택들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바로 경제라는 것이다. 경제 전체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적 도구들이 모여서 경제 분석이라는 학문 분야를 구성하게 된다.

경제 분석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여기에서 나온다. 형식적 의미는 일련의 경제화 행동 즉 희소성 상황으로 인한 일련의 선택으로서의 경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들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 규칙들을 현실의 경제에 어느 만큼이나 적용할 수 있는가는 그 경제가 실제의 현실에 있어서 정말로 과연 그러한 일련의 경제화 활동으로 구성되는가에 달려 있다. 현실의 경제적 과정은 인적 물적 자원의 장소적 이동(locational movements)과 소유권상 이동(appropriational movements)으로 구성되는 바, 수량적인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운동이 마치 수단의 부족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들의 두 기능이며 그 결과로 가격을 산출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단일한 시장 체제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사실상 형식적 경제학과 실제 인간이 살아가는 경제 사이에는 전혀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 단일한 가격 형성 시장 체제의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경제 분석은 경제의 작동을 탐구하는 방법으로서의 적실성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된다. 비 시장적 가격에 의존하는 중앙 계획 경제가 그 잘 알려진 예가 될 것이다.

실체적인 경제의 개념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실의 경제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실체적 경제 개념을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매력적인 정의는 못 된다), 인간과 인간의 환경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 작용의 제도화된 과정으로서, 욕구 충족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의 지속적 공급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목적 달성에 물질적 수단의 사용이 들어간다면 욕구 충족을 “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과 잠자리와 같은 구체적 유형의 생리적 욕구의 경우라면 소위 각종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의 사용만을 포함한다.

이렇게 경제란 모종의 제도화된 과정이다. 이러한 정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과정”이라는 개념과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음”이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 개념들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준거틀에 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자.

과정이라는 개념은 무언가를 운동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운동이란 장소 상의 변화이거나 소유권상의 변화이거나 혹은 둘 다를 지칭한다. 다른 말로 하

자면, 물질적 요소들은 장소를 바꾸거나 “임자”를 바꿈으로써 그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위치 이동은 아주 상이한 성격을 가진 것들로서 같은 방향으로 벌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개의 운동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의 자연적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경제적 과정이 담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포착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장소 상의 이동에는 운송뿐만이 아니라 생산 또한 들어간다. 양쪽 모두에 있어서 물체들의 공간적 이동이 똑같이 필수적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재화들이 유용성을 가지는 방식에 따라서 그 재화들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낮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이 유명한 “재화의 서열”을 빌어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재화를 서로 죽 늘어놓게 된다. 이 재화들을 다른 재화들과 결합함으로써 욕구를 직접 충족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간접적으로만 충족시키게 되는지에 따라서 말이다. 경제를 이루는 요소들의 이러한 유형의 운동은 실체적 의미에서 모든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생산이다.

소유권상의 운동은 보통 재화의 유통이라고 불리는 것과 재화의 관리라고 불리는 것 모두를 관장한다. 유통에서 소유권상의 이동을 낳는 것은 거래이며, 관리에서의 경우는 처분이다. 따라서 거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임자들 사이에서의 소유권상 운동이 벌어진다는 것이며,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 중 한 임자의 일방적 행동으로서 관습이나 법률의 힘으로 명확한 소유권상의 효과가 결부되어 있다. 이 “임자”라는 말은 여기에서 사적 개인이나 기업 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이나 관청 또한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두 가지 사이의 차이는 주로 그 내부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19세기에는 사적인 임자들은 보통 거래 활동과 연결되어 생각되었고, 공적인 임자는 주로 처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용어 선택에는 수많은 다른 정의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의 부분을 이루는 사회적인 여러 활동들은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활동들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는 제도는 그 담겨 있는 정도만큼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이루는 모든 구성물들은 경제적 요소들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주요하게 속하는 영역이 자연 환경이나, 기계 장비나, 인간적 장치나에 따라서 편의상 생태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의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 덕분에 우리의 준거틀에는 새롭고 또 오래된 일련의 개념들을 위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제적 과정을 여러 구성 요소들 사이의 기계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상호 작용으로 환원해 놓게 되면 경제적 과정의 전방위적 현실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적 과정에는 오로지 여러 생산 및 운송 과정 그리고 소유권상의 이동 과정의 가장 기초적 뼈대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

고 또 이 운동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기초로 삼지 않는다면, 전체 과정의 통일성과 안정성은 성립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 상호작용을 맺는 자연적 요소들과 인간적 요소들도 응집력 갖춘 단위를 전혀 형성하지 못할 것이며, 사회 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다거나 스스로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만한 구조적 실체 또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 과정은 이론적 도덕적 존엄성은 물론이고, 인간 생활에서 각별한 실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영역으로서 학문은 물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성질들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제도적 측면은 실로 초월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인간이 쟁기를 써서 땅을 경작하는 과정의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자동차 조립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 인간의 운동과 비인간적 요소들의 운동이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제도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은 노동과 자본, 동업 조합과 노동 조합, 속도의 늦춤과 당김, 리스크의 분산, 그 밖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회적 맥락의 여러 의미론적 단위들 등의 여러 용어들로 나타나게 된다. 한 예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선택하는 문제 또한 생산 과정에서 현대적 기술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의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지칭하는 문제이다. 다시 정책의 수준으로 돌아가 본다면, 저개발 국가들을 산업화한다는 문제에는 한편으로는 여러 다른 기술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술들을 제도화하는 여러 다른 방법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도 들어가 있다. 우리들이 제시하는 이러한 개념상의 구별은 기술과 여러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상호의존을 맺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에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제이다.

경제적 과정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곧 경제적 과정에 통일성과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화는 사회 안에 아주 구체적인 기능을 가진 모종의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되며, 사회 내에서 경제적 과정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동시키며, 경제적 과정의 역사에도 의미를 부여해주며, 관심의 중심을 여러 가치들과 동기들과 정책에 둘 수 있도록 해준다. 인간의 경제란 모종의 제도화된 과정이라는 우리 주장의 내용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통일성과 안정성, 구조와 기능, 역사와 정책 등의 용어로 똑똑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인간의 경제는 경제적 비경제적인 여러 제도들의 그물망 속에 묻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경제적 제도들을 포함시키는 일이다. 경제의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는 여러 통화제도들 혹은 노동자들의 노고를 빛나게 해줄 기계와 도구들의 사용가능성 여부 만큼이나 종교나 정부 또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그러므로 사회 안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연구한다는 것은 곧 상이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경제적 과정이 제도화되는 방식을 연구한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특별한 도구 상자가 필요하다.

2. 상호성, 재분배, 교환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경제들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작업은 먼저 그 경제가 통일성과 안정성을 획득하는 방식 즉 그 경제를 이루는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상호의존을 맺고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시키는가를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이는 아주 적은 숫자의 몇 가지 패턴들을 조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러한 패턴들은 여러 통합 형태들(forms of integr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통합 형태들은 경제의 상이한 수준들 상이한 부문들에서 병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 중 하나를 집어내어 그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들 전체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할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경제의 여러 부문들 수준들을 세분화한다면, 그러한 통합 형태들은 경제적 과정을 비교적 단순한 용어들로 묘사할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무한히 다종다기한 경제적 과정들에 일정한 질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러한 통합 형태의 주된 패턴들로서 상호성, 재분배, 교환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상호성이란 대칭적 위치에 있는 집단들 사이에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점들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운동들을 지칭한다. 재분배란 중심을 향해서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소유상의 운동들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환이란, 단일한 시장 체제 내에서 “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쌍방향 운동들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성이라는 형태에는 그 배경으로서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재분배는 한 집단 내부에 어느 정도의 중심성이 현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교환은 여러 가격 형성 시장들로 이루어진 단일의 체제가 있을 때에만 통합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상이한 통합 패턴들은 그것들을 떠받쳐 주는 구체적인 제도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시점에서 약간의 명확화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통합 형태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호성, 재분배, 교환 등의 용어들은 이따금씩 인간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지칭하는 데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본다면 이 통합 형태들이라는 것이 그저 각각의 형태로 개개인들의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모아놓은 것의

반영에 불과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개인들 사이에 호혜적 행동이 잦게 벌어지다보면 상호성의 통합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또 개인들간의 공유가 흔히 벌어지면 재분배적 통합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개개인들 사이에 물물 교환 행동이 잦게 벌어지게 되면 하나의 통합 형태로서의 교환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식의 오해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여러 통합 형태들이라는 것도 개인적 수준에서 각각의 형태에 조응하여 벌어지는 행태 등을 단순히 총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 바 있다. 이 통합 형태들이 실제로 통합의 효과를 낳는가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각각 대칭적 조직들, 중심점들, 시장 체제들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현존하는가라고.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이 개인들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조건 짓는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오해는 그러한 장치들이 단지 그와 동일한 개인적 행동 패턴들의 총합을 표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 문제의 개인적 차원의 여러 행태들을 단지 총합해 놓은 것 자체로는 그러한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점이다. 상호성에 입각한 개인들의 행태로 경제가 통합되는 것은 오로지 대칭적으로 조직된 구조들 예를 들어 친족 집단들 사이의 대칭적 체제와 같은 것이 주어져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그 어떤 친족 체제도 단지 개인적 수준에서 상호적인 행태가 벌어진다고 해서 단지 그 결과로 생겨나는 법은 결코 없다. 재분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분배를 행하는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조직 또 그러한 중심이 유효성에 대한 확인이 단지 개개인들 사이에서 공유의 행동이 자주 벌어진 결과로서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체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개인들 수준에서의 교환 행동들이 가격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오로지 그러한 교환 행동들이 가격 형성 시장이라는 단일의 체제 아래에서 벌어질 때에만 가능한 일이며, 이 단일의 가격 형성 시장 체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단지 교환의 행동들이 무작위로 벌어진다고 해서 창출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지지 패턴들이 개인 인간들의 행태의 범위를 넘어서는 곳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힘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주장은 단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만약 어떤 경우에 있어서 개인적 행태가 사회에 가져오는 결과가 구체적인 여러 제도적 조건들에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조건들 자체가 그 문제의 개인적 행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지 패턴이 그에 상응하는 종류의 개개인들의 행태가 착실히 쌓여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제도의 조직과 유효성 확인에 절대적 역할을 하는 여러 요소들을 낳게 되어 있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 행태인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 개개인들 사이라는 차원에서의 상호적 행태와 주어진 집단들 사이의 대칭적 관계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처음으로 보고된 것은 1915년

인류학자 리하르트 투른발트(Richard Thurnwald)가 뉴 기니아의 바나로(Bánaro)의 결혼 체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였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브로니슬라프 말리노프스키(Bronislaw Malinowski)는 투른발트를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적 행위는 기초적인 사회 조직의 대칭적 형식들에 규칙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이 밝혀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말리노프스키 스스로가 내놓은 쿨라(Kula) 교역에 대한 묘사와 트로브리안느 제도의 친족 체제에 대한 묘사는 이 점을 입증하였다. 필자 또한 이들의 선도적 해안을 따라서 대칭성을 단지 몇 개의 지지 패턴들 중 하나라고 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상호성이라는 통합 패턴 외에도 재분배와 교환이라는 통합 패턴을 추가하였다. 또 마찬가지로, 필자는 제도적 지지 구조의 형태로서 대칭성 이외에도 중심성과 시장이라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제시한 통합 및 지지의 구조 패턴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는 명확한 제도적 전제 조건이 없을 경우 경제 영역에서의 개인 차원의 행태가 기대했던 대로 사회 차원에서의 결과를 낳지 못하는 일이 그렇게 잦은지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상호적 행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언가 중요성을 가진 경제 제도를 낳는 일은 오로지 대칭적으로 조직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개인들이 서로 간에 공유의 행동을 한다고 해도 오로지 분배의 중심점들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재분배 경제를 낳을 수 있다. 또 개인들이 교환 활동을 벌인다고 해도 그것이 가격의 등락을 낳아서 경제를 통합하는 일은 오로지 단일의 가격 형성 시장 체제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벌어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물물교환과 같은 행동들도 효과적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경향까지 띠게 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위적인 형태로나마 물물교환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마치 이를 불경스런 행위 심지어 반역 행위쯤으로 여기는 거친 감정적 반동이 나타나게 된다. 교역 행위란 결코 감정적인 차원과 무관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사회적 승인을 받은 경로를 벗어나서 행해질 경우에는 사람들의 여론이 이를 용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우리가 제시한 여러 통합 형태들로 되돌아가자.

스스로의 여러 경제적 관계를 상호성의 기반 위에 조직하고자 의도적으로 나서는 집단이 있다면, 그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스스로를 여러 하위 집단들로 쪼갤 것이며, 이 하위 집단들에 상응하는 구성원들은 서로서로를 상호성의 관계에 있는 이들로 인식할 것이다. A집단의 성원들은 B 집단에 있는 자신의 반대쪽 상대방과 상호성의 관계를 확고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하지만 대칭성이 꼭 쌍대성(duality)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셋, 넷, 혹은 그 이상의 집단들도 둘 이상의 축을 기점으로 하여 대칭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또 이 집단들의 성원들도 반드시 서로서로와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들과 비슷한 관계에 있는 제 3 집단의 해당 성원들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트로브리안느 제도에서는 남자가 자신의 자매의 가족을

책임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매의 남편이 그 자신의 가족의 부양을 돕는 것은 아니며, 그가 결혼한 경우 그의 아내의 형제가 그의 가족 부양을 돕게 되어 있다. 즉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제 3 가족의 한 성원이 그를 돕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종류의 공동체(koinōnia)에는 그 성원들 간에 그 공동체에 해당하는 모종의 선의(善意: philia)가 존재하여 이것이 상호성(anitpeponthos)으로서 스스로를 표출하게 되어 있다고 가르친 바 있다. 이는 가족, 부족, 도시 국가처럼 좀 더 영구적인 공동체들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런 공동체들 내부에 포함되거나 하위에 딸린 영구성이 덜한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바라는 것이다. 우리의 용어로 표현해보자면, 이 말은 곧 더 큰 규모의 공동체들에서는 복수의 다양한 대칭성들이 발전되며, 하위의 공동체들은 이러한 다양한 대칭성들을 준거점으로 삼아서 상호적인 행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체의 성원들이 서로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될수록 이들 사이에 시간 공간 등등으로 제한된 구체적 관계들 속에서 상호성과 같은 태도가 발전될 경향이 더욱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친족, 이웃, 혹은 토템 집단 등은 좀 더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집단들에 속한다. 이런 공동체들의 테두리 안에는 자발적 준자발적 성격의 군사적, 직업적, 종교적, 사회적 성격의 결사체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결사체들은 최소한 일시적으로 혹은 주어진 장소 혹은 전형적 상황에서는 대칭적 집단들이 형성될만한 여러 상황을 창출해내게 되며, 그 대칭적 집단들의 성원들은 그 속에서 모종의 쌍방적인 행동을 실행하게 된다.

하나의 통합 형태로서의 재분배는 재분배뿐만 아니라 교환 또한 그 하위의 방법으로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그 힘을 크게 배가시키게 된다. 재분배는 여러 사물들을 “순번대로” 취함으로써 달성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명확한 재분배 규칙들에 따라 노동의 부담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도 달성된다. 마찬가지로 상호성 또한 어떨 때에는 교환을 통해서 달성되기도 한다. 상호성의 한쪽 상대방이 어쩌다 몇 몇 생필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그 쪽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등가 관계로 교환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여러 고대 오리엔트 사회에서 기초적인 제도이기도 했다. 여러 비시장 경제에서 이러한 두 가지 통합 형태들—상호성과 재분배—은 현실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집단 내에서 재분배 형태가 달성되는 정도는 재화를 분배하는 작업이 어느 만큼이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또 관습, 법률, 혹은 특별 중앙 결정에 의해 벌어지느냐에 비례한다. 어떨 때는 창고가 등장하는 재분배로서 물자가 물리적으로 수집되는 것과 같은 뜻이 되기도 하며, 또 어떨 때에는 그 “수집”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상의 것 즉 재화의 물리적 위치를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권리상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재분배가 생겨나는 이유는 다양하며, 또 원시적인 수렵 부족에서부터 고대 이집트, 수메르, 바

벨로니아, 페루 등의 광대한 저장 체제까지 모든 수준의 문명에서 나타난다. 큰 나라들에서는 토양과 기후의 차이 때문에 재분배가 필수적인 것이 된다. 또 다른 경우에는 농작물의 수확과 소비의 경우처럼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나기도 한다. 수렵 행위의 경우에는 “노동 분업”이 없이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으므로 재분배 이외에 그 어떤 분배 방식도 수렵 집단 전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력을 재분배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를 부여받는 경우 즉 현대 복지 국가의 경우처럼 사회적 이상이 요구하는 목적으로서 가치를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원리는 항상 동일하다. 즉 중심으로 모았다가 중심으로부터 분배한다는 것이다. 재분배는 또 사회보다 더 작은 집단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경제 전체가 통합된 방식과 무관하게 가정 경제나 장원과 같은 곳에서 재분배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경우로는 중앙 아프리카인들의 크랄(kraal), 히브루인들의 가부장적 가정 경제, 아리스토텔레스 시절 그리스인들의 토지 재산, 로마의 파밀리아(familia), 중세의 장원, 그리고 곡물이 보편적인 시장의 상품이 되기 이전의 전형적인 대규모 농민 가정 경제 등이 있다. 하지만 가정 경제가 현실에 가능해지고 또 상당히 보편적이 되는 것은 오로지 농업 사회라는 비교적 진보된 형태에서만 가능하다. 그 이전에는 “소규모 가족”이라고 하는 광범위하게 확산된 형태가 약간의 음식 조리 활동 이외에는 경제적 제도로써 제도화되지 않는다. 방목, 토지, 가축 등의 활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족보다 더 큰 규모에서 재분배나 상호성의 방법이 지배적이다.

재분배 또한 국가 자체로부터 시작하여 일시적 성격의 사회 단위들에 이르기까지 수준과 영속성의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집단들을 통합할 능력이 있다. 여기에서도 상호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포괄하는 단위가 더 긴밀하게 짜여져 있게 되면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하부 구획 또한 더욱 다양하게 될 여지가 생긴다. 플라톤은 국가를 이루는 시민들의 숫자가 5천4십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 숫자는 1부터 10까지의 정수로 나누는 것을 포함하여 59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조세의 사정 평가, 영리적 거래를 위한 집단 형성, 병역 및 기타 의무를 “돌아가면서” 수행하는 것 등 실로 가장 다양한 목적으로 하부 구획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교환은 하나의 통합 형태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격 형성 시장들로 이루어진 단일의 시스템으로 지지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교환을 구별해야 한다.(하략)

<이하의 글은 강의 전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6

현재의 경제위기와 불평등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폴라니와 사회적 경제

- 일시: 2015년 8월 20일(목) 19:30~21:3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4층)

주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교육기간: 2015. 7. 9(목)~8. 20(목)

불평등과 소득주도성장

• 다원적 거시모델 •

정태인

KPIA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Karl Polanyi Institute Asia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장 비슷한 사상가는 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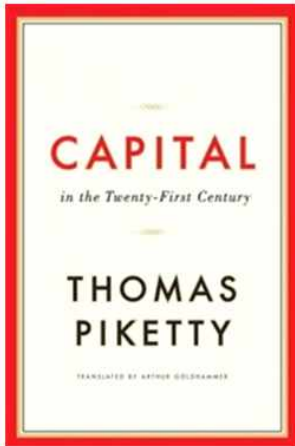


거시정책의 다원성

- “경제위기는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는 종종 사회정치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 체제는 기후온난화, 생물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에너지-식량 위기등 인류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다원적 경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서울선언”)
- “의심할 나위 없이 노동, 토지 그리고 화폐는 시장경제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악마의 맷돌로부터 인간과 자연이라는 실체 그리고 기업조직을 보호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회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조잡한 허구적 체제의 결과를 지탱할 수 없다.” (“거대한 전환”, pp76-77)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21세기의 유령?



01 주류 경제학은 분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보울리의 법칙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

한계 생산력설

02 밀물이 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 _케네디

하향 평준화

능력주의 meritocracy

피케티의 무기, 장기통계

- ✓ 200년 이상의 일관된 장기 통계의 작성
- ✓ 조세 자료 vs 센서스 자료
- ✓ 자산분배와 소득분배

제1법칙 자본 몫의 크기를 나타내는 회계적 항등식

$$\alpha = r\beta$$

β : 어떤 한 시점의 한 나라의 순자산 (피케티의 “자본”)을
그 해의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

* β : W/Y , W 는 민간순자산, Y 는 국민소득

피케티의 무기, 장기통계

제2법칙 해룻-도마-솔로우의 “균형성장조건”

$$\beta = 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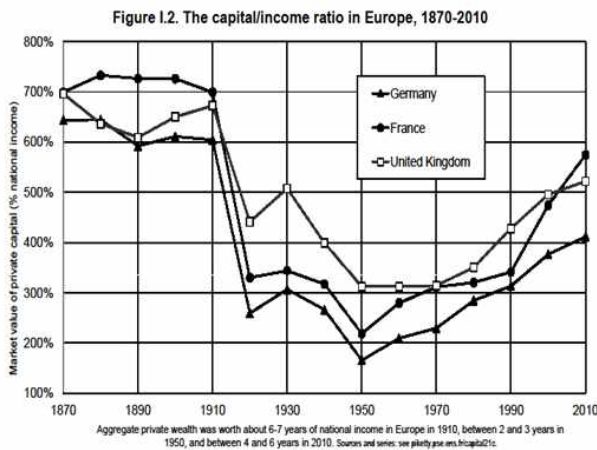
$\beta = s/g$, s 는 저축률, g 는 경제성장률

“우리는 이러한 자본 몫과 생산함수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설명을 위한 것, 보여주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Piketty & Zucman, 2014, p34)



기능별 분배 자본 몫(α) vs. 노동 몫($1-\alp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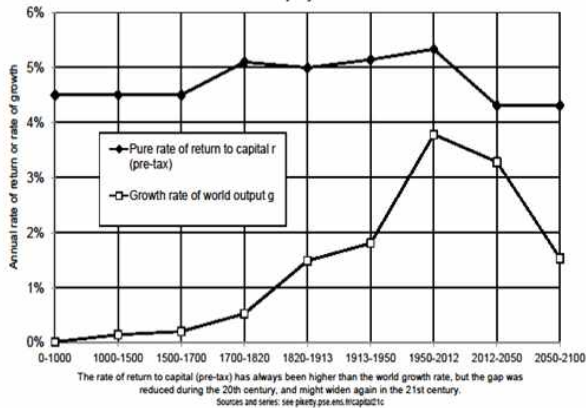
1945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30년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기간



- “자본주의의 황금기”
프랑스 “영광의 30년”,
독일 “라인의 기적”.
- “보울리의 법칙”이나,
“역U자 가설”은 모두
이 짧은 기간에 해당.
- 1910년대부터 두 번의 세계전쟁,
대공황으로 인한 재분배 정책,
노조강화 등



Figure 10.9. Rate of return vs. growth rate at the world level, from Antiquity until 2100



$$\alpha = r\beta(=)r^*s/g$$

- $r > g$ 라면 자산가들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
- $g = 1인당GDP성장률 + 인구증가율$ 를 다 하락할 것

세습자본주의

■ 세습자본주의

- 21세기는 19세기말의 “벨에이포크 시대”, “도금시대”를 방불
- “라스티낙의 딜레마”
- 플루토크라시 대 메리토크라시

■ 글로벌 자본세와 누진소득세가 대안

-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의 관건

cf. 전쟁, 혁명 등 대혼란을 겪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의 피케티 비율

기능별 분배



■ “우리나라 국민순자산(국부)는 1경 630.6조원으로 국내총생산 (1377.5조원)의 7.7배”

■ 한국의 β

•분모

국민순소득 = 국민총생산-감가상각
+ 해외순수취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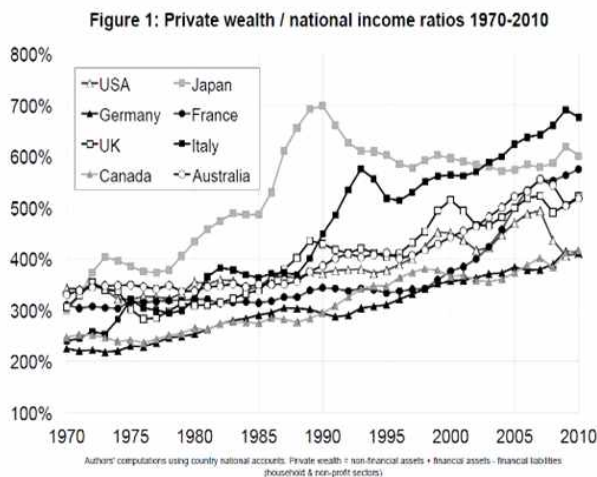
•분자

민간순자산 = 국민순자산-정부순자산

KPIA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2014.5.14)

한국의 피케티 비율

기능별 분배



■ 2000년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최고치 경신 중

KPIA

한국의 불평등

계층별 분배_자산

<표 1-3>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단위 : %, %p)

구 분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 점유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2년	0.617	-0.4	0.7	1.8	3.0	4.4	6.2	8.6	11.8	17.7	46.2
2013년	0.607	-0.4	0.8	1.9	3.1	4.6	6.4	8.8	12.1	17.8	45.0
전년차	-0.010	-0.1	0.0	0.1	0.1	0.2	0.2	0.2	0.3	0.1	-1.2

■ 상위 10%가 45% 차지,
최근 약간 하락 추세

구 분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 점유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3년	0.605	-0.4	0.8	1.9	3.2	4.6	6.5	8.9	12.2	17.7	44.7
2014년	0.596	-0.2	0.8	2.0	3.3	4.8	6.6	8.9	12.3	17.8	43.7
전년차	-0.009	0.2	0.1	0.1	0.1	0.2	0.2	0.1	0.1	0.0	-1.0

■ 센서스 조사



2013,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은,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각년도

한국의 불평등

계층별 분배_소득



■ 한국의 최상위 1%의
소득 비중 - 국제비교

- 전전의 높은 수준, 전후의 급락, 1980년대 이후 급상승하는 영미형과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일본형으로 분화.
- 한국은 크게 보아 U자형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중엽 이후 영미형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김낙년, 2014, 한국의 소득불평등, 1933-2012:소득세자료에 의한 접근

한국의 불평등

1960년 상황

< 1960년대 초 한국의 토니지수 계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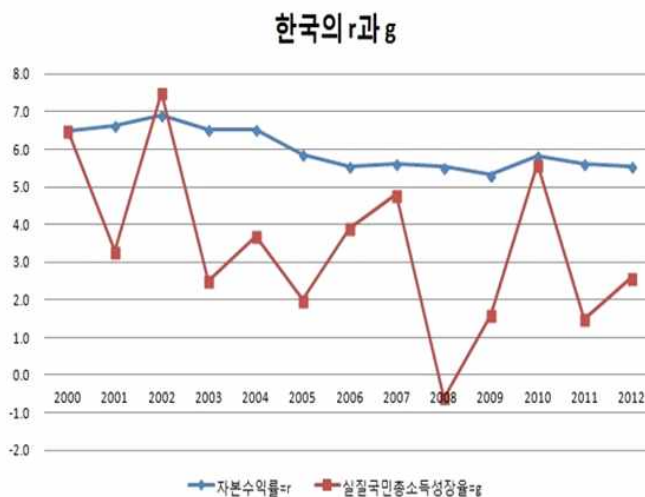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한국	순위	표본수
경제성장률(%) 1960-2000	1.502	1.52	5.78	-1.53	5.78	1	64
초기조건							
gdp per capita(달러) 1960	2814	2679	12413	422	1570	40	64
초등학교취학률(%) 1960	66.65	32.01	118	5	94	30	96
1인당 교육연수(년) 1960	2.98	2.31	9.56	0.17	3.23	19	53
토지지니계수 1960년대초	68.7	15.47	92.3	33.85	33.85	42	42
중위소득층비율 1960	0.33	0.05	0.41	0.22	0.41	1	47
아일랜드모리스개발지수 1960년대초	-0.02	0.98	1.91	-1.86	0.85	12	64
전근대발전지표							
신석기혁명(년) B.P. (P=2000)	3860	2351	10500	362	4500	26	103
기술수준 AD 1500	0.34	0.26	0.88	0	0.85	2	76
log(인구밀도) AD 1500	0.73	1.61	4.61	-3.83	3.70	3	90
국가역사지수 *1/100	3.20	2.05	8.18	1.88	8.18	1	94
도시화율(%) AD 1500	2.62	4.09	21	0	-	-	65
식민통치지표							
이주자비율(%) 1900	11.71	23.22	100	0	1.8	43	101
통치기간(년)	157.68	127.31	513	12	35	101	107
독립년도(년)	1930	57	1776	1997	1945	34	107

- 1960년
한국의 자산지니계수는
구 식민지 국가 중
가장 낮고
중위소득층 비율은
가장 높았음

KPIA 우대형, 2014, 한국 경제성장의 역사적 기원, 경제사학회 발표문, p.4

한국의 불평등

한국의 피케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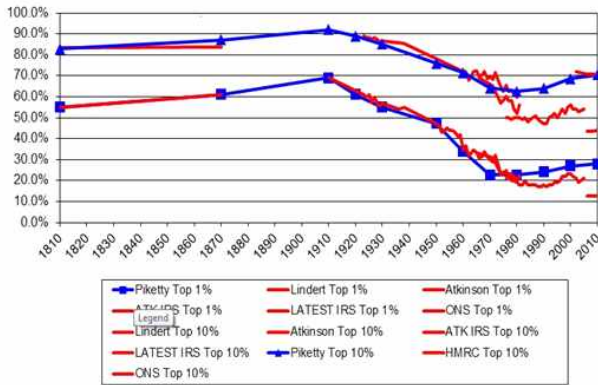
- $r > g$
▶ 분배악화
- 한국은 상당기간 평등했던 나라-
농지개혁과 한국전쟁,
1960~1980년대의 고도성장
-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심화
- 한국은 아직도 성장률이 높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추격단계가 끝나고
인구증가율은 급격히 떨어짐
- $r-g$ 가 점점 더 확대될 것

KPIA

쟁점

파이낸셜 타임즈

Wealth inequality in Britain 1810 to 2010



■ 영국 상위 10%의 44%(FT)
vs 71%(Piketty)?

- 센서스자료와 세금자료의 차이
- FT의 굴욕
- 한국도 마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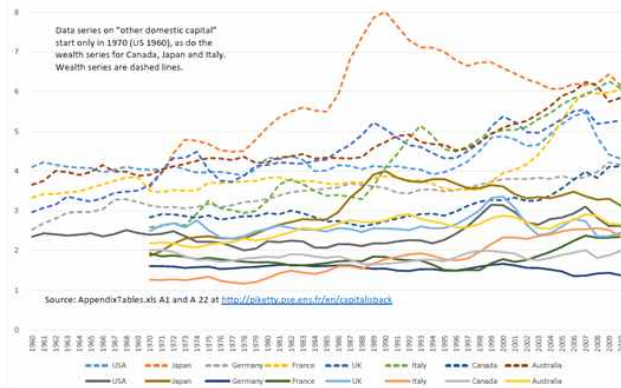


Gils, C., "Data problems with Capital in the 21st Century", FT, 2014.5.23

쟁점

피케티의 한계

<피케티의 자산/소득비율과 기타자본/소득 비율의 비교>



- β 의 증가에 따라 α 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신고전파 생산함수와 대체탄력성 개념을 도입
 - 대체탄력성이 1.3에서 1.6 사이라고 주장-따라서 r 이 떨어져도
그 이상으로 K 가 증가
- 하지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이 K 의 2/3 차지-대체탄력성 개념 적용 곤란



Semieniuk, 2014, p6

참고

자본노동의 대체탄력성_CES 생산함수의 경우

$$\frac{d \ln(k/n)}{d \ln(MPL/MPK)}$$

$$y = A \left[\alpha k^{\frac{1-\phi}{\phi}} + (1-\alpha)n^{\frac{1-\phi}{\phi}} \right]^{\frac{\phi}{\phi-1}}, \quad 0 < \alpha < 1, \quad \phi > 0, \quad A > 0.$$

$$MPK = \alpha A \Delta^{\frac{1}{1-\phi}} k^{\frac{1}{\phi}} \quad \text{and} \quad MPL = (1-\alpha) A \Delta^{\frac{1}{1-\phi}} n^{\frac{1}{\phi}},$$

$$\frac{MPL}{MPK} = \frac{1-\alpha}{\alpha} \left(\frac{k}{n} \right)^{\frac{1}{\phi}}.$$

$$\frac{d \ln(k/n)}{d \ln(MPL/MPK)} = \phi.$$

- CES 생산함수의 양변을 로그 취하고 l'Hôpital's rule을 적용하면,
▶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alpha = a \cdot \beta^{\frac{\sigma-1}{\sigma}}$$



참고

이론적 문제

- 피케티는 현실의 장기 통계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설 비판
 - 역사적 사실로 이론을 비판하는 스마트한 방법 채택, 하지만 이론의 부재
- 피케티의 제2법칙은 집계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cn)에 기초한 신고전학파의 “균형성장조건”
 - 과연 이 방법론은 피케티가 집대성한 통계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수단인가?
 - 피케티는 대체탄력성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노력 - Rognile, 2014의 비판 초래
- 자본논쟁과 집계생산함수의 문제
 - 피케티가 맑스의 이윤율 저하 법칙과 자본논쟁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결과



■ revisiting "Cambridge Capital Controversy"

■ neoclassical parable :

- existence of well-behaved production fcn & perfect competition
-> marginal productivity distribution

■ aggregation problem

(two concepts of capital, capital malleability, technology switching...)

- 1) only CRS, 2) even under CRS, the conditions for aggregation are very stringent, 3) even approximation require 1) & 2) (Fisher, 2005, p490)
so there cannot be a well-behaved production fcn

■ estimation problem (Shaikh, Simon, Felipe&McCombie...)

- Piketty's first law is a national account identity $Y = rK + wL$, and it can be easily rewritten through simple algebraic transformation into $Y = A \cdot F(K, L)$, that is precisely CD or CES fcn
(CD's $\alpha = rK/Y$, that is capital share and $1 - \alpha =$ labor share)

"the appearance of a well-behaved aggregate production fcn tell one nothing at all about whether there really is one. Such an appearance stems from the accounting identity that relates the value of outputs to the value of inputs - nothing more" (Fisher, 490)



정태인, 2014, A Model of Pluralistic Economy based on Polanyi's Ideas, p.22

- Pasinetti Theorem (Cambridge equation) : $g = s \cdot c_r$ can explain the FCC ($r > g$) because of $0 < s \cdot c_r < 1$
- However, $g = s \cdot c_r$ is a result of steady-state growth mechanism where profit share or wage share are also under a steady-state.

이건우 2014, P.K. & Piketty, p.19

■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 특히 파시네티의 캠브리지 방정식으로

피케티의 제2법칙을 대체하면 $r > g$ 를 설명하는 데 더 유용

■ 집계생산함수 없이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포스트케인지언 "소득주도성장론"과 결합해서 정책 대안도 풍부하게 할 수 있음

■ 피케티의 해법? "저도 하나의 자본재와 재화만 있고 상대가격을 고려하지 않는 표준적 모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모델은 기존의 것이 아니라 상대가격(특히 부동산의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차원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이근편, 2014, pp.48-49)



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PKE)과 소득주도성장론

PKE의 특징

■ 가정

- 1) 전체론(holism)/유기론 : 미시-거시의 역설
- 2) 근본적 불확실성에 기초한 기대
- 3) 독과점경향과 마크업 가격 설정, 가동률의 중요성
- 4) 생산의 화폐이론 : 화폐는 장기에도 비중립적
- 5) 장단기 모두 유효수요원칙이 지배
- 6) 역사적이고 비가역적인 시간 : 경로의존성
- 7) 분배 이슈와 분배갈등이 경제성과에 중요한 영향

■ 모델

- 1) 내생적 화폐/신용시장
: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상업은행은 시장이자율 설정
- 2)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을 연결하는 투자수요함수
: 투자와 승수효과가 총수요산출과 고용을 결정
- 3) 노동수요는 상품시장에 의존
: 노동시장은 명목임금률을 설정해서 가격수준에 영향



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PKE)과 소득주도성장론

NCM과 PKE의 정책적 차이

	NCM	PKE
금융정책	인플레이션 타게팅, 단기에 실업에 영향, 그러나 장기에는 오로지 인플레이션에만 영향	저이자율 타게팅으로 분배에 영향. 통화, 금융, 실물부문의 안정화
재정정책	가격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보완. 경기순환 전반에 걸친 균형재정	장단기에 걸친 실질적 안정화, 재정수지 목표 없음, 가처분소득의 재분배
노동시장 정책과 임금/소득정책	장기에 NAIRU 결정(노동시장 제도), 단기에 조정의 속도 결정. 명목 실질 임금의 유연화에 초점	가격수준과 인플레이션, 분배에 영향. 경직적 명목임금과 명목단위노동비용의 안정적 성장
조정	시장 청산. 오직 단기에만 조정 가능	시장청산은 존재하지 않음. 장단기에 모두 조정 정책 필요



소득주도성장론, 이상헌, 2014

$$\gamma = \frac{W}{Y} \cdot \frac{E}{L} = \frac{W}{L} \cdot \frac{E}{Y} = \omega \cdot \frac{1}{p} = \frac{\omega}{p}$$

- γ 는 노동소득분배율, W 는 임금, Y 는 국민소득, L 은 노동자수, E 는 전체고용, w 는 평균임금(= W/L), p 는 1인당부가가치생산성(= Y/E)

$$\Delta\gamma = \Delta\omega - \Delta p$$

$$Y = C(Y, \omega) + I(Y, \omega, \phi i) + NX(Y, P, \phi n x) + G(Y, \phi g)$$

$$\frac{\partial Y}{\partial \omega} = \underbrace{\frac{\partial C}{\partial \omega}}_{+} + \underbrace{\left(\frac{\partial I}{\partial \omega} + \frac{\partial NX}{\partial \omega} \right)}_{-}$$

- ▶ 평균임금의 증가가 국민소득을 늘릴 것(소득주도)인가, 줄일 것(이윤주도)인가?

소득주도성장, 팰리의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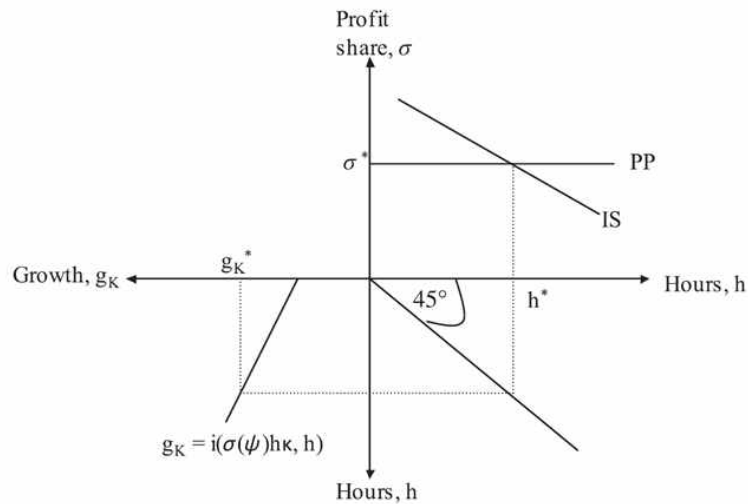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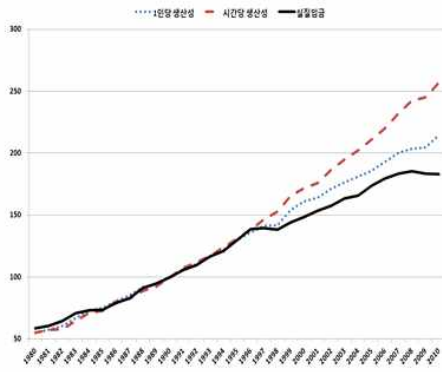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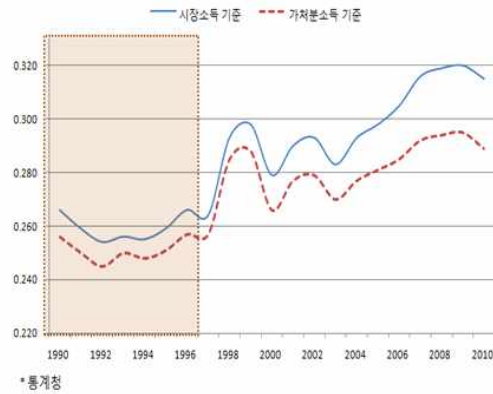


Fig. 2. Determination of short-run equilibrium in the wage-led case.

소득주도성장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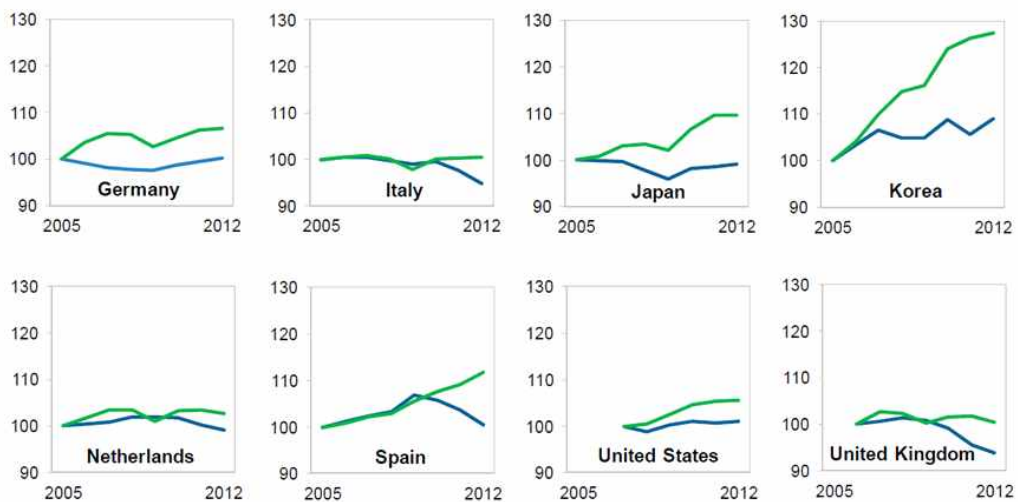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



소득주도성장

■ Labor Productivity ■ Real Average Wage Index

Selected Advanced Economies



노동생산성과 실질평균임금 지수 추이(2005~2012)



IMF, 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p14

소득주도성장, 오나란과 갈라니스의 실증

	C/Y (A)	I/Y (B)	NX/Y (C)	(C+I+NX)/Y (D=A+B+C)	수요 체제
미국	-0.426	0.000	0.037	-0.388	임금 주도
터키	-0.491	0.000	0.283	-0.208	
이탈리아	-0.356	0.130	0.126	-0.100	
한국	-0.422	0.000	0.359	-0.063	
독일	-0.501	0.376	0.096	-0.029	
영국	-0.303	0.120	0.158	-0.025	
프랑스	-0.305	0.088	0.196	-0.021	
일본	-0.353	0.284	0.055	-0.014	이윤 주도
인도	-0.291	0.000	0.310	0.018	
아르헨티나	-0.153	0.015	0.192	0.054	
멕시코	-0.438	0.153	0.381	0.096	
캐나다	-0.326	0.182	0.266	0.122	
호주	-0.256	0.174	0.272	0.190	
남아공	-0.145	0.129	0.506	0.490	
중국	-0.412	0.000	1.986	1.574	

■ 한국은 소득주도성장국가

- α (자본소득)가 1% 증가했을 때 GDP의 변화는?
한국은 -0.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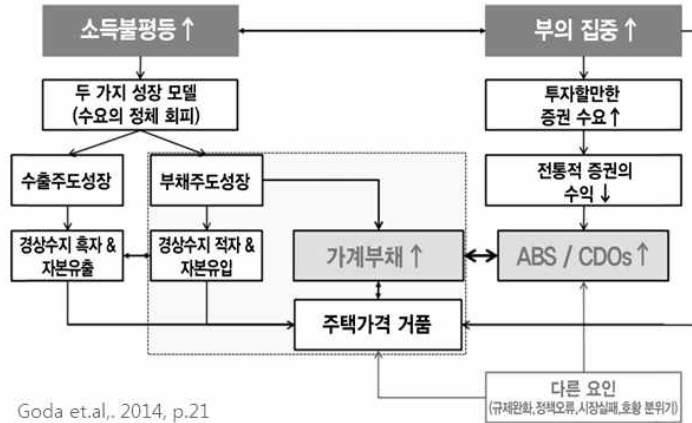
소득주도성장, 홍장표의 실증

구분	계산식	1981~1997		1999~2012	
		v_1 모형	v_2 모형	v_1 모형	v_2 모형
산출량 효과	$\frac{\partial \hat{y}^*}{\partial \hat{w}} = \frac{(1 - \beta_2)D}{1 + \beta_1 D}$	-0.04	0.39	0.68	1.09
노동생산성 효과	$\frac{\partial \hat{\lambda}^*}{\partial \hat{w}} = \frac{\beta_2 + \beta_1 D}{1 + \beta_1 D}$	0.34	0.40	0.45	0.50
고용 효과	$\frac{\partial \hat{l}^*}{\partial \hat{w}} = \frac{\partial \hat{y}^*}{\partial \hat{w}} - \frac{\partial \hat{\lambda}^*}{\partial \hat{w}}$	-0.37	-0.01	0.22	0.58

■ 노동소득(1- α)이 1% 증가했을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 노동소득 증가가 기업의 투자 촉진
- 노동소득 증가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음
- 노동소득 증가가 고용을 증가시킴

피케티와 소득주도성장론에 의한 세계경제상황 이해



- r이 4~5%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은 새로운 투자처를 개발하는 자산가의 능력 때문. 예컨대 19~20세기에는 식민지 경영, 20세기 후반에는 금융화에 의한 중산층 수탈

cf. 최경환의 정책은 “부채주도성장”



피케티와 PKE의 정책대안(1)

■ 소득정책(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적경제정책)

- 1) 노동의 협상력 강화 : 노동시장의 재규제, 노조강화를 위한 입법, 집단협상의 확대, 한국에서는 부문별/지역별 협상 구조의 창출
- 2) 최저임금의 인상 : 지역별 공공계약(public contract)을 통한 생활임금 달성
- 3) 최고임금/최저임금 비율의 상한선 설정 : 노동 내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첫 단계
- 4) 한국의 경우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합의기구 창출 필요 (국민의 정부 정책의 반성 포함)
- 5) 사회적 경제 확산에 의한 고용과 소득의 창출
- 6)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피케티와 PKE의 정책대안(2)

■ 재정정책1 - 재분배정책

- 1) 누진세제의 강화, 특히 자산세의 강화 cf. 불평등인덱스 세제
- 2) 완전고용달성을 위한 거시정책의 사용과 복지국가의 건설
- 3) 생태세 및 광고세 부과
- 4) 자산세와 상속세 강화에 의한 노인 복지의 획기적 강화
→ 노령층의 자산보유 인센티브 축소

■ 재정정책2 - 국가주도 인프라 투자의 강화

- 1) 생태인프라의 구축 - 스마트 그리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체제 구축, 에너지 제로 건축, 저탄소 교통, AIIB를 활용한 동아시아 규모의 생태투자 등
- 2)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 특히 공교육의 강화



피케티와 PKE의 정책대안(3)

■ 금융정책

- 1) 금융화를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 2) 동아시아 국가의 합의에 의한 토빈세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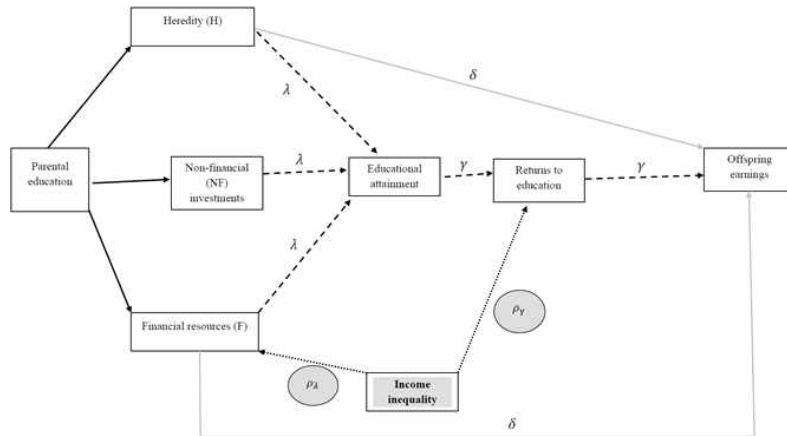
■ 경제민주화정책

- 1) 제조업 내 임금격차의 확대는 대기업의 하청단가 인하가 주 원인 일 것 - 하청기업의 공동 협상권 부여만으로도 임금격차 확대는 물론 자본-노동간 소득분배 악화도 시정 가능
- 2) 자영업자의 사회적 경제 기업 네트워크화와 사회보험료 지원



■ 소득불평등과 사회이동성의 메커니즘

Figure 2. Income inequality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s)advantage



Notes: H indicates a hereditary pathway. NF indicates a non-financial pathway. F indicates a financial pathway. λ is the estimated link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offspring educational attainment. γ is the estimated link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ρ_A refers to the correlation with income inequality.

Jerrim & McMillan, 2014, p.33



Table 3. Decomposi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association into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offspring labour market earnings

	Total (β)		Through Ed ($\gamma^*\%$)		Not through Ed (δ)	
	β	SE	$\gamma^*\%$	SE	δ	SE
Slovak Republic	0.55	0.10	0.32	0.06	0.23	0.12
Japan	0.37	0.06	0.17	0.02	0.19	0.06
England and Northern Ireland	0.41	0.07	0.23	0.03	0.18	0.07
Korea	0.33	0.05	0.20	0.02	0.14	0.05
Poland	0.47	0.10	0.34	0.04	0.14	0.10
USA	0.56	0.09	0.43	0.04	0.13	0.08
Estonia	0.25	0.06	0.13	0.02	0.12	0.06
France	0.33	0.04	0.23	0.02	0.10	0.04
Russia	0.21	0.21	0.11	0.12	0.10	0.12
Canada	0.22	0.04	0.15	0.02	0.07	0.04
Australia	0.25	0.05	0.18	0.02	0.07	0.05
Italy	0.28	0.18	0.22	0.07	0.06	0.18
Denmark	0.21	0.06	0.16	0.02	0.06	0.06
Spain	0.30	0.13	0.25	0.03	0.05	0.14
Ireland	0.33	0.07	0.29	0.04	0.04	0.06
Sweden	0.14	0.04	0.10	0.01	0.04	0.04
Austria	0.20	0.07	0.18	0.03	0.02	0.08
Finland	0.17	0.05	0.16	0.02	0.02	0.05
Czech Republic	0.26	0.06	0.26	0.04	0.01	0.08
Germany	0.24	0.08	0.26	0.04	-0.02	0.07
Netherlands	0.14	0.04	0.16	0.03	-0.02	0.05
Cyprus	0.21	0.07	0.25	0.03	-0.04	0.06
Belgium	0.14	0.04	0.18	0.02	-0.05	0.05
Norway	0.12	0.05	0.18	0.02	-0.05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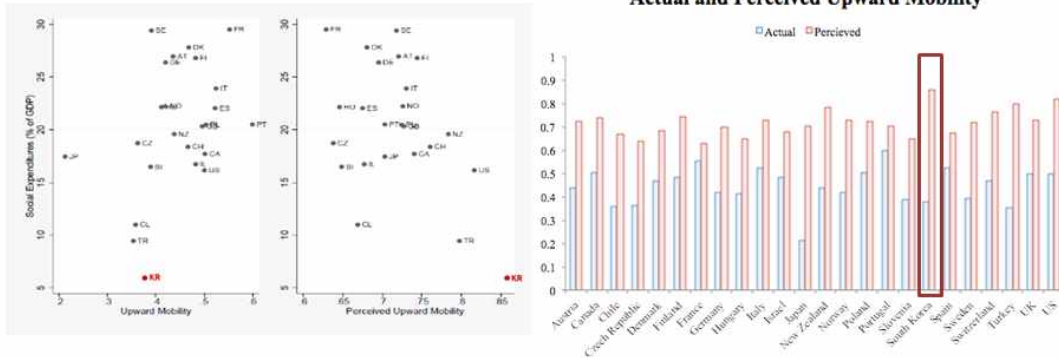
Jerrim & McMillan, 2014, p.29



주요연구과제

민주주의와 불평등

■ 실제 상향이동성과 인지상향이동성



< 재분배와 상향이동성 >¹⁾

< 실제 사회이동성과 느끼는 사회이동성의 차이 >



1) Engelhardt, C.& Wagener, A., 2014, Biased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SSRN, p12

주요연구과제

민주주의와 불평등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사회통계)

- 부정적 응답 : 1994년 5.1%, 1999년 11.2%, 2003년 19.8%, 2006년 29%, 2009년 30.8%, 2011년 42.9%, 2013년 43.7%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이나 연줄보다 노력이다”(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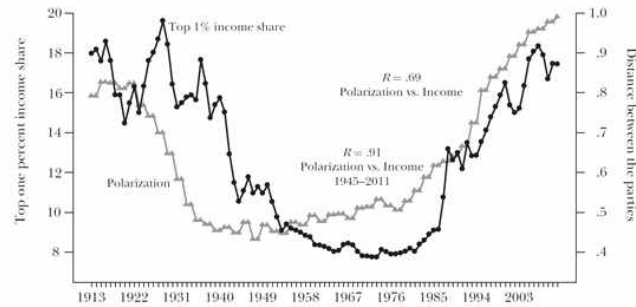
- 긍정적 응답 : 60대 75.5%, 20대 51.2%

⇒ 한국에서도 인지상향이동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김희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Top 1 Percent Income Share and Polarization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13-2008



Source: Authors calculations using the polarization data described under Figure 1, and data on income from Piketty and Saez (2013).

- 1) 소득불평등과 정치 양극화의 상관관계
- 2) 소득불평등에 따른 정치의 포획
- 3) 장기교착상태와 현상유지



Bonica et al., 2013, Why Hasn't Democracy Slowed Rising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27, N3, p.108

■ “주택소유 복지체제”와의 구조적 관계

- 지난 50년간 한국 가계의 미래 투자는 교육과 부동산에 집중
= 발전국가+주택소유복지체제
- 장기침체기에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체제?
- 주택과 교육의 가격상승과 양극화→청년들의 절망

⇒ 주택, 교육, 건강의 “탈시장화” 또는 재착근(reembeddedness)가 답?



협동조합은 공동선에 봉사하는 경제모델

- 1) 협동조합은 “연대와 사회관계에 바탕을 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올리고 발전시키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새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2) 가톨릭 협동조합등과 본당들, 병원들이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지원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 3) 협동조합은 모든 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이 부를 생산하고 나중에 국가를 통해 재분배하는 자유주의와 다르다.
- 4) 협동조합은 가정을 지원하고 돕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은 이미 여성이 자신의 잠재적 소명과 재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아원에서 재택돌봄까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 5) 진정한 협동조합에서는 자본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사람이 자본을 지배하며 이런 협동조합이 돈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써서 생명에 봉사할 수 있다.

2015.2.28. 이탈리아협동조합회의에서



협동조합은 공동선에 봉사하는 경제모델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

피케티, p7

“(21세기의 거대한) 불평등은 (위의) 선언의 멋진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공익’과도 관련이 없다.”

피케티, p691



“사유재산권은 재화가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공동 사용권에 예속된다”

가톨릭 사회교리

“사유재산은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한에서 정당하다”

프란치스코 교황

“공동선을 향한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 필요”

프란치스코 교황



협동조합은 공동선에 봉사하는 경제모델



불평등은 시장과 금융투기의 절대적 자율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의 결과다. 결국 공동선을 달성해야 하는 국가의 권리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리하여 새로운 독재가 탄생했다.

...

이러한 정책이 때로 WTO에서 협상을 벌이는 무역규칙이나 양자간 또는 지역 FTA에 각인되는 더 나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

지금은 이들 지역협정을 확대해서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즉 미국과 EU의 FTA)나 TPP와 같은 초지역 협정으로 만드는 명백한 경향이 생겨났다.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적 경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 한국의 불평등

40대 중반의 젊은 프랑스 경제학자가 창조한 “21세기 자본”이라는 유령이 작년에 한국에도 나타났다. 피케티에 대한 비판과 찬사는 “찾잔 속의 태풍”이었는지 모르지만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령처럼 한국 사회를 어슬렁거린다. 피케티의 오랜 학문적 동지, 그러나 70대의 경제학자 애트킨슨의 책, “불평등, 무엇을 할 것인가”도 영어판과 한국판이 동시에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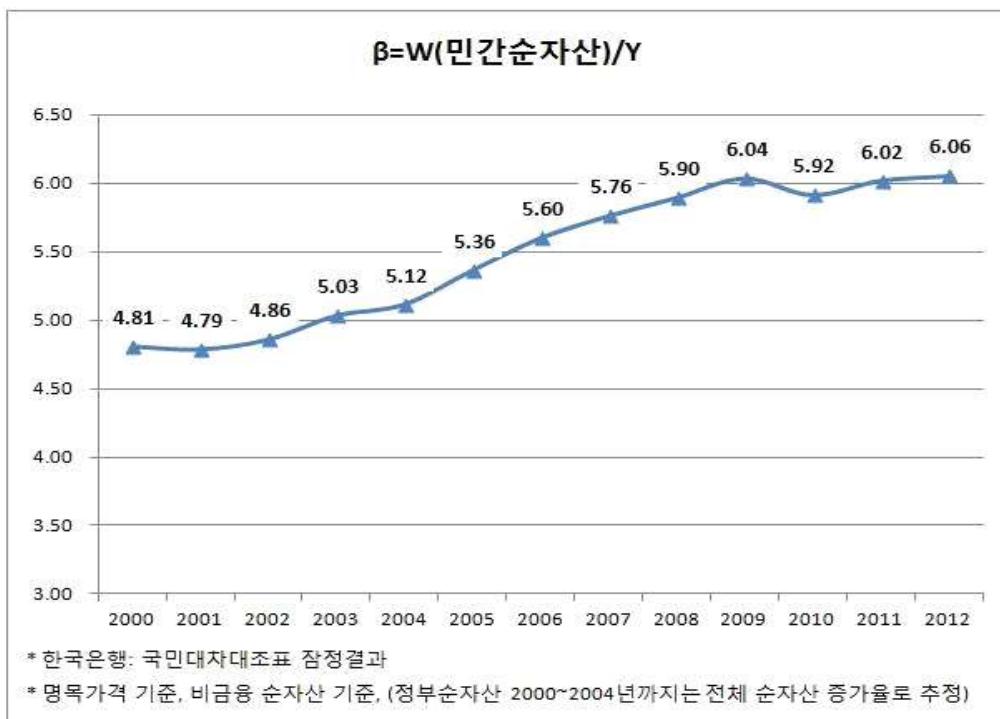
사실 주류경제학은 분배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보면 일정한 조건(실은 완전경쟁시장과 1차동차 생산함수라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조건)이 만족된다면, 각 생산요소에 돌아가는 분배 몫은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보울리는 실제로 이 분배 몫이 일정하다고 주장했고(“보울리의 법칙”), 쿠즈네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는 분배가 악화되지만 일정 단계가 지나면 개선될 거라고 예언했다(“역U자가설”). 이에 따라 성장에만 신경쓰면 그만이고 선불리 분배문제를 건드렸다가는 상황만 악화시킬 거라는 주장은 지금도 주류경제학의 신조에 속한다. 이런 주장은 케네디 대통령의 “밀물이 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는 정치적 구호로 표현됐고 지금도 한국의 성장론자들이 신봉하는 교의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피케티는 이 모든 주장과 구호를 단숨에 덮어버렸다. 그의 무기는, 어느 누구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는 장기 통계, 즉 역사적 사실이다. 그가 초점을 맞춘 수치는 “어떤 시점의 한 나라 순자산(피케티의 “자본”)을 그 해의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beta = W/Y$, W 는 민간순자산, Y 는 국민소득)이다. 예컨대 한국의 2014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순자산)를 국민소득으로 표현하면 몇 배나 될까를 표현하는 수치이다. β 에 자산수익률을 곱하면 그 해 자산소유자들이 가져간 몫이 될 것이다($a = r\beta$). 그는 이 회계적 항등식에 “자본주의

의 제1 근본법칙”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였다. 그는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지속적으로 크다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음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현재는 19세기 말과 같은 “세습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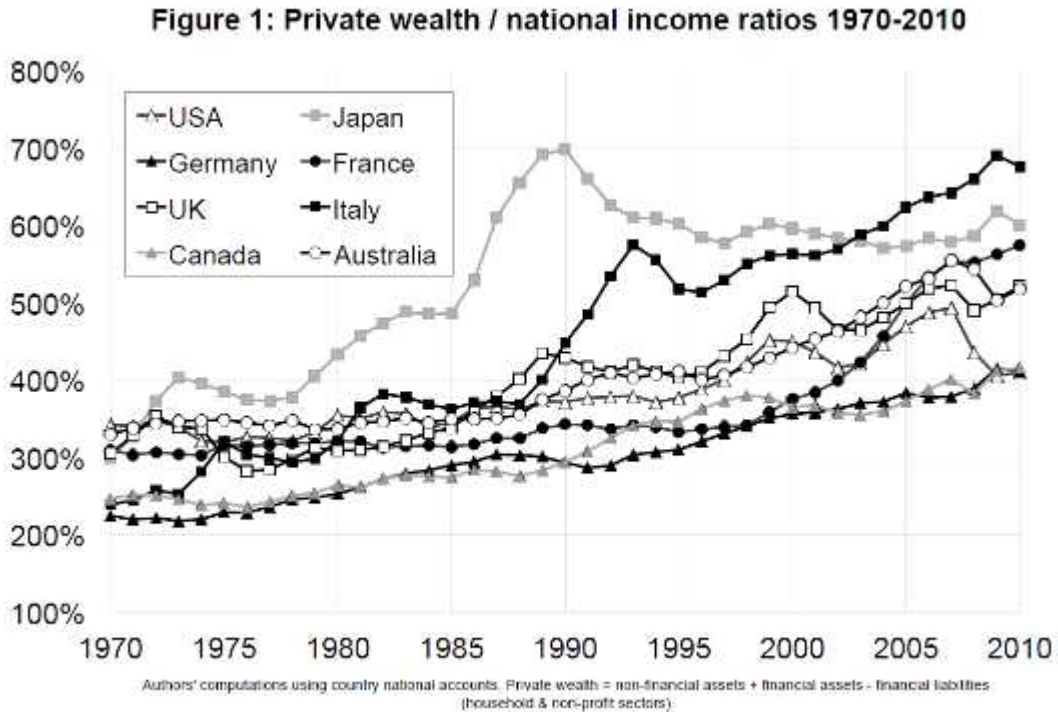
작년 5월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아주 중요한 보고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를 펴냈다. 이 두 기관은 국민계정 통계의 최고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국민대차대조표”(세계적으로도 이 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 밖에 되지 않는다)를 만들고 있다. 피케티의 자료 중 기능별 분배(자본 몫과 노동 몫의 분할) 역시 국민계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는 바로 피케티 지표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직접 나온 수치는 피케티 β 값의 근사치이다. 한은과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은 1경 630조.6조원으로 국내총생산(1,377.5조원)의 7.7배로 추계되었고 밝혔다. 이 수치를 피케티의 비율로 바꾸려면, 1) 분자의 국민순자산에서 정부의 자산을 빼서 민간 순자산을 계산하고 2) 분모의 국내총생산을 국민소득(국내총생산-감가상각+해외순수취소득)로 바꾸면 된다. 현재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부록과 한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로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추계가 가능하다. 그 결과가 [그림1]이다.



[그림1] 한국의 β (=민간순자산/국민총소득) 추이

하지만 현재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민간과 정부의 금융순자산의 시계열은 최근 몇 년 밖에 찾을 수 없다. 민간의 금융순자산은 현실적으로 0에 가까울 것이고(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제외하면 차입과 대출을 합하면 0일 것이다) 정부는 마이너스겠지(정부의 채권 발행만큼) 어쩔 수 없이 금융자산은 제외했다. 그러므로 금융자산까지 포함하면 β 값은 [그림1]보다 조금 더 커질 것이다.



출처: Piketty & Zucman, 2014, 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

[그림2] 세계 각국의 β 값 추이

[그림1]과, [그림2]의 2000년 이후 각국의 β 값 추이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수치는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이탈리아만 한국과 비견될 정도이다.

β 값이 크면 클수록 부의 집적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분배 상황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국민 모두 똑같은 양의 부동산과 생산자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산의 집중도도 선진국 수준이며(<표1>,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센서스자료가 아니라 세금자료로 계산한다면 영국 수준인 70% 정도일지도 모른다), [그림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최상위 1% 임금이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몫도 급증하고 있다.

<표1> 한국의 자산분배

구분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 점유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3년	0.605	-0.4	0.8	1.9	3.2	4.6	6.5	8.9	12.2	17.7	44.7
2014년	0.596	-0.2	0.8	2.0	3.3	4.8	6.6	8.9	12.3	17.8	43.7
전년차	-0.009	0.2	0.1	0.1	0.1	0.2	0.2	0.1	0.1	0.0	-1.0

출처: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은, 2015,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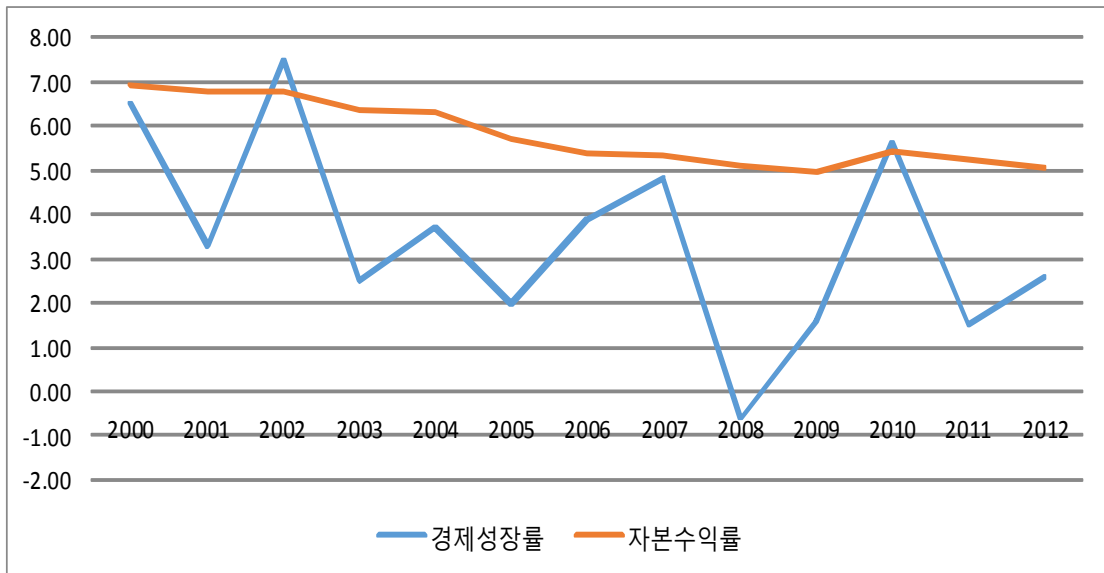
- 전전의 높은 수준, 전후의 급락, 1980년대 이후 급상승하는 영미형과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일본형으로 분화.
- 한국은 크게 보아 U자형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중엽 이후 영미형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출처: 김낙년, 2014, "한국의 소득불평등, 1933-2012:소득세자료에 의한 접근"

[그림 3] 우리나라 최상위 1%의 소득 비중

그렇다면 피케티가 강조하는 자산수익률(r)과 실질국민소득증가율(g)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적어도 선진국들도, 한국도 인구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g 가 점점 낮아질 거라는 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구한 r 과 g (한은 통계에서 실질국민총소득증가율을 택했다)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불평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있다.



[그림4] 한국의 자본(자산)수익률과 실질국민소득 증가율

그림4에서 보듯이 한국의 자산수익률은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자산분배가 점점 더 악화된다는 얘기다. 장기통계가 없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을 것이다. 해방 후 농지개혁을 한 데다 한국전쟁으로 지주계급이 거의 소멸했기 때문이다. 지주들에게 돈 대신 준 지가증권이 전시 인플레이션으로 휴지조각으로 바뀌었다. 지주계급이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까지 모두 장악한 동남아나 중남미와 비교할 때 동아시아가 경제성장이 빨랐던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70-80년대에는 높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자산 불평등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위의 그림들에서 확인한 것처럼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피케티가 책 곳곳에서 되풀이한 경구대로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운다”.

2. 사회적 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피케티는 현재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 자본세에 의한 재분배를 제시했다. 한편 ILO등이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시장에서의 분배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는 불평등의 시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한마디로 사회적 경제는 분배 상황에 직접 관여하며(1차 분배),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2차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 전자는 시장과의 관계에서, 후자는 공공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

최근 전 세계에서 사회적 경제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80년대 신자유주의 이래 사회적 양극화가 급진전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EU가 90년대부터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집중한 직접적 이유는 복지국가의 한계에 있다.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압력과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그리고 출산율 저하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이 모든 현실의 귀결로서의 전후 사회시스템의 위기는 사회/사회적 경제의 ‘부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첫째로 가난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둘째로 시장과 국가가 아닌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은 실업과 재정적자라는 면에서는 서구보다 낮지만 기본적인 복지도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불평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는 폴라니의 진단을 돌아보게 만든다. 시장만능의 정책으로 사회가 분열되면 이에 대응하는 운동이 발생한다. 결국 21세기 들어 더욱 활발해진 사회적 경제(운동)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완전한 파괴”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진보운동에 대한 반성이 일고 특히 “지역공동체”라든가 “생활정치”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면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상호성에 기초하여 공정성의 원리에 따라 연대라는 가치를 달성하도록 조직된 경제 형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제가 인간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원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역사 상 나타난 순서로 본다면 사회적 경제가 가장 오래된 시스템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하는 수렵채취시대에 신체적 능력으로 보아 가장 연약한 종에 속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협동의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사회적 딜레마(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일치하지 않아 이기적 인간이라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 공공재,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등이 유명하며 인간 사회는 사회적 딜레마로 가득차 있다)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타났

으며 이어서 인간간의 관계를 시장가격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원격과 익명의 교류를 가능하게 만든 시장이 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와 협동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노박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협동이 일어나는 5가지 조건을 추출했고(Nowak, 2006, 2012) 오스트롬은 전 세계의 공유자원(공동으로 이용하는 숲이라든가 강)관리 사례를 경험적으로 연구해서 8가지 규칙을 찾아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Ostrom, 2010). 협동조합연맹(ICA)의 7원칙은 1840년대 로치데일의 경험 이래 그 동안 쌓인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정리한 조직 운영원리이다. 아래 표는 이들을 병렬한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리와 경험에서 추론된 여러 차원의 지혜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2> 신뢰와 협동에 관한 규칙들

ICA, 협동조합의 7원칙	오스트롬, 공유자원 관리의 8가지 규칙	노박, 인간협동진화의 5가지 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와 공동이용 2. 민주적 의사결정 3. 참여 4. 자율 5. 교육 6.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7. 공동체에 대한 기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계확정 2. 참여에 의한 규칙 제정 3. 규칙에 대한 동의 4. 감시와 제재(응징) 5. 점증하는 제재 6. 갈등 해결 메커니즘 7. 당국의 규칙 인정 8. 더 넓은 거버넌스의 존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혈연선택 2. 직접상호성 = 단골 3. 간접상호성 = 평판 4. 네트워크상호성 5. 집단선택
	<p>+ 협동촉진의 미시상황변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소통 2. 평판 3. 한계수익 제고 4. 진입 또는 퇴장 능력 5. 장기 시야 	<p>+이후 행동/실험경제학, 진화생물학이 찾아낸 협동의 촉진수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통 - 민주주의 2. 집단정체성 3. 사회규범의 내면화

출처: 정태인·이수연, 2013

즉 이 표는 협동에 관한 인류의 지혜를 총집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협동조합의 제1원칙인 공유와 공동이용은 협동조합에 오스트롬의 8가지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그리고 참여와 교육)원칙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경

영에 비해 굵프고 중구난방이 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오스트롬과 노박의 규칙에서 협동을 촉진하는 필수적 수단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이 돈과 사람의 동원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제6원칙,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는 오스트롬의 더 넓은 거버넌스의 존재, 그리고 노박의 네트워크 상호성과 집단선택(집단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공유자원 관리의 핵심 주체인 지역공동체는 또한 혈연선택과 집단선택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니 협동조합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와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그 비중이 적으므로 시장가격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커지는 경우 시장가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자본을 공급하므로 시장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제품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교육과 보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경제는 가격이라는 면에서 시장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시장경제에 대해서 대안적 경영의 준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의 소비자 협동조합은 대단히 강해서 월마트나 까르푸, 테스코 등이 약탈가격 등을 통해 발붙이기 어렵다.

한편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하듯 강력한 이윤 동기는 여러 측면의 혁신을 이뤄낸다. 이에 비해 ‘연대동기’는 새로운 수요, 새로운 상품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에 뒤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일어난 기술 및 제도혁신을 사회적 경제로 수용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에밀리아 로마냐나 몬드라곤이 R&D나 교육을 강조하고 네트워크의 핵심조직으로 대학과 연구소를 세우는 것은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동행하거나 보완하는 존재이며 시장경제의 불평등화 경향을 억제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강한 지역으로 거론되는 스페인의 몬드라곤지방,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지역은 이들 나라 평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업률이 낮고 소득이 평등하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고용조정보다 임금조정으로 대응하고 기업내의 임금 격차도 일정한 비율(대체로 1:6)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소규모 중소기업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기업 간 임금 격차도 적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원리로 사회가 일원화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

는 ‘완전한 파괴’(플라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형성되고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서비스는 관계재(relational goods), 연대서비스(solidarity service), 친밀서비스(proximity service)로 불리는데, 이들 서비스는 시장경제나 공공경제가 제공하는 것보다 사회적 경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런 서비스는 수요자가 돈이 부족하거나 공급자의 수익률을 맞추지 못해서(수요곡선에서 균형 가격 아래 오른쪽 부분) 시장경제에서는 아예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공공경제는 관료적 속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전달에서 경직성으로 보이므로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사회적 경제가 더 유연하고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관한 각종 통계는 신사회경제가 사회적 서비스(교육, 보육, 의료, 노인 요양), 환경 관련 서비스(재생 에너지, 쓰레기 처리, 조림 등), 문화 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일종이었던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을 다른 의미의 PPP(People Public Partnership), 또는 CPP(Citizen Public Partnership)으로 바꿔낼 수 있다. 또한 독일의 2차 노동시장의 역할이 그렇듯, “사회적 경제영역의 잠재적 고용 능력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주제”(Birkholzer, 2005)이다. 사회적 경제는 정의상 일자리의 창출에 적합한 것이다.

즉 사회적 경제는 그 자체로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에 고유한 연대의 원리로 인해 노동소득 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자산 소유로 인해 자본과 노동간의 소득 격차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자본’을 창출함으로써 계약 작성과 이행에 관련된 거래비용을 축소시키고 사회 안의 다양성을 촉진해서 혁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는 민주주의를 경제영역에서 실천한다. 민주주의야말로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도설계를 잘 하면 공동체, 시장, 그리고 국가는 서로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Bowles & Gintis, 2002)”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는 두 영역과의 보완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불평등을 일정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며 공공경제와의 관련 속에서 고용과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임금 불평등 뿐 아니라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낙년, 2014, “한국의 소득불평등, 1933-2012:소득세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사학.
- 이정우, 2014, “토마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어떻게 볼 것인가?”, 글항아리.
- 정태인, 이수연, 2013,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은, 2015,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 한국은행, 통계청, 2014,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
- Bowles,S., Gintis,H.(2002),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Governance, The Economic Journal, 112, Nov.
- Birkholzer,K.2005, Development and Perspectives of the Social Economy or Third Sector in Germany, meimo.
- Nowak, M. 2006, Five Rule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V314, December.
- Ostrom,E.,2010,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 AER.
- Pikett.y, T.,2014, Capital in the 21st Century, Havard Univ. Press
- Piketty & Zucman, 2014, 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

비매품

제1기 폴라니 학교 “폴라니와 사회적 경제” 교육자료집

발행일: 2015년 7월 5일(e-book)

발행인: 박진도

편집인: 정태인

발행처: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Tel. 02-383-3547 Fax. 02-383-3458

E-mail. kpolanyiasia@gmail.com

Homepage. www.kpia.re.kr

이 저작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전재와 복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반드시原作者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Karl Polanyi Institute Asia